

발 간 등 록 번 호

11-9800003-100015-10

2025년 정책현안 연구과제

한국 국방안보연구 70년 검토와 평가

책임연구원 | 손경호 교수(국방대학교)

연구원 | 노영구 교수, 기세찬 교수(국방대학교), 문준호 교수(육군3사관학교)

연구보조원 | 문수빈, 강태윤, 신민석, 백중현(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5년 정책현안 연구과제

한국 국방안보연구 70년 검토와 평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2장 국방대 창설과 안보연구의 태동기(1955-1969)

요 약 14

Ⅰ. 서 론 16

Ⅱ. 국가안보 중심기구의 출범과 발전의 궤적 18

Ⅲ. 국방안보연구 추이 분석과 역사적 함의 33

Ⅳ. 결론 : 포괄적 안보논의 재활성화의 고대 52

참고문헌 54

제3장 국제 환경과 국내 정치의 급변기(1970-1987)

요 약 58

Ⅰ. 서 론 60

Ⅱ. 시대적 상황 62

Ⅲ. 연구 추세 65

Ⅳ. 이론적·정책적 함의 및 결론 85

참고문헌 88

제4장 탈냉전과 다양한 국방안보 위협의 대두기(1998-2007)

요 약	92
Ⅰ. 서 론	94
Ⅱ. 노태우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1988-1993)	96
Ⅲ. 김영삼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1993-1998)	101
Ⅳ. 김대중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1998-2003)	110
Ⅴ.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2003-2007)	117
Ⅵ. 맺음말	127
참고문헌	129

제5장 다변하는 국제환경과 불확실성의 증대기(2008-2025)

요 약	142
Ⅰ. 서 론	144
Ⅱ. 시대적 상황	145
Ⅲ. 연구 추세	146
Ⅳ. 이론적·정책적 함의	169
Ⅴ. 결 론	171
참고문헌	173

제6장 결 론

176

요 약

국방대학교가 1955년 창설된 이래 오늘날까지 안보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공헌한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이 두 분야에서 기원을 형성하였다는 점만이 아니라, 국방대학교의 역사에는 한국 사회가 겪어 왔던 안보 위기와 불안에 대한 평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방대학교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에서 안보 분야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는 국방대학교가 지난 70년 동안 국방안보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이바지했던 역할을 규명하고 그 주된 주제와 내용, 그리고 경향과 특징이 분석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출범 직후부터 국방대에서는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사회제분야를 포괄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국방안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당시 미국 국방대의 제도 차용과 미군의 예산 지원도 있었으나, 분단 체제의 상존 위기 속에서 국방에 연결된 국정 전 분야의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었다. 당시 국방대 과정의 수료는 군에서는 고급 장교의 필수 교육으로 여겨졌고, 정부에서도 주요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연구 성과 측면에서 국방대에서 발간한 산물들은 중요한 논구의 대상이다. 국방안보연구의 태동기 발행된 『국방연구』, 『대전략』, 안보과정 및 합참대 학생 논문은 한국 국방안보학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국방연구』는 국가안보정책, 군사전략, 국제정세, 경제·사회 문제를 포괄하며 국방안보연구의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대전략』은 해외 답론을 번역·소개함으로써 국제적 시야를 확장하게 만들었고, 실질적인 연구자료로서의 활용성도 높았다. 안보과정과 합참대 학생장교들의 논문은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를 살펴보거나, 실무에서의 정책 마련에도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광의적 국방 인식에 기초한 다층적 접근은 제약된 이념의 시공간에서 답론을 풍부하게 하였다.

1970년대 초 국방대학원의 『국방연구』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에 대한 분석, 베트남전쟁의 특색 분석, 중·소분쟁과 한국의 통일문제,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조된 데탕트의 물결을 한국 사회에 설명하였다. 이어서 『국방연구』는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방위산업의 개념과 국내 자원과 공업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발전 방향, 그리고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실체를 설명하는 연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논문 번역집인 『대전략』은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베트남의 역사, 이에서 파생된 미국의 라오스 공세, 그밖에 동남아 국가들을 분석하여 미국의 정책 변화가 동남아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안보문제연구소는 1978년부터 국방부 정책과제 혹은 수시 부여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의 대부분은 카터가 제기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과 관계있는 과제였다. 1979년부터 안보문제연구소가 수행기 시작한 기초과제는 주로 장기적인 연구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요 국가의 국방정책으로 미국, 일본, 소련을 다루어 연구하였고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신냉전으로 변해가는 국제정세 가운데 북한의 군사정책과 북한이 제의한 군축을 연구하였다. 특히 군사문제에 집중하였으며 전쟁과 직접 연관된 잠재적인 군사능력,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평가 방법, 남북한의 군축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북한의 사회 구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도 11개의 주제 가운데 5개 주제가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신냉전이 발생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소군비경쟁을 시작하면서 학교의 연구 기조는 바뀌었다. 『국방연구』는 미국의 재무장 정책,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정책과 대 아시아 정책은 꾸준한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다. 그밖에도 『국방연구』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 해상 교통로 확보를 주제로 한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방연구』는 북한에 발생한 지도자 승계 문제를 설명하고, 북한이 자행한 테러리즘을 분석하였고, 안보 상황에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국방안보 분야에서 20세기 후반(1988)에서 21세기 초반(2007)에 걸친 20년간의 기간은 이전에 비해 매우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시기에 나타난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외교, 기술 등 여러 분야의 혁명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961년 5.16쿠데타 이후 1987년까지 지속된 2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 정권의 종식과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등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던 동서 냉전이 1980년대 후반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안보 및 국방의 양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지성사적인 변화와 정보통신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 양상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와 편편적 학문의 성격을 띠었던 국방안보 분야 연구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분단상황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논리나 사실도 재점검되었고 새로운 자료도 많이 발굴되었다. 아울러 관련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만이 아닌 일반 연구자들도 국방안보 분야 연구에 참여하여 새로운 연구를 제출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의 과정에서 새로운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한 연구자 집단이 국방 및 안보정책 마련에 참여하는 등의 양상은 국방 안보분야 연구자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게 된다. 지성사적으로도 거대 담론 중심의 연구가 아닌 다양하고 미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국방안보 분야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 예를 들어 개인, 여성 등에 대한 검토도 나타났다. 특히 이전의 군사안보 중심의 현실주의적 입장과 다른 대안적 국방 안보연구에 대한 이론이 소개되는 등 연구 시각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2008년부터 분석된 학술·정책 연구는 크게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분야로 나뉜다. 외교 연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북핵·6자회담에서 시작해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경제안보까지 주제가 확장되었다. 국방·군사는 억제전략·작전개념 중심에서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장거리 정밀타격, AI·사이버·우주 전력, 방산 수출 전략으로 발전했다. 정보 연구는 전통적 첩보에서

출발해 2020년대에는 AI·빅데이터 기반 ISR, 위성·사이버 억제전략으로 확장되었다. 정치·사회 연구는 양적으로 적지만, 안보정책의 국내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다루며 정책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경제 연구는 대북제재·남북경협에서 공급망·반도체·배터리 같은 전략산업 중심의 경제안보 논의로 확대되었다. 과학 연구는 무인체계, AI, 사이버, 우주기술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군사과학연구와 국제공동연구에서는 AI·사이버·우주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와 방산 전략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는 국민의 위협 인식과 동맹 선호를 추적하여 정책 수용성·사회적 신뢰가 안보정책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 주었다.

국방대학교가 걸어온 국방안보연구 70년을 돌아볼 때 학교의 정체성과 내적 효율성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었음을 관찰하게 된다. 학교가 분명한 국방안보연구 기관으로 고유한 역할을 다하던 시기 학교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이 학생과 정부 및 한국 사회를 상대로 한 기여에서 고도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학교 내에 교수들의 연구 역량이 결집하고 축적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의 학술지와 보고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학교 안에 국방과 안보 분야 정책 연구를 위한 요람의 기능이 존재하였다. 이 요람에서 산출된 주옥같은 연구들이 한국 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국방대학교가 걸어왔던 70년의 자취를 돌아볼 일이다.

제 1 장

서 론

I. 연구목적

국방대학교는 1955년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고위 공직자들의 종합 안보 교육을 위해 국가적인 과제로 창설되었다. 한국 정부는 6·25전쟁을 겪으며 전쟁은 단순히 군인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는 물론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하여야 함을 깨닫고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교육체계로 자리 잡은 통합 안보 교육 체계를 국내에 정착시켰다. 국내에 안보 교육을 위한 기반과 토대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미 군사고문관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의 체계를 구성하고 첫 교육생들을 교육하여 자충 교수요원으로 확보한 뒤 군과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교육을 시작하였다.¹⁾

국방대학교는 단순히 안보 교육만을 실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국가안보에 관한 관점과 지식을 제공하고 안보 담론 형성을 주도하였다. 초창기 교수진들은 부족한 교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선진국의 안보 관련 서적을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면서 국내 학계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비중 있는 연구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특히 안보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이 전후 직면한 한국 방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국방대학교는 시대적으로 안보에 가정 앞선 이론과 실천적 제언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국방대학교는 또한 1972년 안보문제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안보 분야 전문 연구기관을 선보였다. 체계적인 안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 속에 출범한 안보문제연구소는 교내 교수를 인력풀로 하여 국방부의 싱크 탱크로서 기능하며 안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제 간 접근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문 학술지 발간과 세미나 및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국방대학교가 지닌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고리는 대학의 역량을 향상시켜 1980년대 초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2000년대에 박사학위 교육을 시작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1) 학교의 태생은 국방대학이었으나 법적인 요구에 따라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그리고 국방대학교로 변하였다. 각 연구는 시기별로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방대학교가 1955년 창설된 이래 오늘날까지 안보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공헌한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이 두 분야에서 기원을 형성하였다는 점만이 아니라, 국방대학교의 역사에는 한국 사회가 겪어 왔던 안보 위기와 불안에 대한 평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방대학교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에서 안보 분야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는 국방대학교가 지난 70년 동안 국방안보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이바지했던 역할을 규명하고 그 주된 주제와 내용, 그리고 경향과 특징이 분석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이며 유일한 최고위 국립 안보 종합 교육 및 연구 기관인 국방대학교가 지난 70년 동안 수행해 온 국방안보연구를 분석한다.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국방안보연구가 했던 역할을 분석하고 그 주제와 내용을 확인하며 지배적인 연구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대학교에는 개교 이래 안보과정에 입교했던 군과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 및 정책보고서가 보관되어 있다. 이는 당시 심각했던 한국의 안보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제언들이다. 시기별로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고민했던 안보 문제와 방향을 연구하려면 안보과정의 논문과 정책보고서는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방대학교에 학위과정 교육의 문이 열리면서 귀중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²⁾ 일반 대학의 학위 논문과 달리 국방대학교의 석·박사학위 논문은 입학 대상인 현역 장교 혹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민하던 문제들을 학문적인 엄밀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고유한 방향성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들 학위 논문은 많은 경우 각 군이 고민하던 정책적 문

2) 1981년 석사학위 교육 개시, 2002년부터 야간 석사 운영, 2008년 박사학위 교육 개시.

제와 전략적 난제를 다루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와 지도 교수들의 전문성이 배합된 학위 논문은 때로는 현장과 정책 부서에 중요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젊은 장교들과 공무원들의 장기간의 학문적 훈련과 체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관점에서 학위 논문은 안보과정 논문과는 다른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된다.

국방대학교의 교수들은 학교의 사명에 걸맞게 안보에 관한 학술연구, 군사전략 및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방대학교는 1958년 『국방연구』를 출간하였으며 국내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해 현재까지 대표적인 안보 분야 전문 학술지로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학교는 전략 연구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이론가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번역월보』를 1959년 4월부터 발간하여 1959년 8월부터는 『대전략』으로 제목을 바꾸어 1973년까지 발간하였다. 한편 학교는 1972년 안보문제연구소를 설치하여 학교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³⁾ 이에 따라 설치된 전문 학술지 관리를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며 1996년부터 영문지를 발간하여 처음에는 *KNDU Review: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로, 2006년부터는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로 명칭을 바꾸어 권호를 이어 발간하고 있다.

한편 연구소는 해외의 안보 분야 전문 서적의 소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74년부터 안보총서 시리즈를 현재까지 발간하고 있다. 연구소는 과거의 실적에만 안주하지 않고 국방과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비교적 최근 시기인 2007년부터 『군사과학연구』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학교의 산물은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했던 당시 안보 상황과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을 설명해 주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아울러 연구소가 대내외 필진을 구성하여 발간하는 평론지인 『안보현안분석』 및 *RINSA FORUM*은 짧은 발간 주기로 인해 적시성이 강조된 매체로 현안 안보 이슈가 무엇인지 잘 드러내고 있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또한, 안보문제연구소가 국방부의 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싱크 탱크로 기능

3)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14조, 2022.12.6.

하였기에 1978년부터 연구소의 센터장들은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대통령실의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고 보고해 왔다. 시기별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시 과제 혹은 부여과제로 불리는 이러한 국방부의 연구 의뢰 과제들은 한국이 처한 중요하고 긴급한 안보 문제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제들은 당시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1979년부터 연례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연구 소요를 확인하여 교내 역량 있는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기초과제 혹은 정기과제로 발주하여 수행하여 왔다. 이에서 연구된 내용들은 안보과정이나 학위과정 교육에 반영되어 현장의 문제와 학교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체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기초과제 혹은 정기과제 보고서 역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국방대학교는 한국 사회와 안보 문제를 매개로 소통하며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풍토를 만들고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안보 문제 연구 기능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였다. 사회와 안보를 매개로 소통해 온 노력은 1989년부터 실시된 국내의 가장 오래되고 공신력 있는 안보 의식 조사 보고서인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를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구소가 한국의 학자들에게 안보 문제 연구의 장을 열어 준 통로인 안보학술 진흥과제는 1990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도 학자들의 소중한 안보 연구 입문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유능한 학자들이 안보 문제에 접하고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울러, 연구소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국제적 연구자들과 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국제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성공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연구소의 한국 사회에 대한 공헌 및 국제 연구자들과의 연계 노력 또한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연구는 두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연구 대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학교가 그동안 수행해 온 국방안보연구의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작업은 연구소가 출간한 『안보문제연구소 50년사: 1972-2022』에 수록된 연구물에 안보과정과

학위과정의 논문 및 정책보고서를 추가하되 연구자들의 연구 편의를 위해, 가능할 경우 주제어, 초록 및 온라인 링크 등 적절한 항목을 추가하여 보강하는 형태로 수행한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연구 대상 자료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연구 영역과 주제를 특정하며 전체적인 연구 경향과 특징을 정리한다. 이 작업을 통해 연구 대상 자료의 연구 추세를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종합되면 그동안 수행되어 온 국방안보연구가 지닌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최종 상태는 1955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대학교가 발간한 연구물을 4개의 큰 시기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교수의 보고서(기초, 부여과제 등), 연구소 발간물, 학생(안보, 학위과정) 논문 및 정책 보고서 순으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4개 시기별 연구 추세를 분석한 보고서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들이 연구원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후 연구원이 연구 경향 및 특징을 분석하여 연구 추세를 판단하며 해당 시기 국방안보연구가 지닌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시기 구분은 아래와 같다.

연구를 위한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다. 학교 창설로부터 1969년까지를 첫 시기로 정한다. 이 시기는 전후 냉전 구조 가운데 국가적 생존을 위한 반공과 군사 안보 확보에 전념하였던 시기이며 내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정착하였던 시기이다. 다음 시기는 1970년부터 1987년까지이다. 세계적으로 데탕트가 진행되었고 국내적으로 북한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신냉전이 도래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제3공화국의 몰락과 신군부의 등장,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이다.

이어진 시기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이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종식하였고 국내적으로는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면서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완화하고 북방외교가 추진되었고 이어서 남북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북한이 핵위기를 조성하던 시기였다. 마지막 시기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다가 극적인 남북회담 및 북미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세계적으로

는 21세기 들어 등장한 신안보 이슈가 주목받다가 다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 시기이다. 전체적인 기간의 간행물 목록은 시기 구분 없이 작성하며 연구 추세 분석은 네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

연구 시기별 특성에 따라 초기와 2기의 경우 학교 창설과 제도적 변화 등이 다소 많은 연구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며 3기와 4기의 경우 간행물 분석에 중점을 두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시기에 따라 시대적 상황과 이에 조응한 학교의 노력을 조명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다. 또한, 시기별 간행물에 대한 분석은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으로 구분하여 군사전략, 국방운영, 한미동맹, 국방개혁, 방산 등으로 안보 분야 주제에 따른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내용을 평가한다. 이후 이에 따라 4개 시기별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방안보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항목

구분	보고서		정기발간물						연 단위 발간물			학생논문			
	기초	정책	국방연구	영문지	대전략	안보현안분석	RINS AFO RUM	군사과학연구	안보총서	범국민안보의식조사	안보학술진흥사업	국제공동연구	안보과정	합참대과정	학위과정
대상															
요소	제목, 저자, 주제어, 초록, 온라인 링크, 범국민안보의식조사는 문항 변동 사항과 『정책대안연구』 기록, 대전략과 영문지는 각각 『번역월보』와 KNDU Review 포함)														

Ⅲ.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안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해 온 기관의 성과와 역할을 분석하며 동시에 한국 사회가 겪어 왔던 안보 위기의 궤적을 추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분석하는 연구로 국방대학교의 연구물을 분석하는 독특한 방법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방안보연구의 산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국방대학교가 수행해 왔던 역할이 명확하게 이해되며 학교 교육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일반 대학 및 연구소에는 향후 국방안보연구의 함의가 확산할 것이며, 국방부에는 산하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운용을 위한 소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사회의 안보 분야 연구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새로운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를 계기로 국방기관사(史) 연구의 출현을 전망한다.

제 2 장

국방대 창설과 안보연구의 태동기 (1955-1969)

육군3사관학교 문준호

요 약	14
I. 서 론	16
II. 국가안보 중심기구의 출범과 발전의 궤적	18
III. 국방안보연구 추이 분석과 역사적 함의	33
IV. 결론: 포괄적 안보논의 재활성화의 고대	52
참고문헌	54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대가 창설된 1955년부터 냉전체제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1969년까지 분석시기로 설정하여, 국방대에서 실시한 바 있는 국방안보 관련 제반 학문적 성과물을 검토하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냉전체제 속에서 발발한 6·25전쟁 이후 급속한 병력 증강은 외형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군사전략·기획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장교단 교육의 부재로 국가안보정책 수립의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군과 정부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의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국방대가 창설되었다.

출범 직후부터 국방대에서는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사회제분야를 포괄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국방안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당시 미국 국방대의 제도 차용과 미군의 예산 지원도 있었으나, 분단 체제의 상존 위기 속에서 국방에 연결된 국정 전 분야의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었다. 당시 국방대 과정의 수료는 군에서는 고급 장교의 필수 교육으로 여겨졌고, 정부에서도 주요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대 교육에 있어 특기할 점은 교육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개인연구를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보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보고서 작성을 통한 논리적 표현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진의 지속적 지도와 분임연구회의 비판적 토론은 집단지성을 촉진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전문성과 정책적 실무 능력 배양에 기여하였다.

한편 학문 탐구에 있어 자유를 보장하는 파격적 조치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개인연구 천착을 위한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학술적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서 국방대 선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또한 국내외 군사기지 및 산업시설, 해외 시찰은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현실적 제언으로 이어졌다. 최종 논문

은 정부, 각 군, 각 부처에 배포되어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는 국방대 교육이 학술적 성과와 정책적 실효성을 결합한 선진적 안보 연구체제로 작동되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연구 성과 측면에서 국방대에서 발간한 산물들은 중요한 논구의 대상이다. 국방안보연구의 태동기 발행된 『국방연구』, 『대전략』, 안보과정 및 합참대 학생 논문은 한국 국방안보학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국방연구』는 국가안보정책, 군사전략, 국제정세, 경제·사회 문제를 포괄하며 국방안보연구의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대전략』은 해외 담론을 번역·소개함으로써 국제적 시야를 확장하게 만들었고, 실질적인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성도 높았다. 안보과정과 합참대 학생장교들의 논문은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를 살펴보거나, 실무에서의 정책 마련에도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광의적 국방 인식에 기초한 다층적 접근은 제약된 이념의 시공간에서 담론을 풍부하게 하였다.

창설 당시 국방대는 단순한 군사교육기관을 넘어 국가적 수준의 사고를 함양하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엘리트 양성의 장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교육과 연구 성과는 군사력 건설과 사회 기반 강화의 병행, 경제와 안보의 통합, 동맹 의존과 자주 국방의 균형, 비정규전과 복합적 위협 대응 등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경쟁, 사이버·우주 영역으로의 전장 확대, 경제·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적 안보 환경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국민 안보의식 제고, 산업정책과 안보의 연계, 동맹과 자주 역량의 균형, 회색지대 위협 대응과 같은 담론은 이미 1950~60년대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포괄적·선제적 안보 개념은 범주의 무리한 확장으로 실천력이 약화되거나 군사적 시각이 정치·사회 영역을 과도하게 규율하여 민주적 다양성을 제약할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경제·사회 정책이 안보 논리에 종속되거나 위협이 과잉 인식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한 가운데, 현대의 국방안보연구는 과거 국방대 연구의 성과와 교훈을 성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불확실성이 증대된 안보 환경에 대응할 학문적·정책적 전략을 선제적으로 발전시켜 국방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적 지혜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는 남북이 별도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냉전적 이념대결의 구도를 형성하였다.¹⁾ 체제경쟁의 격화에 따라 발생한 6·25전쟁으로 민족과 국가의 급격한 단절을 경험한 ‘한국민’은 적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가일층 강화되었고, 국정운영에 있어 국방은 사회 제 부문에 우선하는 핵심으로 분야로 인정받았다.²⁾

정전협정과 군사적 대치에 따른 긴장은 대기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배경과 명분으로 작용하였다.³⁾ 특히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체제를 갖춘다는 이유로 병력 증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⁴⁾ 단기간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 따라 국군은 외연상 위용을 갖추게 되었지만, 규모가 질적 능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다.⁵⁾ 오히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고속 승진한 장교단의 미비한 군사적 식견은 역할기대와 능력 발휘의 불균형에 따른 폐해를 야기하였다.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한 군부는 현직 장교단의 직무 역량을 일신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사교육에 주목하였다. 미국 역시 동맹국 군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사관학교 체제를 도입하고,⁶⁾ 도미유학을 활성화하기도 하였다.⁷⁾ 그러나 국가적 수준에서 국방정책을 고안해야 할 고위급 장교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쟁 지도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의 국방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 국방대학교는 시기별로 국방대학,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국방대학교로 개칭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 맥락에서 해당 기관을 지칭할 경우에는 ‘국방대’라는 표현을 활용하였고, 당대의 상황에서 다루어질 때는 각 시기의 공식 명칭(국방대학,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을 활용하였다.

1)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서울: 창비, 2009), p.66.
 2) 문준호, “한국 초기 報勳제도의 형성(1948-1963)과 ‘4.19의거’의 정치적 포섭”,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p.25.
 3) 휴전 이후 복구/정비기의 국방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방군사연구소, 『國防政策變遷史』(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85-109.
 4) 이미숙, “6·25전쟁기 미국의 한국군 증강정책과 그 특징”, 『군사』 제67호 (2008).
 5)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60년사(1955~2015)』(서울: 국방대학교, 2015), p.34.
 6) 陸士三十年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六軍士官學校三十年史』(서울: 육군사관학교, 1978).
 7) 도미유학을 경험한 군사 엘리트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노영기, “5·16쿠데타 주체 세력 분석”, 『역사비평』 제57호 (2001) ; 도진순·노영기, “군부엘리트의 등장과 지배양식의 변화”,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서울: 선인, 2004).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고 군 보수 교육기관인 국방대학 창설로 이어졌다.⁸⁾ 해당 기관은 군사력을 비롯한 전 국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국방기획 수립, 현대전쟁 연구, 민간 행정부처와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설립 목적으로 삼았다.⁹⁾ 이로써 전쟁 경험이 배태한 총력전적 사고를 구현할 고위급 중심의 교육 및 연구의 장이 마련되었다.

전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이해에 있어 국방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논제로 한 고찰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관련 연구가 적박한 가운데 한반도 냉전체제의 연속을 민군관계의 전도로 파악하며 국방대를 거론한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¹⁰⁾ 이는 관계자들의 회고록을 통하여 국방대 과정을 통해 군부가 국가 경영에의 관심과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기에 연구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방대의 실제 활동은 분석의 범주로 삼지 않아, 기관의 본질적 이해는 추가 논증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는 국방대 설립부터 5·16군사정변까지 기관의 정초를 살펴본 연구도 등장하였다.¹¹⁾ 해당 연구는 국방대 창설 배경에 관한 역사적 분석과 당시 일부 구성원들이 포지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을 살폈다는 점에서 선구적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을 염두에 둔 전사로 국방대 창설을 조명하는 명징한 목적은 오히려 당대 이루어진 국방안보연구 성과의 결과를 군 정치적 개입으로 획일화한다. 또한 심층적인 분석과는 별개로 소규모 자료 활용이라는 점에서도 다각적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전술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국방대의 창설 및 발전사와 연계하여 제반 학문적 산물에 관한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당대의 국방안보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시론적으로 추출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 국방대 목적 및 정체성, 교육과 연구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국방대 역사를 중

8) 國防大學. 『國防大學이란?』 (서울: 國防大學, 1956).

9)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 (서울: 國防大學院, 1987), pp.1-2.

10) 허은. 『냉전과 새마을 :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 (서울: 창비, 2022).

11) 김지훈. “한국군 국방대학 창설과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이론의 형성”. 『역사와현실』 제131호 (2024).

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나온 연구 성과의 토대를 이해하는 작업으로 필요조건적 성격을 지닌다. 3장에서는 간행물들의 출간 배경 및 목적, 내용 및 추이를 맥락적으로 파악하며, 연도별, 권호별로 경향성을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당대 국방안보연구가 지니는 의미를 현대에 조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언을 부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시종은 1955년부터 1969년까지로 한다. 해당 기간은 국방대학교가 창설된 시점부터 국제적 냉전질서가 완화되기 직전까지이다. 연구 주체와 대상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의 발족과 안보 영역에서의 세계사적 조류는 단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주요 자료는 국방대학교에서 발행한 주기별 기념 역사(30·50·60년사)와 『국방연구』, 『대전략(번역월보)』이다. 또한 국방대 안보과정, 합참대 학생들의 개인연구 성과도 분석의 범주로 삼았다. 이외에 국가발행 문서와 신문자료도 참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국방연구 태동기에 있어 국방대의 주도적 역할이 구명되고, 향후 지속될 연구에 긍정적 반향이 있기를 기대한다.

II. 국가안보 중심기구의 출범과 발전의 궤적

국방대에서 발행한 여러 논고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임무, 교육운영에 관한 포괄적 접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본격적으로 국방 분야에 대한 체계를 개척하는 초기 단계이자 국방안보연구의 태동기이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는 보다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안보 중심기구로서 출범한 국방대의 발전 궤적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국방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기관 설립은 1954년 12월 한국군과 주한 미 군사고문단과의 공동연구에서 시작되었다. 1955년 4월 미 8군사령부에서 가칭 “국방대학” 창설에 관한 예비 회의가 있었는데, 창설에 요구되는 연구단의 미국 파견과 예산과 자재의 지원을 논의하였다.¹²⁾ 이후 국가차원의 대전략 교육기관 발족의 필

12) “國防大學 設置키로 韓美軍事 代表間에 討議”, 『경향신문』, 1955.4.27.

요성을 절감한 손원일 국방부 장관은 1955년 5월 15일 ‘국방대학창설위원회’를 설치하였다.¹³⁾

이러한 움직임에 관하여 당시 언론은 “눈앞의 적을 막아내기 위한 전투태세만이 아니라 자손만대를 위한 방위 백년대계가 뚜렷이 세워진 것이다.”라며,¹⁴⁾ 국방대학 설치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 찬동하였다. 신속한 업무 진척으로 1956년 개교를 위한 제반 설립 준비를 하였고,¹⁵⁾ 국방대학은 동년 8월 15일에 창설되었다.¹⁶⁾ 운영 예산, 부지, 장비, 편제 등에 관한 행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설치법안의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기구를 발족한 것은 업무 추진의 당위성이 충분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56년 국방대학에서 발간한 『국방대학이란?』 책자에 따르면 국방은 “국가의 독립과 그 영창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국방대학은 “국방부의 소속”이라기보다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국가방위대학”으로서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학 명칭에 합치되는 “민족의 상징이고, 광휘있는 전통의 계승자이며 유구한 역사의 창도자”가 될 것을 장교들에게 주문하기도 하였다.¹⁷⁾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대학은 국방 분야를 교육 및 연구의 중점으로 하지만, 기실 국책 수행을 위한 인재를 기른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발된 장교 및 공무원들은 ①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 정치, 경제 및 사회심리적 제 요소, ②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문의 국방과 관련된 제 문제, ③ 건전한 국가안전보장정책의 발전, ④ 3군의 발전과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국방계획을 연구하도록 하였다.¹⁸⁾ 이는 군사적 의미에서의 방위 학습에 국한되지 않고 비군사적 요소까지 총체적으로 망라한 광의의 국가안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국방대학의 지향을 보여준다.

13) 국방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國防大學校 50年史』 (서울: 국방대학교, 2005), p.4.

14) “우리의 防衛陣 日益 굳건 前後方에 鐵石같은 布陣”, 『조선일보』, 1955.5.18.

15) “國防大學 設立 準備”, 『경향신문』, 1955년 6월 6일 ; 15) “來年 一月 開校 國防大學”, 『조선일보』, 1955.6.6.

16) 국방부. “일반명령 제 231호”, 1955년, 8월 10일(국방대학교50년사 편찬위원회. 『國防大學校 50年史』 (서울: 국방대학교, 2005), p.5에서 재인용).

17) 國防大學. 『國防大學이란?』 (서울: 國防大學, 1956), pp.36-38.

18) 국방대학교50년사 편찬위원회. 『國防大學校 50年史』 (서울: 국방대학교, 2005), p.9.

실제로 당시 군의 예산 비중과 인적 규모를 두고, 양영주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을 보더라도 총예산의 7할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국방부가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인원으로 두고 본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백만대군이라는 숫자를 쥐고 있는 까닭에 국방부의 모든 처사가 잘되나 못되나 하는 것이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심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며,¹⁹⁾ 공론장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지배적 위상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국방대학 2대 총장으로 보임한 박임항 소장은 개교를 위한 실질적인 처사직을 담당하였는데, 미 국방대 시찰을 위한 도미가 첫 일정이었다.²⁰⁾ 이후 설립지 선정, 미 고문관 임명, 1956년 교수요목 작성, 예규 및 규정 마련, 국방대학교설치법(안) 국회상신 등 일련의 준비를 거쳤다.²¹⁾ 1956년 4월 2일에는 제1기 38명에 대한 입교식을 거행하였다. 해당 자리에서 손원일 국방부장관은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3군의 연합전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입교생들은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대학의 기간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발되었다.²²⁾ 한편 다수의 미국 장성들의 입교식 참여와 고문관의 발전 축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아,²³⁾ 창설기 미국의 선도적 역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기생 교육 와중에도 박임항 소장은 유병현 교수부장을 대동하고 1개월간 미 국방대를 재차 시찰하였다.²⁴⁾ 이는 미8군사령관 화이트 대장 및 군사고문단장 하모니 소장이 내방한 이후 내려진 결정이었는데,²⁵⁾ 신속하게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과의 합의된 조치로 추정된다. 이후 5개월 동안 국방계획 및 연합작전에 관한 학술연구를 마친 1기생은 수료식 거행 직후부터 기간 간부로 근무하게 되었다.²⁶⁾ 19주의 교수요원 양성과정을 통한 자체적 교원 수급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9) 국회사무처. 「(제22회 제3호) 예산결산위원회속기록 제3호」, 1956.7.13., p.10

20) “朴林恒 少將 視察次 渡美”, 『조선일보』, 1955.10.26.

21)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473.

22) “國防大 一期生 來二日에 入校式”, 『동아일보』, 1956년 3월 22일.

23) “入校式 盛大히 舉行 最初로 設立된 國防大學”, 『경향신문』, 1956.4.3.

24) “朴林恒 少將 渡美”, 『조선일보』, 1956년 5월 15일 ; “朴少將 歸國”, 『조선일보』, 1956.6.23.

25)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473.

26) “第一期 修了式 18日 國防大學서”, 『동아일보』, 1956.8.20.

국가안보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이 전무한 가운데, 국방대학은 창설 초기부터 장교로서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1기 수료를 목전에 둔 시점에, 국방부 국장회의에서 국방부에 근무하게 되는 장교는 국방대학 출신으로 등용할 것을 결의되었다. 나아가 정부 각 부처에서도 국방대학 출신을 우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²⁷⁾ 이처럼 국방대학은 군을 넘어 정부의 요직에서 필요한 국정운영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방향 정립은 국방대의 발전의 후속에 효과적인 선언이기도 하였다.

기간요원인 1기생 수료 이후, 실질적 발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2기부터는 약 10개월의 교육과정이 계획되었다. 김용우 국방부장관은 입법을 위한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방대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었다.

국방대학은 대개 지휘관이니만치 그 군인들의 지식과 역량이 좀 더 달라야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것임으로 그러한 고급장성에 대해서는 군 자체의 국가 전체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더한층 충실한 군인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대학에서는 가령 입법부면 입법부는 어떤 사명을 가지며 또한 국방부의 행정관계는 어떻다든지 이러한 국가 전체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²⁸⁾

이를 통해 군 수뇌부의 원활한 부대 지휘, 국정에 관한 전반적 이해, 군과 정부 부처와의 관계 등 군사적 학식을 넘어 국가적 식견을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공론장에서 밝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국방대학은 육해공 3군의 합동지휘를 위시한 전쟁계획 및 국방계획을 연구하며 아울러 국력의 총원을 검토하는 군 최고학부인만큼 장성급

27) “國防大 出身 優待키로”, 『조선일보』, 1956.8.2.

28) 국회사무처. “(제23회 제7호) 국회입시속기록”, 1956.7.21., p.30.

으로서 필수적인 교육과정인 것이며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라며,²⁹⁾ 국방대 수료가 장성급에 있어 불가결의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국방대 교육의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자, 전후방 주요 직위자들이 국방대에 입교하게 되었다.³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국방부장관의 필수교육 언설과 더불어 이승만 대통령의 국방대학에 대한 의미 부여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³¹⁾ 이승만 대통령은 축사에서 입교생들을 “우리 국군 중에서 공훈이 많고 명망이 높은 지도자”로 호명하였는데, 이는 2기생이 군 내 유력인사로 평가받았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 또한 군사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국방계획을 완전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지식을 많이 얻어 놓아야 장차 유사시 준비가 되는 것이다.”라는 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뿐만 아니라 입교생들에게 “후방에 대한 이해”, “3군의 균형과 조화”, “민간과의 협조”를 위한 역량을 개발해야 함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2기생 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방대학은 국방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 「교육법」에 의거 대학은 문교부가 통제한다는 법적 모순 때문이었다. 언론에도 「대학설치기준령」에 저촉된다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사유가 보도되었다.³²⁾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였던 「국방대학설치법안」을 철회하였고, 각의는 해당 법안이 의도한 군 최상급 지휘관 및 참모 양성기관명을 국방대학에서 국방연구원으로 개칭하였다.³³⁾

이로써 「국방연구원령」이 대통령령 제1229호로 새롭게 마련되며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주목할 점은 1955년 11월 14일 국회에 상신한 「국방대학설치법(안)」과 1957년 1월 14일 시행된 「국방연구원령」은 기관의 명칭 이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

29) “將星도 緊要 國防大 履修”, 『조선일보』, 1956.9.29.

30) 2기 입교생 중 장성은 19명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인물은 다음과 같았다. 중장 4명(강문봉, 송요찬, 오창근, 이한림), 소장 3명(박기내, 윤춘근, 최석), 준장 12명(김상복, 이상철, 김용주, 양중호, 하갑청, 이주일, 김용기, 조재미, 송효순, 이상근, 이규삼, 박춘식) “政府人事 發令”, 『경향신문』, 1956.9.29. ; “將星級 八名 國防大 追加 入校”, 『동아일보』, 1956.9.30.

31) 공보실. “국방대학 입교식에 치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1959).

32) “國防大學 名稱 改正”, 『조선일보』, 1957년 1월 12일 ; “國防大學 置法案 政府서 撤回를 要請”, 『조선일보』, 1957.1.19.

33) 국회사무처. “(제23회 제7호) 국회임시속기록”, 1957.1.19, p.2.

는 것이다. 문교부에서 대학을 관리한다는 법적 근거의 해소는 형식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기관의 성격과 운영에 대한 영향은 없었던 것이다.

국방연구원의 입교에 있어 현역 군인은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하였는데, 소속 군의 최고정규 교육과정을 필한 자가 그 대상이 되었다. 군인 이외의 공무원은 각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에 한하여 수학을 허락받았다. 한편 교과는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되었다. 공통과목은 국방원리, 국방계획, 군 조직원리, 연합계획, 국제정세, 군수산업, 동원(인적, 물적),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였다. 전공과목은 육·해·공군의 조직 및 편성에 관한 교과, 군·함대·전술공군 이상의 작전 및 운영에 관한 교과로 구성되었다.³⁴⁾ 1957년 본격적인 정규교육과정(제2기생)은 총 42주로 12개의 교과로 구성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1957년(제2기생) 교육구성. 출처: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17.

구 분	교과명	교육시간(주)
	소개	1
제 1 교과	국방군의 현황	3
제 2 교과	국책의 수립	3
제 3 교과	공산진영의 분석	2
제 4 교과	대외정책	3
제 5 교과	경제동원개요	2
제 6 교과	국방기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제요소	5
제 7 교과	육해공군의 운용	8
제 8 교과	군사전략	2
제 9 교과	전쟁기획을 위한 조직 및 절차	3
제10교과	육해공군의 전쟁기획	3
제11교과	연합 및 국제연합기획	4
제12교과	개인연구(논문) 발표	1
	시찰	1
	휴가	1

34) 「국방연구원령[대통령령 제1229호]」, 1957년 1월 14일 시행.

이는 국방안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해당 과정을 통해 학생장교들은 국방군의 현황과 국가정책 수립 과정을 학습하고, 공산진영의 동향과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국제정치적 시각을 함양하였다. 또한 국방기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의 연계를 파악하였으며, 육·해·공군의 운용과 군사전략, 전쟁기획을 위한 조직 및 절차, 연합 및 국제연합 차원의 기획을 학습하여 실질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한편 학생장교들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개인연구를 통해 논제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고 발표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틀은 매년 교육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되었다.³⁵⁾

1959년부터는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차원의 분야별 정책을 교육하는 시간이 점증하는 양상을 보였고, 12개 교과에 대한 117개 강의와 49개의 분임연구과제가 구성되었다. 이론강의에서는 정치(39%), 경제(37%), 군사(24%)를 차지하였는데, 군사 전문성을 축적해 온 학생장교들에게 보다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타 분야에 관한 학문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 경제, 군사 및 사회심리적 제요소 그리고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각부처의 국방과 관련된 제문제, 3군의 유기적 발전 및 능률적인 운용을 위한 국방계획 및 건전한 국가안보정책의 발전 등에 관하여 학생이 필히 숙지해야 할 사항을 추출하고 분임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국방연구원의 교육은 분임연구활동이 중심이었고, 강의는 원활한 분임토의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⁶⁾

국방연구원 교육운영에 있어 가장 주목할 점은 개인연구를 논문의 형태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논문작성의 목적은 국방에 관련된 중요 문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이며 독창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학생들은 안보 제반 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더불어 보고서 작성 및 표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1959년 국방연구원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연구주제는 총 133개로 다음과 같았다.

35)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p.17-19.

36)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25.

표 2-2. 개인연구 분야별 논제와 개수. 출처: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25.

대분류	주제 수	대분류	주제 수
정치 및 국제정세	13	정보 및 작전	6
경제	11	군사교육 및 인사	19
사회	4	군수	15
교육	3	지휘	9
군사기구 및 편성	11	기타	12
기획 및 전략	30	계	133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논제의 범위는 군사, 정치, 국제관계, 경제, 사회, 교육 등 제 분야에 걸쳐있다. 학생들은 제공된 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42주 교육 전 기간에 걸쳐서 개인연구를 발전시켰다. 논문 교과목의 운영은 3개 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논제선정에서는 지도교수가 소조별로 학생의 논문선정을 지도하고, 2단계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소조를 편성하여 조별 지도교수가 논문작성 활동을 지도하고, 3단계 발표에서는 재구성된 소조 발표회와 전 학급 발표가 이어졌다.

표 2-3. 1959년도 개인연구 교과 진행계획. 출처: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27.

주 차	진행 사항
1	논문작성법 소개, 제1단계 편성 발표
3	논제 제출
5	논제 확정 및 제2단계 편성 발표
6	연구개요작성법, 연구 초기 단계 연구활동 요령 교육
10	1차 참고서지 목록 제출
13	연구개요 제출
14	1차 독서카드 제출
15	전반적 진도평가 및 지도
19	2차 독서카드 제출
20	초안작성법 및 자료처리방법 지도
24	연구보고초안 제출
26	초안 검토
30	진도 평가
31	연구보고서 초안 제출
33	제3단계 편성 발표
34	논문 발표
35	논문 제출

이러한 일련의 개인연구 과정은 국방연구원 안보과정이 기실 체계화된 논문작성 과정이었음을 대변한다. 교과를 통한 학습, 분임 토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 기간에 걸쳐 논문작성 프로세스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각 논제를 담당하는 교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소통으로 학생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정책적, 실무적 능력을 보조할 학문적 전문성까지 배양할 수 있었다. 현역교수는 군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였고, 전문지식에 관하여서는 주요 대학의 고문교수의 역할도 상당하였다. 이들은 직접 분임연구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³⁷⁾ 한편 3주차에 논제를 제출하고 5주차에 확정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입교 초반부터 본인의 연구주제에 천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특정 강의에 관한 보다 밀도있는 집중과 분임 토의에서의 적절한 역할 분담까지 이어졌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교과 운영에 있어 중요시되었던 교육방법으로서 분임연구회 활동도 궁극적으로는 논문 작성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주제에 대한 분임 단위의 비판적 논평, 자료 공유, 의견 교환 등은 개인연구에 있어 체계적으로 집단지성을 녹아들게 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독창적 사고력, 통찰력 증진을 위한 학구 자유의 보장도 개인연구 천착을 위한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학문적 차원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방연구원의 선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이외에도 안보과정 학생장교들은 재교기간 전후방 육·해·공군 기지 및 주요산업 시설을 시찰하였다. 또한 일부학생들은 자유중국, 오키나와, 태국, 필리핀, 남베트남,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외시찰의 기회도 부여받았다.³⁸⁾ 시찰은 기본적으로 견문 확대를 위함이었지만, 학술적 차원에서는 개인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실무진들과의 토의 기회 부여에 그 목적이 있었다.³⁹⁾ 이러한 시찰의 경험은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고, 개인연구에서 현실적 제언을 고안할 수 있

37) 국방연구원 교수는 교과담임교수, 전임교수, 지도교수가 있었는데,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 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49.

38) 국외시찰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고, 1969년까지의 대상국만을 언급하였다. 국방대학교50년사 편찬위원회. 『國防大學校 50年史』(서울: 국방대학교, 2005), pp.70-74.

39)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 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p.28-29.

는 기회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최종 제출한 논문의 목록표가 정부 각 부처와 군 및 기타 관련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보아,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내포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려는 건설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진적 교육 체계속에서 양성될 졸업생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다. 각 군과 정부의 추천자들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하였다.⁴⁰⁾ 애초에 미국 당국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신입생의 확보를 강조하였고, 국방연구원 졸업 장교를 요직에 진출할 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이었다. 데커(Decker) UN 군사령관은 일련에 인사이동과 국방연구원 수료생의 군내 진출에 관한 비상한 관심을 공한 전송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⁴¹⁾ 요컨대 우수한 교육체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수한 인재 선발에도 역점을 두어왔던 것이다.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하여 국내 정국이 급변한 가운데, 국방연구원에도 변화가 있었다. 우선 단기적으로 국방대 민간학생의 수의 급증을 식별할 수 있다. 국방대학원은 입학자격에 정부관리기업체의 주요간부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이다.⁴²⁾ 이로써 공기업과 은행 간부까지 입교하게 되었다. 1961년 정규과정 민간인 입교생은 11명이었는데, 1962년에는 2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⁴³⁾ 당시 1961년 국방연구원 졸업식에는 5·16 이후 임명된 서울시장, 공보분과위원장, 내무부장관, 상공부장관이 졸업생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국방연구원장 함병선 중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위원장이었는데,⁴⁴⁾ 이는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대한 이해 직립 차원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공무원의 국방대 입교를 위해 단기특별과정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관련하여 송요찬 내각수반은 고급공무원 교육과정을 지시하였다. 중앙 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1주간씩 7개기에 걸쳐 총 487명을 배출하였다. 1-3기생의 교육 장소는 국방대학원이었고, 4기생

40) “新入生을 割當 國防研究院”, 『조선일보』, 1957.6.5.

41) “國軍 裝備 現代化와 우리 側의 受入 態勢”, 『경향신문』, 1957.5.17.

42) 「국방연구원령[대통령령 제1229호]」, 1957년 1월 14일 시행.

43)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 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75.

44) “卒業生엔 長官들도”, 『경향신문』, 1961.6.19.

부터는 당시 중앙공무원훈련원에서 교육받았다.⁴⁵⁾ 실제 송요찬의 경우에도 국방대학 2기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국정운영에 있어 국방대 과정의 효용성에 관한 군부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과정을 통해 공직자들은 발전국가 건설을 위한 총력전적 사고를 익힐 수 있고, 군정이 주도하는 국정운영의 논리와 문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급공무원 단기과정은 군사문화의 중심화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유양수 위원은 국방연구원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국방대학원으로 개편하는 「국방대학원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⁴⁶⁾ 연구원 명칭도 충분히 좋은데 왜 국방대학원으로 개명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당시 국방연구원장은 “자유당 때 대학원으로 하려다가 가명으로 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차제에 대학원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⁴⁷⁾ 이는 제1공화국에 대한 부정과 일신 차원에서 5·16군정의 지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⁴⁸⁾

군정의 업무 추진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따라 1961년 12월 31일에는 「국방연구원령」의 폐지와 동시에 「국방대학원설치법」이 공포되었다.⁴⁹⁾ 주목할 점은 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원을 연장선에 두고 동일시하였다는 점이다. 부칙에 따라 국방연구원 졸업자들은 전원 국방대학원 졸업자의 지위를 소급 적용받았다. 이는 국방연구원에서 국방대학원으로의 개칭이 단절이 아닌 발전적 승계임을 보여준다.

이후 국방대학원에는 주외무관요원 교육을 담당하는 과정도 신설되었다. “국가 수준에서 무관활동에 필요한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문제를 교육시킴으로써 그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부여함”이 운영 목적이었다. 교육방침은 ①한국의 국가목표 및 국가이익을 토대로 하여 국제정세의 개관을 통한 한국의 위치를 인식, ②주도국(미·소·중공·일본) 및 파견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세의 분석·

45)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60년사(1955~2015)』(서울: 국방대학교, 2015), p.62.

46) “(제96호)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 1961.12.30., p.6.

47) “(제96호)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 1961.12.30., pp.6-7.

48) 5·16군정의 지배 정당성 확보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할 수 있다. 문준호, “한국 초기 報勳제도의 형성(1948-1963)과 ‘4.19의거’의 정치적 포섭”,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4).

49) 「국방대학원설치법[법률 제937호]」, 1961년 12월 31일 시행.

검토를 통하여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③국제정세와 한국안보에 관련된 제 과제를 토의하는 데 있었다.⁵⁰⁾ 국방대에서 해당 활동을 주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설 직후부터 이미 국방연구원 구성원들은 국익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국제관으로 무장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⁵¹⁾ 이처럼 국방대학원은 국제관계와 외교에 관한 전문성을 다년간 축적하고 있었다.

1950년대에는 국방대 출신을 군사 엘리트로 연상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국방대 출신은 국가 엘리트로 인식되었다. 관련하여 1967년 공화당과 신민당 공천 확정자 명단 공개에 있어, 성명, 나이, 최종 출신학교가 공개되었는데, 예비역 육군 소장 조시형과 예비역 공군 준장 박두선의 최종학력이 “국방대”로 명기되기도 하였다.⁵²⁾ 이처럼 국방대학원은 공식적인 학력으로 대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내외 정세에 관한 광범위한 협의체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국방대학원 교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당시 김영준 교수는 민방위 체제의 확립, 심리전의 강화, 국방 측면에서의 경제건설 등에 대한 포괄적 안보 논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⁵³⁾

김한식 명예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1960년대 군 위주의 정치사회 속에서 국방대학원의 위상은 상당하였다. 국방대학원 교육경력은 군 고위직 장성과 정부 인사들에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이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심지어 국방대학원 강연 참여가 장관의 국무회의 불참의 정당한 사유로 여겨지기도 하였다.⁵⁴⁾ 발전국가 시기 경부고속도로 건설 조감도 작성을 위한 측량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신입생 환영회가 경복궁 경회루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⁵⁵⁾ 각도 부지사들의 국방대 입교와 졸업 후 인사이드가 언론에 등장하였다.⁵⁶⁾ 이처럼 국방대학원은 안보의 영역을 초

50)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60년사(1955~2015)』(서울: 국방대학교, 2015), pp.62-63.

51) 김지훈. “한국군 국방대학 창설과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이론의 형성”, 『역사와현실』 제131호 (2024), p.109

52) “共和新民 公薦 확정자 名單”, 『경향신문』, 1967.3.14 ; “共和 新民 兩黨 公薦者 名單”, 『조선일보』, 1967.3.16.

53) “對北傀 民防體制 필요”, 『조선일보』, 1967.8.24.

54)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60년사(1955~2015)』(서울: 국방대학교, 2015), p.45.

55)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60년사(1955~2015)』(서울: 국방대학교, 2015), p.57.

56) 1968년 8월에는 충북 부지사 권용식이 국방대 졸업 후 경북 부지사로 임명되었고, 경기 부지사

월하여 국가적 수준의 사고를 기르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육 기관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국방대 출신의 국정운영 선도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국방의 영역에서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합동참모대학의 설치는 1959년 연합참모본부에서 합동 군사전략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부터 구상되었다. 해당 기관은 미 합참대를 모델로 삼았다. 국방부는 기간요원을 미 합참대에 파견하고 교육을 수료하게 하였고, 미 군사고문관이 교육 준비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⁵⁷⁾ 최고의상임위에서는 4월 9일 「합동참모대학설치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국방대학원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기관이 신설된다는 것에 관한 우려가 있었는지 언론에서는 합참대가 “국방대학원과는 설치목적과 교과성질”에 있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⁵⁸⁾ 합참대는 국방대학원 안에 설치되었다. 당시 국방대학원 목적 및 교과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국방대학원과 합동참모대학의 법률 비교. 출처: 「국방대학원설치법[법률 제937호]」, 1961년 12월 31일 시행 ; 「합동참모대학설치법[법률 제1330호]」, 1963년 4월 18일 시행

구분	국방대학원	합동참모대학
목적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을 교수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분석, 연구, 발전시키고 각군, 정부각기관 및 정부관리기업체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안전보장에 관여할 간부로서의 자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대학원을 둔다.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군사문제에 관한 학술을 교수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분석·연구·발전시키고 각군 및 정부기관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각급합동사령부·연합사령부와 고급사령부에 관여할 간부로서의 자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합동참모대학을 둔다.
입학자격	1. 각군대학을 수료한 장교 2. 정부각기관의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3급갑류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3. 학사학위를 가진 정부관리기업체의	1. 각군대학을 수료한 장교 2. 정부각기관의 3급갑류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강신익이 국방대에 입교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副知事異動」, 『경향신문』, 1968.8.21.

57)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p.100-101.

58) “參謀大學設置案 最高議常委 通過”, 『동아일보』, 1963.4.9. ; “合同參謀大學 設置法案 議決”, 『조선일보』, 1963.4.10.

주요간부	
교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교수, 연구,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군사문제와 합동 및 연합작전에 관한 문제를 교수·연구·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양자 모두 국가안전보장을 다루지만 합동참모대학이 군사문제에 국한되며, 이후의 활동 영역 또한 군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국방대학원의 목적이 보다 포괄적이다. 입학자격이 있어서는 국방대학원이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정부관리기업체의 주요간부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에 관하여서도 합참대는 “군사문제”, “합동 및 연합작전”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으로 협의적인 교과로 구성되었다.

합참대는 1964년 5월 25일 제1기 입교식 행사를 개최하였고, 기수별 19주의 교육기간을 거쳐 1969년 7월까지 11개 기수의 고위 장교를 배출하였다.⁵⁹⁾ 학술 연구를 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교생들은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합참대 교육방침은 사고희 습관 증진을 위한 방법과 원칙의 강조, 상호 주관의 논의 속에서 협업하는 객관적인 사고, 토론 활성화를 위한 학구의 자유였다. 이러한 방침에 입각하여 강의, 분임연구, 계획수립, 실습, 공개토의, 견학, 개인연구 등이 교육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⁶⁰⁾ 한편 합참대 창설 당시 교과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59) “合同參謀大學 발족”, 『조선일보』, 1964.4.26. ; “合參大學 卒業式”, 『조선일보』, 1966.7.24. ; “‘70年代 安保 재검토해야’”, 『조선일보』, 1969.7.23.

60)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p.105-106.

표 2-5. 1964년 합동참모대학 교과구성. 출처: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서울: 國防大學院, 1987), p. 104.

교 과 명		교육시간(H)
제1교과	학교교육 소개	5
제2교과	국방소개	145
	국방일반	(24)
	육군의 편성과 작전	(27)
	해군·해병대의 편성과 작전	(35)
	공군의 편성과 작전	(29)
	각군 견학	(30)
제3교과	군 편성과 지휘권 관계	34
	합동참모본부 소개	(10)
	통하조직의 편성과 지휘권 관계	(24)
제4교과	합동 및 연합작전계획	227
	합동작전 원칙과 각종 판단·계획문서	(19)
	비상 방어계획	(32)
	합동기동부대 수준의 계획	(51)
	합동/연합사령부 수주의 계획	(40)
	전역계획	(44)
	분란대책 계획	(24)
합동작전의 새로운 경향	(17)	
제5교과	국가 및 국제안전보장	50
	국가안전보장	(26)
	국제안전보장	(24)
제6교과	개인연구 발표	13
기 타		66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합참대에서는 국군의 편성과 각군의 작전, 합동 및 연합 작전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국방대학원이 군사를 포함하여 사회 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합참대는 “군사문제에 관한 학술”로 임무를 구획하고, 학생 장교들에게 배양할 능력도 “합동사령부, 연합사령부와 고급사령부에 관여할 간부로서의 자질”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합참대는 설치법을 준수하며 국방대학원과는 별도로 군사 분야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고, 후술하겠지만 학생들의 연구 산물도 직접적인 군사문제에 관한 논고가 대부분을 이룬다.

Ⅲ. 국방안보연구 추이 분석과 역사적 함의

국방대는 창설 이래 다종 다양한 연구산물을 공간하며 안보학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시기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크게 3가지 갈래로 구성된다.⁶¹⁾ 우선 연구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종합적 논제로 하는 『국방연구』가 있고, 해외논고의 번역 및 수록을 통하여 안보문제의 교육과 정책연구에 기여한 『대전략』이 있으며, 학생들이 개인연구를 통해 탐구한 학생논문이 있다.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국방안보연구 초창기에는 교육과 연구의 상관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대전략』은 정선된 외국잡지 수록 논문들의 소개이면서 학생들의 유용한 자료였으며, 『국방연구』에는 다수의 학생 논문이 졸업특집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3가지 발행물은 국방안보연구 발전에 상호 기폭제로 작용하며 관련 분야를 개척하였다.

1. 국방연구

『국방연구』는 국방대 기관 최초의 학술논문집으로 안보 및 국방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촉진하고 안보관련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발간되었다. 간행 업무는 국방연구원 교수부가 맡았고, 1958년 3월 초판이 출판되었다. 초기에 연 2~3회를 발행 간격으로 하다가 1967년부터는 전반기 후반기로 매년 2회 발간되었다.

초대원장이었던 박임항 소장은 「창간사」에서 국방의 문제가 학문으로 인식되지 않고 연구되지 않은 관행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존망을 직접 좌우하는 분야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쟁과 분단으로 위기가 상존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서도 국가의 안전보장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⁶²⁾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정열은 창간을 기념하는 「축사」에서 국군의 유일한 최고학부로서 발전한 국방연구원의 공로를 치하하며, 국방연구 발간 원인을 다음과

61)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30년사 편찬위원회. 『安保問題研究所 30年史』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pp.20-23.

62) 박임항. “창간사”. 『국방연구』 제1권 (1958), p.1.

같이 거론하였다.

연구원에서 취급되고 연구한 제 문제를 국가안전보장정책과 국가기획수립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학설을 발표 소개하기 위하여 『국방연구』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가일층 기대가 큰 바 있는 것입니다. “학문이 있는 연후에 선견이 있고 선견이 있는 연후에 역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옛날 성인이신 공자의 말씀과 같이 이 인간은 배우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아는 힘 즉 지력이 완력에 우위한다는 점이 동물과 다르다는 뚜렷한 점의 하나인 것입니다.⁶³⁾

위 내용을 통해 국방연구원에서는 해당 기관의 연구성과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술지 발행의 필요성을 국방부에 보고하였고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전쟁 이론을 개발하고 전장에서 이를 활용하여 승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방에 관한 학문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방 분야 수뇌의 의식이 식별된다. 관련하여 『국방연구』가 국가안전보장 정책과 국방기획 수립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와 학설의 집약체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합참모본부총장 유재홍 중장은 현대전에서 “승리의 열쇠”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총력태세의 확립이 필요하며, 국방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제반 이념과 학설의 창조”를 위해 창간되는 『국방연구』에 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⁶⁴⁾ 주목할 점은 사회 제분야와 국방을 병렬로 두지 않고, 국방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발전의 전제이자 전평시를 포괄하는 확장적 개념의 ‘국방’이라는 차원에서 기실 『국방연구』가 국방을 위시한 사회 제분야를 논제로 다룰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학술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국방학을 담당하는 자는 군인만이 아니라 전국민”이라는 수신자 설정과 이로써 “군인과 일반국민과의 유대를 더욱 긴밀화”하기를 고

63) 김정열. “축사”. 『국방연구』 제1권 (1958), p.3.

64) 유재홍. “축사”. 『국방연구』 제1권 (1958), pp.5-6.

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⁶⁵⁾ 이는 국민을 국방의 학문화를 위한 개척자로 호명하였음을 의미하고 견실한 국방의 주체임을 설파한 것이다. 또한 “훌륭한 자료”의 집성이라는 취지를 언급한 문맥에서는,⁶⁶⁾ 승리를 위한 지성의 보고로 학술지를 활용하려는 실질적 의도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발행 배경, 목적, 논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국방연구』는 안보를 직접적 주제로 하거나, 여러 학문에서 이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광의적 범주에서 다루겠다는 방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요컨대 『국방연구』는 국가방위와 관련된 중층적 차원의 모든 연구주제가 포괄된 융합 학술지로서의 정체성을 태초부터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연도별, 권호별로 『국방연구』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창간호는 국가안보와 전략의 기본 문제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방기획에 있어서의 기초적 제 문제」, 「국가정책에 있어서의 국가적 이익과 국가목표」는 안보정책의 개념과 기본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I.C.B.M과 현대 전략」은 핵시대 전략 환경을 분석하였다. 「민족주의」와 「일본의 잠재적 전력」은 동북아 정세 속 민족주의와 일본의 군사적 잠재성을 검토하였고, 「동서 집단 안전보장체제에 관한 연구」는 집단안보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였다.⁶⁷⁾ 제2권은 「군사전략개론」 등 전략 특집을 통해 군사전략의 개념과 적용을 심화하였으며, 농업·국방기구·해군력 증강·병역제도·군수 전망 등은 국방력 강화와 국가발전의 연계를 탐구하였다.⁶⁸⁾ 제3권은 국가안보정책, 경제, 핵전략, 군사력 평가를 균형 있게 다루었고, 대중 인식의 중요성, 공산권 경제 동향, 핵전략 환경, 국방예산과 병력·장비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경험적 연구의 토대를 확립하였다.⁶⁹⁾

1959년에는 핵시대의 군사전략 환경과 현대 군사력의 성격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제4권은 「핵시대의 방위문제」, 「현대지상군」, 「현대해상력」, 「현대공군력」,

65) 박임항. “창간사”, 『국방연구』 제1권 (1958), p.1.

66) 김정열. “축사”, 『국방연구』 제1권 (1958), p.3.

67) 『국방연구』 제1권 (1958).

68) 『국방연구』 제2권 (1958).

69) 『국방연구』 제3권 (1958).

「군사전략의 현재와 장래」 등을 통해 핵무기 확산과 군사력 변화를 종합적으로 논하였으며, 현대적의 준비가 핵심 키워드였다.⁷⁰⁾ 제5권 졸업특집은 「국방력과 국민경제», 「정치·경제적 요소가 군사전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전략과 경제의 상관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아세아의 민족주의와 중립주의」는 지역안보와 정치 이념을 다루었다.⁷¹⁾ 제6권은 「중공의 인민공사와 민병제도», 「군사력과 권력정치질서의 Mechanism」 등에서 군사력·정치·경제의 상호작용이 분석되었고, 통수권 소재, 전쟁과 국민심리, 국제 핵군축 등으로 안보문제의 논의 지평이 확장되었다.⁷²⁾

주지하다시피 1960년은 4.19혁명을 전후로 하여 국내 정치 상황이 격변한 시기였는데, 국방연구원에서 국제정세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춘 경향이 포착된다. 한편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논의지형이 마련되자, 국가안보정책의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제7권은 미국 원조 감축, 한국의 안보의식, 독일 통일문제, 인도-중공 국경분쟁, NATO 방위체제를 통해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위치를 진단하였다.⁷³⁾ 제8권은 무기체제와 핵전력 구조, 군수지원 관리, 공산주의 전쟁론, 소련 군사력 분석, 한국 군사정책의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안보와 경제를 제도적으로 연계하였다.⁷⁴⁾ 제9권은 군사기구 개편, 해군무기체제, 군사정전위원회, 민방위, 국토종합개발 구상, 장교 진급제도, 군인 복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제도·교육·사회 기반을 강화하였다.⁷⁵⁾

1961년에는 국제정세와 군사제도 발전을 핵심적으로 논구하였다. 제10권은 미·중·소 관계 속 한국의 전략적 과제, 군사제도 개혁과 기술혁신의 안보적 의미를 다루었다.⁷⁶⁾ 제11권은 미·일안보조약과 감군 교훈, 여론지도, 농촌구제책, 실업자 문제, 군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국제정세와 사회적 기반을 연계하였다.⁷⁷⁾ 제12권은 현

70) 『국방연구』 제4권 (1959).

71) 『국방연구』 제5권 (1959).

72) 『국방연구』 제6권 (1959).

73) 『국방연구』 제7권 (1960).

74) 『국방연구』 제8권 (1960).

75) 『국방연구』 제9권 (1960).

76) 『국방연구』 제10권 (1961).

77) 『국방연구』 제11권 (1961).

대전략이론, 세계공산주의운동, 미·소 경제경쟁 등 전략·경제를 분석하였으며, 수산업·임금·공무원 제도 개선을 안보와 국가 발전의 연결고리로 제시하였다.⁷⁸⁾

국방대학원으로 개칭된 이후 첫 발간물이었던 1962년 13권은 5·16군사정변 1주년을 맞아 국가재건과 안보 확립을 강조하는 담화문으로 시작되었으며, 나머지는 졸업논문으로 구성되었다. 「한·미 행정협정」, 「중소공업 진흥」, 「해운정책」, 「동북아 집단방위체」, 「직업공무원제도」 등을 통해 제도·경제·외교 분야가 다루어졌으며, 특히 「자유진영의 집단방위와 한국의 안전보장」은 미국 신전략과의 연결 속에서 한국 안보를 검토하였고, 「한국의 군사전략」은 안보정책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⁷⁹⁾

1963년에 발행된 제14권에서는 핵전쟁과 전시국제법, 국방경제 평가, 중공 정치와 후진국 정치발전 등이 다루어졌고 국제정치와 안보기구 문제가 주요 논구대상이었다.⁸⁰⁾ 제15권 졸업특집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기구, 육군 개편, 대한전략, 국군장병 선발, 경찰·검찰 제도 개혁, 외무공무원제도 등 제도 정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수산자원개발 연구는 경제발전과 안보의 연계성이 강조되었다.⁸¹⁾

1964년에는 미국과의 협력 차원에서 파병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제16권 역시 졸업논문 특집으로, 「한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제문제」는 북괴 위협을 규명하였고, 「민족성과 사회심리」는 국민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경제개발과 국토계획」, 「군 지휘기구 개혁」은 발전전략과 군제 개편을 연계하였으며, 「한국전쟁의 특이성과 전훈」은 제한전과 집단안보 속 교훈을 도출하였다. 징집자원 활용, 학도군사훈련 발전책, 사병인사관리 등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착목한 결과로 보인다.⁸²⁾

1965년은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쟁 파병이 시의성 있는 안보 사건이었지만, 즉각적으로 논구되지는 않았다. 제17권은 민족정체성과 정치발전, 일본 핵무장,

78) 『국방연구』 제12권 (1961).

79) 『국방연구』 제13권 (1962).

80) 『국방연구』 제14권 (1963).

81) 『국방연구』 제15권 (1963).

82) 『국방연구』 제16권 (1964).

평화선 문제, 북한 권력구조 등을 분석하며 정치·국제안보 문제를 다루었다.⁸³⁾ 제 18권 졸업특집은 「양단된 국가의 통일문제」를 한국과 독일 비교 속에서 분석하고, 국가기획제도, 민간항공, 임업경제, 군수산업제도 개선 등 국방 이외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⁸⁴⁾

1966년은 수출증가에 따른 산업화가 촉진되어서인지 19권에는 대외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안보를 포괄하는 양상을 보였다.⁸⁵⁾ 제20권 졸업특집은 통일 대비 정치 태세, 경제 안정, 북괴 국제진출 대비 등을 논의하며 경제·안보 병행 발전을 강조하였다.⁸⁶⁾ 제21권은 한미관계, 대중동·아프리카·유럽·공산권 정책을 다루며, 혁명 전쟁, 군제·조직, 군축, 우주무기 등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비한 다각적 주제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⁸⁷⁾

1967년의 제22권은 중공 특집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미국의 대중정책, 중공의 기본전략, 중공과 북한의 관계, 중공의 핵실험, 문화대혁명, 중공의 대외무역과 원 조 등이 개별 논문으로 다루어졌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에 대한 시의적절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⁸⁸⁾ 제23권은 졸업특집 권호로 국제기구 유치, 승공통일 자세, 일본 재군비, 군인연금과 인사관리, 작전지휘권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실렸다.⁸⁹⁾

1968년 제24권은 소련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련 체제와 대외정책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심층 분석하며, 동구권 분극화와 중소분쟁을 조명하였다.⁹⁰⁾ 제25권은 국력·군사·정치·경제 전력론과 전략이론, 최신 국제 전략 변화 분석을 통해 국가전력의 구성과 전략 수립 요인을 규명하였다.⁹¹⁾ 한편 당시 연속된 안보 위기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83) 『국방연구』 제17권 (1965).

84) 『국방연구』 제18권 (1965).

85) 『국방연구』 제19권 (1966).

86) 『국방연구』 제20권 (1966).

87) 『국방연구』 제21권 (1966).

88) 『국방연구』 제22권 (1967).

89) 『국방연구』 제23권 (1967).

90) 『국방연구』 제24권 (1968).

91) 『국방연구』 제25권 (1968).

1969년의 제26권에서는 체계분석법이라는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방 정책 및 전략 선택 방안을 연구하였고, 미국의 군사동원 기구, 세계경제정세, 서구 군사 전략을 동시에 살폈다.⁹²⁾ 제27권 졸업특집은 게릴라전 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게릴라전 이론에 대한 고찰과 중공·월남·중남미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개별 논문이 수록되었다. 아울러 기타논총으로 전쟁지도 기구, 중공의 대외무역, 미국 군사 교육기관 연구 등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⁹³⁾

1958년 창간호부터 1969년 27권까지의 『국방연구』는 국가안보와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핵시대 전략 환경과 냉전 구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가운데 연구 영역을 점차 확장하였다. 이론의 정립과 실천의 요구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국가발전을 위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국가별, 전술별 각종 특집을 통하여 특정 주제에 논의를 집중하는 기획도 구상하였고, 연구방법론에 관한 소개를 통해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국방연구』가 단순한 정책 홍보 성격을 넘어, 한국적 맥락에서 국제질서와 안보문제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 시도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다층적 안보 담론을 발전시킴으로써 학술지로서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의성 있는 안보 현안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식별되는데, 이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현실과 연구의 괴리를 일정 부분 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연구』는 냉전기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전략 담론을 형성하고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권위있는 출판활동은 체계적인 안보 학술기관으로서 국방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역할을 하였다.

2. 대전략(번역월보)

1950년대 사회적으로 필요한 외서가 신속히 도입되어 널리 보급되고 소화되는 것이 문교행정의 으뜸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⁹⁴⁾ 한국 번역사에서 1950년

92) 『국방연구』 제26권 (1969).

93) 『국방연구』 제27권 (1969).

대는 번역의 장이 문화제도적으로 조형된 최초의 연대로서 통칭 “르네상스기”로 지칭되기도 한다. 식민지, 해방, 전쟁, 분단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도구로서 번역을 이해하였기 때문이었다. 국가권력 또한 반공주의로 무장하였고 국민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지식의 근대화를 위하여 번역을 중시여겼다.⁹⁵⁾ 이처럼 선진 문물과 제도에 대한 이해로부터 민족문화의 풍족도 도모될 수 있다는 인식속에서 번역은 긴요사업으로 여겨졌다.

미공보원(USIS)의 출판과에서는 1951년부터 번역 사업을 시작하여 1961년 상반기까지 310권의 책을 번역하고 발간하기도 하였다. 특히 1955년 미공보원은 정치, 군사, 역사, 경제, 문학 등 분야의 번역서 22권을 세트화하여 한국군에 기증하기도 하였다.⁹⁶⁾ 외국서적의 도입 차원에서 본다면, 근대적 지식 섭취에 있어 군은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58년에는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가 발족하여 각종 전문도서를 간행하였고, 사회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번역작업의 필요성이 역설되기도 하였다.⁹⁷⁾ 근대화기획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도서의 번역출판이 확산되는 가운데,⁹⁸⁾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국방대학교에서도 1959년 4월부터 자체적으로 『번역월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안보총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번역월보』는 50여 종의 외국잡지에 수록된 안보관련 논문들 가운데서 정선된 논문을 번역한 월간지였다.⁹⁹⁾ 이는 국방연구원 학생들의 연구 지원과 요람기에 있는 한국 국방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고, 국내 안보 및 국방관련 기관에 배포되었다. 창간된 지 4개월 후에 『번역월보』는 『대

94) “外書의 導入과 普及”, 『동아일보』, 1955.9.2.

95)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 정치—1950년대 번역 정책과 번역문학장”, 『대동문화연구』 제71권 (2010), pp.477-481.

96)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 정치—1950년대 번역 정책과 번역문학장”, 『대동문화연구』 제71권 (2010), p.490.

97) “近代文化와 翻譯事業”, 『경향신문』, 1959.3.19.

98) 이봉범.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 — 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9권 (2012), p.431.

99)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30년사 편찬위원회, 『安保問題研究所 30年史』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p.21.

전략(GRAND STRATEGY)』이란 제호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연원을 찾기는 어려우나, 1950년대말 군부에서 ‘대전략’이 회자되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대전략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자원, 국민의 결속을 협조하고 지휘”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었다.¹⁰⁰⁾ 한편 당시 원장이었던 박임항은 ‘대전략’ 학교로서 국방연구원이 시급한 과제인 전략 분야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¹⁰¹⁾ 어떻든 월 단위로 내는 번역 보고라는 형식에 따른 ‘번역월보’라는 표제에서 내용을 담지하는 ‘대전략’으로의 대체는 정초 단계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대전략』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후속하겠다.

1959년 『대전략』에 수록된 번역 논저들은 핵시대 전략의 도래와 냉전 구도의 고착, 집단안보체제 논의, 그리고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미묘한 공포의 균형」, 「핵시대에 있어서의 전쟁잠재력」은 핵억지와 공포의 균형 개념을 통해 전쟁 양상의 근본적 전환을 분석하였으며, 「소련이 보는 미국의 전략」, 「소련식 전쟁통제전략」은 소련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적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이와 함께 「NATO의 새로운 시련」, 「SEATO와 동남아의 평화」는 냉전 동맹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한계를 조망하였고, 「우주 전략과 자유세계의 방위」, 「전쟁과학기술」은 과학기술 혁신이 국방체제를 변화시키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전쟁이 준 교훈」과 「한국휴전감시의 경험」은 한국전쟁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한국 안보 현실과의 연계를 모색하였다.¹⁰²⁾

1960년 번역 논저들은 핵전략 이론의 심화, 동맹·집단안보 논의의 확장, 제3세계 분쟁의 부상이라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핵실험과 국가안전보장」, 「핵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안전보장」은 핵억지 논의를 이어받으면서도 전쟁 양상의 구조적 특질에 주목하였다.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문」, 「SEATO의 집단안전보장기구

100) 이인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시론(상)”, 『군사평론』 제6호 (1959), p.25(허은, 『냉전과 새마을 :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 (서울: 창비), 2022, p.139에서 재인용).

101) 박임항, “권두사”, 『국방연구』 제2권 (1958), p.1.

102) 『번역월보』(1959) ; 『대전략』(1959).

서의 의미」 등은 미·일 신안보조약 개정과 아시아 집단안보 논의를 반영하였고, 「큐바와 우리 세대의 혁명», 「라오스, 무력외교의 각축장」 등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지역 분쟁을 새로운 전략 전장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심리전의 현 단계», 「소련군인의 심리」는 여론전과 심리전이 군사력과 병행해야 할 전략 수단임을 강조한 것이었다.¹⁰³⁾

1961년에는 케네디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전략 기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케네디 신 대통령의 국가전략», 「케네디 정부의 대중공 정책」 등은 정책 전환기의 특징을 담았으며, 「핵실험 중지의 제문제점», 「군축은 가능한가」는 군비통제와 제한전 준비 논의를 심화하였다. 또한 「소련의 군사적 발전», 「중공의 군사력」은 공산권의 군사적 역량을 분석하였고, 「미국의 대 게릴라 전략», 「특수전의 본질」 등은 게릴라전과 특수전을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다루며 전략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¹⁰⁴⁾

1962년 번역 논저들은 군비관리와 핵억제, 비정규전 연구, 지역 분쟁 분석, 공산권 내부 균열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향후 20년간의 미국 억제력», 「전면군축에 있어서의 억제의 역할」은 미·소 간 핵전략 경쟁을 반영하였고, 「폭동 전술», 「해방전쟁」은 라오스와 알제리 등지에서 나타난 국지전을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명암», 「동남아에 있어서의 공산전략», 「집단안전보장」 등은 동남아시아를 핵심 전장으로 조망했으며, 「알바니아와 중·소 충돌», 「고민하는 후루시초프와 모택동」 등은 중·소 분열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군비와 경제의 부담력», 「대외 원조: 전략이나 임시방편이냐」는 안보와 경제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¹⁰⁵⁾

1963년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전략 안정화, 중·소 분열 심화, 제3세계 갈등 확산이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다. 「핵정책과 프랑스의 비타협적 태도», 「핵전략의 관리」 등은 핵전략의 조정 문제를 다루었고, 「중공의 문화대혁명», 「중공은 전쟁을 할 여유가 있을까?」는 중국 내부의 혁명과 군사적 역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103) 『대전략』(1960).

104) 『대전략』(1961).

105) 『대전략』(1962).

「게릴라전과 현대전략」, 「비정규전」은 제3세계 혁명과 반혁명 상황 속에서 전쟁양상을 다루었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등은 3세계의 냉전체제화를 다루고 있다.¹⁰⁶⁾

1964년 번역 논저들은 공산권 전략 분석, 서방 동맹의 정책 변화, 제3세계 신생국의 안보 문제, 군사전략 이론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련의 핵전략을 해부한다」, 「중공 군사정책의 분석」은 공산권 전략을 정밀하게 다루었으며, 「미국의 외교정책의 개관」, 「일본의 안보정책」 등은 동맹국의 전략을 소개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외교정책」, 「케냐의 독립」, 「아시아의 농지개혁」 등은 탈식민지 국가의 형성과 안보적 함의를 조망하였다. 「군사력의 구상」, 「전략의 선택과 무기체계의 선택」 등은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연구의 진화를 보여주었다.¹⁰⁷⁾

1965년에는 군사전략과 국가안보, 미국의 세계전략, 경제와 원조정책, 제3세계 분쟁이라는 대주제로 구성되었다. 「세계의 군사력」, 「군사전략의 연구」, 「분란대책」은 군사적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존슨 대통령의 국방교서」, 「미국의 월남 및 동남아 정책」은 베트남전 심화를 반영하였다. 「국가안전보장의 경제적 국면」, 「소련의 대외원조」는 안보와 경제의 결합을 드러냈으며, 「쿠바 내의 미국의 기업과 카스트로」, 「말레이시아 연방」 등은 지역 분쟁과 불안정을 조망하였다.¹⁰⁸⁾

1966년 번역 논저들은 미·소·중 삼각 구도, 핵무기와 군비통제, 아시아와 제3세계 안보, 기술·군사 교육의 심화라는 경향을 보였다. 「NATO의 계속적인 필요성」, 「바르샤바 협정」은 군사동맹 구조와 대결 집합에 대하여 다루었고, 「핵무기 확산 방지는 가능한가?」, 「소련 전술」 등은 핵전략과 전술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과 한국경제 전망」, 「중공의 위협」은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를 직접적으로 조명하였으며, 「아랍·이스라엘 분쟁」, 「아프리카의 질서유지」는 제3세계 갈등을 살펴보기 위한 의도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⁹⁾

1967년에는 군사력 균형과 베트남전, 중·소 분쟁과 중국의 문화대혁명, 제3세계

106) 『대전략』(1963).

107) 『대전략』(1964).

108) 『대전략』(1965).

109) 『대전략』(1966).

지역 갈등, 경제적 요인의 전략화가 동시에 다뤄졌다. 「동서의 군사력 균형」, 「미·소련의 전략전력」은 군비경쟁 심화를 반영하였고, 「미국의 대 베트남 정책」, 「게릴라전에 대한 고찰」은 비정규전 양상에 주목하였다. 「중소분쟁」, 「중공의 문화대혁명」은 공산권 내부의 이념 분열을,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의 정치적 요인」, 「아프리카의 국경분쟁」 등은 제3세계 문제를 드러냈다. 동시에 「소련의 경제혁명」, 「외원과 외교정책」은 경제를 전략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다.¹¹⁰⁾

1968년 번역 논저들은 베트남전의 심화, 미·소 경쟁과 경제적 공존 탐색, 서방 동맹의 재조정, 중국 내부의 권위 위기, 제3세계 갈등이라는 5가지 특징을 지닌다. 「공산형 제3차 세계대전」, 「도미노 이론」, 「월남전은 새로운 양상의 전쟁인가?」는 전쟁 성격에 대한 논쟁을 보여주었으며, 「소련의 경제혁명」, 「동유럽 긴장완화 문제」는 동구권 변화를 반영하였다. 「중공정치의 권위 위기」, 「마오 이후의 중국」은 중국 내부의 불안정을, 「중동위기의 ABC」, 「아랍 세계의 민족주의와 혁명」은 제3세계 지역 질서를 다루었다.¹¹¹⁾

1969년에는 베트남전 장기화, 군사기술 발전, 지역 질서 재편, 이념·사상 논의가 병행되었다. 「한국 : 제2의 월남?」, 「미국의 한국전 및 월남전 개입」은 동아시아 안보 위기를 부각하였으며, 「우주방위와 국가안전」, 「군사기술의 혁명」, 「독일 핵무장의 쟁점」은 기술 경쟁이 전략 담론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준다. 「간디의 정치사상」, 「모택동 사상」 등은 이념적 탐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미일관계의 장래」, 「아시아의 새로운 방어선은?」, 「중동에서의 미국 입장」 등은 지역 질서 재편에 관한 분석적 글이었다.¹¹²⁾

『대전략』은 *Foreign Affairs*, *World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등 당시 미국 저명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선별·번역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미 정부 정책, 대통령 연설, 육군 예산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냉전기 한국 전략연구의 지평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장한 학술지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은 전략학과

110) 『대전략』(1967).

111) 『대전략』(1968).

112) 『대전략』(1969).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기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세계 우수 학술지에 게재된 최신 논저를 체계적으로 번역·소개하여 국내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국제 담론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략연구의 학문적 수월성을 확보하고, 자국 안보 문제를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 받을 수 있었다.

연구 경향 또한 국제 전략학의 흐름과 긴밀하게 호응하였다. 1950년대 말에는 핵억지, 공포의 균형, 집단안보체제의 구조와 한계를 논의하며 핵시대 전략사유의 전환을 반영하였고, 1960년대 초에는 케네디 행정부의 신전략, 군비통제와 제한전쟁, 게릴라전·특수전 등 비정규전 연구를 신속히 수용하였다. 1960년대 중반기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의 핵전략 안정화, 중·소 분쟁, 탈식민지 제3세계의 불안정 등을 번역 소개함으로써 다극화하는 냉전질서를 포착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우주방위, 첨단 군사기술, 경제·원조정책, 사상적 탐구까지 다층적 전략 담론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전략』은 단순한 번역지가 아니라 국제 전략 담론을 한국 학계와 정책 현장에 직접 이식하는 매개체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계적 담론을 국내 안보환경과 접목시키는 데 있어, 시의적 현안과의 직접적 연결성은 선택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된 논저들이 제공한 지적 자원은 한국 국방안보학의 수준 제고에 일정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곧 『대전략』이 냉전기 한국에서 국제 전략학을 학문적 차원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일종의 지식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준다.

3. 학생연구

가. 안보과정

전후 복구라는 과제를 넘어 핵무기로 대표되는 새로운 전략 환경으로 이행하던 시기인 1957년의 연구는 무엇보다 한국군의 기초적 체제 정비와 안보 인식 확립에 방점을 두었다. 병역제도, 예비군 관리, 장병 교육, 군사사기, 군수 및 급양 제도와

같은 주제는 국군의 제도적 안정성과 전투력 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였다. 동시에 심리전 기구 설치, 국민사상 선도, 국방과 교육·사회·경제의 연계 논의는 안보를 단순한 군사 영역을 넘어 국가적 총동원 체제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소련 대외정책, 공산주의의 약점, 일본 해군력 분석, 공중세력 확보 필요성, 장차전의 정보 활동에 관한 탐구는 냉전 구도와 북한 위협이라는 외부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처럼 1957년은 군사적 대비와 국민적 동원 체제 구축을 양 축으로 하여 안보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이후 1958년으로 넘어가면 연구의 무게중심은 군사 제도의 합리화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옮겨갔다. 통수권 소재, 사관학교 통합, 연합참모본부 검토, 장교 인사 제도, 군 급양 및 봉급, 군수공창 운영과 같은 주제가 제도 정비를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례라면, 방공, 군사외교, 대남공작 침투 방지, 정보조직 개편, 군기 확립, 국방 기밀 보안은 북한의 군사·심리적 도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연구였다. 더불어 예비군 제도 재검토, 학도군사훈련, 직업군인 처우 개선 등은 인적 자원 관리와 동원 능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즉, 1958년 연구들은 전쟁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구하며, 냉전기 한국군이 안보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1959년에 접어들면서 핵무기 시대의 도래가 본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전략」, 「핵시대의 방공」, 「공군·육군의 역할」과 같은 주제는 새로운 전략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작전 개념과 임무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국가안전보장 정책기구, 국방 동원기구, 군수조직 재편, 보병사단 개편, 군사교육 목표 설정 등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흐름이었고, 동시에 간첩 침투 대응, 군사·외교 활동의 협조, 군사기와 군기 확립, 국토통일과 군사력 연구 등은 내부 안보와 분단 현실의 긴급 과제를 담아냈다. 냉전의 심화와 핵전략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연구는 한국군이 독자적 국가 전략을 학문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1960년에 이르러서는 전면전과 제한전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두드러졌다. 제한전쟁과 한국의 전략·외교, 전시 통제경제, 인적 동원, 군사기구 통합은 총력전 체제 대비를 겨냥한 주제들이었고, 핵시대의 해병대·지상군·공군 역할, 전자

전, 민방위, 군사기론, 군기 확립 등은 첨단 기술전과 대량살상무기 시대의 전투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군사교육, 사병·예비병 훈련, 장교 진급제도, 국군 일반 교육론은 인력 관리와 양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군사정전위원회 관련 연구는 정전 체제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초반의 연구는 냉전과 핵무기 시대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하여 군사력 건설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 전략적 전환기의 성격을 띠었다.

5·16 군사정변 전후의 불안정한 체제 속에서 진행된 1961년 연구는 군의 정통성 확보와 국가 재건이라는 이중 과제를 반영하였다. 감군, 국군조직 검토, 통솔체계 보완, 군사법제도 개혁 등은 군사조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모색한 것이었고, 미일안보조약, 중공 세력 팽창, 일본 재무장, 평화선 및 독도 문제는 동북아 전략 환경 속 한국의 위치를 진단한 시도였다. 동시에 남북교류, 통일 구상, 지정학적 접근은 분단 현실 극복을 위한 통일 담론을 제기하였으며, 군 정신무장 강화, 국민계몽운동, 청소년 도의교육은 사상전 차원에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였다. 요컨대, 이 시기는 군사력 현대화와 대외전략, 사회사상 동원을 아우르는 총력안보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단계였다.

1962년으로 접어들면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고, 미·중·소 냉전 경쟁과 한일 국교 정상화 논의가 이어지자 연구도 한층 다층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의 평화통일 공작과 간접침략, 민방위, 탈영병 문제에 관한 논의는 내부 안보 관리와 대남 위협 대응을 반영하였고, 중공의 대한전략, 미국의 극동정책, 자유진영 집단방위와 한국의 안전보장 연구는 국제 전략 환경 속 한국의 선택지를 탐색하였다. 아울러 공군정책, 통신병 양성, 조달기구 통합은 전력 강화를 겨냥하였으며, 농촌부흥, 중소기업 육성, 외자도입 등은 경제개발과 안보를 연계하였다. 결국 이 시기의 연구는 안보와 경제발전을 통합하는 발전국가형 안보체제를 지향하였다.

1963년은 민정 이양과 정치체제 재편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이 연구 주제를 규정하였다. 전시 선박·수송 동원, 후방지원, 야전통신 등은 총력동원체제 구축을 준비한 것이었고, 공군 전력 산정, 육군 기획·운영 제도는 군사조직의 합리화를 추구하였다. 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의 외교술책, 간접침략, 소련 극동정책을 분석한 연구

는 대외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 기구, 정당육성책, 국민성 개조론 등은 체제 정당성과 정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한 의도로 규정지을 수 없지만, 안보, 정치, 경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국가체제 안정화’를 지향하는 모습이 식별된다.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4년에는 군사력 현대화와 경제개발, 사회동원을 아우르는 총력안보 구상이 강화되었다. 해군전략, 예비군제도, 민방위 태세, 장비 현대화는 전투력과 민방위 역량 강화를 추구한 것이며, 군 식량 자급, 교육체제 개선, 자조조병 능력 연구는 군수 자립을 강조하였다. 중공세력 팽창, 미국 극동정책, 한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는 변화하는 외교·군사 환경에 대응하였고, 농어촌 근대화, 학도군사훈련, 징집자원 활용 등은 안보와 사회·교육을 연결하였다. 국토개발과 도시개발 논의는 경제개발과 안보의 연계성을 분명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연구는 총력안보체제의 심화를 상징하였다.

1965년은 미국 군사원조의 변동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자주국방안, 장비 현대화, 3군 지원체제 재정비 등은 독자적 군사력 건설을 추구하였고, 군수산업제도 개선과 방위산업 육성은 경제개발과 군사력을 긴밀히 연결하였다. 북한 교통·수송력 분석, 대남전략 연구, 반공교육은 북괴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탐구였으며, 동북아 동맹 필요성, 극동 집단안보, 미국 극동정책에 관한 연구는 외교·군사적 다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로써 1965년은 한미동맹 의존에서 자주국방·경제연계·전략 다변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자리하였다.

1966년에 이르면 베트남전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안보 환경이 연구에 뚜렷이 투영되었다. 월남 파병, 삼각경제협력, SEATO의 의의 등은 국제적 연계 속에서 안보를 논의하였고, 예비사단 운용, 전시 인적동원제도, 민방위 확립 등은 총력전 대비에 집중하였다. 군수지원체제 개선, 교육체계 개혁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였으며, 북한 외교정책, 대북 심리전, 북한 국제진출 대비 연구는 북괴 공세에 대응하였다. 일본 재군비 전망, 중공 전략사상, 극동 집단안보 등은 동북아 안보 구도를 진단하였다. 요컨대, 1966년의 연구는 국제적 안보 참여와 국내 총력안보 준비를 병행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7년은 베트남전 확대, 중공 핵개발, 북한 무장도발이라는 복합적 위협 속에서 진행되었다. 중공 핵무장, 핵개발의 전략적 의의, 북한군사전략 연구는 핵·북괴 위협을 심층 분석하였으며, 월남 파병과 관련된 연구들은 참전의 의미와 국토방위에 대한 파급효과를 검토하였다. 병무행정 개선, 군 지휘관리 발전, 인사정책은 군사조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경제발전과 군사력 유지, 과학기술 발전, 국가발전과 군의 역할은 국방력과 경제·기술 발전의 상호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대북심리전, 승공통일론, 동북아 집단안보는 통일 전략과 국제협력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는 다차원적 안보 전략을 구축하려는 종합적 시도라 볼 수 있다.

1968년은 청와대 기습,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푸에블로호 사건 등 북한의 대남 도발과 베트남전 장기화라는 긴장 국면을 직접 반영하였다. 북괴 도발 대비, 비정규전, 대북 심리전은 대남 위협 대응을 중심으로 하였고, 국군 지휘체제, 군수 지원 개선, 병기 국산화는 군사조직 효율화를 겨냥하였다. 민방위 확립, 산업동원 법제화, 국가동원체제 개선은 총력전적 동원체제를 모색한 것이며, 경제개발과 국방비 조달, 방위산업 육성, 과학기술 발전은 자주국방을 경제개발과 연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연구는 군사·정치·경제·기술을 아우르는 종합적 안보전략 구상의 성격을 띠었다.

1969년의 연구는 닉슨 독트린 발표와 미군 감축 가능성, 북한 도발 지속이라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였다. 자주국방안, 경제개발 연계, 재정·경제 기반의 자주국방 연구는 독자적 방위역량을 모색한 것이었고, 전시동원, 민방위, 평화산업의 전시산업 전환 등은 국가 총동원체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 군수산업 육성, 철강공업, 국방비 조달 연구는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지향하였으며, 북한의 해상전략, 공중기습, 전쟁형태 연구, 대남심리전 대응은 북괴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1969년은 자주국방과 총력안보 구상이 성숙 단계로 이행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1957년부터 1969년까지 국방대학원 학생들의 연구는 전후 체제 정비에서 핵무기 시대 대응, 나아가 자주국방과 총력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 안보전략의 진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1950년대 말에는 군사 제도의 합리화와 북한 도

발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1960년대 초반에는 제한전·전면전 대비, 인적 동원과 군사교육, 군수 지원 체제를 통해 총력전적 대응을 모색하면서 강대국 전략 속 한국의 위치를 진단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에는 국가 재건, 사상전, 통일 담론이 결합되어 안보가 군사·정치·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중반 이후에는 경제개발계획과 자주국방론이 결합해 군수산업·재정·과학기술이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베트남전, 북한 무장도발, 한·일 국교 정상화, 닉슨 독트린 등 시의적 현안에 대응하는 논문들은 국제정세와 국내 안보를 긴밀히 연계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종합하면 이 시기 학생 논문들은 국가 발전과 자주국방을 동시에 지향하는 총력안보 체제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과정이자, 국방대 창설 의도와 정합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합참대

냉전이 첨예하게 격화된 1964년에는 핵시대 미·소 전략 개념과 NATO, 프랑스의 핵군 창설 논의, 중공군 및 일본 자위대의 연합작전 능력 분석이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다.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군의 전략적 좌표를 모색하는 한편, 상륙전·대잠전·방공체제·작전지휘권 등 전력 운용의 구체적 과제가 탐구되었다. 심리전·정훈교육·대북방송 연구는 북한의 대남 공작과 사상전에 대응하려는 시도였고, 군수지원·산업동원·농업경제·인구문제 연구는 총력전적 관점에서 안보와 사회·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학문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뒤를 잇는 1965년에는 북한의 군사력과 동맹체제 분석이 본격화되었고, 비정규전·유격전·화생방전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장교 진급제도, ROTC, 예비사단 교육 등 인력관리 제도의 합리화와 군사교육·지휘관리 개선이 병행되었으며, 공군 전천후 요격전력 재배치, 육군 항공대 창설, 무기체계 연구 등 현대전 대비 전력 강화가 이루어졌다. 국방비와 경제개발, 군수공업 및 군수지원체제 연구는 발전국가적 안보 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고, 일본 자위대 연구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앞둔 한국군의 전략적 위상 조정과 맞물려 있었다.

1966년 연구들은 베트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

며 국제적 연계와 국내 총력안보 정비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합동·연합작전 능력 강화, 군수지원체제 확립, 방공·민방위 제도 정비, 병역·인사제도 개편 등이 주요 과제였고,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 가능성, 중공 핵무장, 동북아 집단안보 구상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재점검하는 작업이었다. 이와 함께 대민지원·대간첩작전·정보 계획 개선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준비도 다루어졌다.

이어지는 1967년의 논문들은 베트남전 확대와 북한 무장도발 가능성 증대라는 긴박한 정세 속에서 합동·연합작전, 북한·중공 위협 분석, 군사제도 합리화를 축으로 발전하였다. 공지합동작전 교육, 신무기 공동운용, 해공력 강화가 제시되었고, 북한의 경제계획과 대남심리전, 중공의 핵무장 연구는 위협 분석을 심화시켰다. 또한 진급·정년제도, 군수지원체제, 국가동원체제 연구 등 다방면의 군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촉구되기도 하였다.

1968년에는 청와대 기습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푸에블로호 사건 등 직접적 위협이 발생하면서, 분란대책·대간첩작전·민방위·예비군 제도와 같은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동시에 미 극동전략, 중공 핵개발, 일본 자위대 연구가 국제 환경을 반영한 주요 논점으로 제시되었고, 군사작전지휘권·집단안보체제·국방외교 논의는 한국군의 위상과 전략적 역할을 규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정병화·병기 현대화·군수산업 육성·전시동원체제 등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1969년의 연구는 닉슨 독트린과 중·소 분쟁, 중공의 핵개발, 일본의 군비 증강, 소련 극동군 전력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하며 ‘자주화된 총력안보’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한·미동맹의 재평가와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다자적 집단방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북한의 재침·도발·게릴라전, 해상·해안 침투, 대심리전 강화는 불규칙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부각되었다. 아울러 군수산업 육성, 국방통신체제 발전, 전시동원 및 예비군 운용, 화생방 대비와 같은 연구들은 평시 준비와 전시 전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합동교리·합동작전훈련, 초급장교 양성, 군사교육·인사제도 개선 등은 전력의 질적 내실화를 지향하였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합참대학교 학생들의 졸업논문은 냉전 격화, 베트남전, 북한 도발, 한·일 국교 정상화, 닉슨 독트린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합동군사전략의 전문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성격을 뚜렷이 보여준다. 연구들은 핵무기 시대 전략, NATO와 프랑스 핵군, 일본 자위대, 소련·중공 군사력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전략적 좌표를 규명하는 한편, 상륙·대잠·방공·합동작전 능력과 군사교육·인사·군수제도 개선을 심화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게릴라전·심리전·도발 대응, 민방위·예비군·대간첩작전 연구는 불규칙 위협 대비 전략을 제시하였고, 군수산업·경제개발 연계·전시동원 연구는 자주국방과 총력안보를 지향하였다. 요컨대, 이 시기의 연구는 국제 전략환경과 국내 안보 현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합동작전 능력 강화, 자주국방 역량 축적, 국가발전과 안보의 통합을 추구한 집약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IV. 결론 : 포괄적 안보논의 재활성화의 고대

본 연구는 1955년부터 1969년까지 국방대가 주도적으로 생산한 국방안보연구의 궤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학문적 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국방대의 창설 배경, 제도적 성격, 교육 내용과 운영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해당 기관에서 출간한 각종 학술지와 학생 논문을 분석하여 국방대가 군사 분야를 초월하여 총체적 국가전략을 탐구하는 학문 지평을 개척하였음을 논증하였다.

국방대의 연구 성과는 단순한 군사 전문지식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사상 영역을 포괄하는 광의의 안보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계사적 냉전구도 속에서 전쟁과 분단의 경험은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안보 연구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하였기에, 당대는 국방 본연의 영역을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과 확장이 가능한 지형이었다. 이는 현재주의적 관점에서 무분별한 안보논리의 우위와 국가중심주의 만연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안보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미래 위협을 예견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당대 연구는 군사력 건설과 사회적 기반 강

화의 병행, 경제와 안보의 통합, 동맹 의존과 자주국방의 균형 모색, 비정규전과 복합적 위협에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경쟁, 사이버·우주 영역으로의 전장 확대, 경제·기술 패권 경쟁과 같은 복합적 안보환경과 연결되는 유효한 교훈이다. 국민 안보의식 제고, 산업정책과 안보의 연계, 동맹과 자주적 역량의 균형, 회색지대 위협 대응 전략 등은 이미 1950-60년대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에는 이를 새로운 조건 속에 재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포괄적·선제적 안보 개념은 한계 또한 분명하다. 안보의 범주가 지나치게 확장되면 실천력이 약화되고, 군사적 시각이 정치·사회 영역을 과도하게 규율하여 민주적 다양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안보 분야에의 지나친 경도는 위협의 과잉인식과 경제·사회 정책에의 강제와 억제라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방안보연구는 과거의 교훈을 계승하되,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균형 있는 접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국방안보연구의 과제는 과거 국방대가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복합적이고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대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학문적·정책적 전략을 선제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국방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지속 가능한 전략적 지혜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방대 연구 산물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학술적·실천적 함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문자료

- 『군사연구』, 『대전략』, 『번역월보』, 「안보과정 논문」, 「합참대 논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회임시속기록」, 「예산결산위원회속기록」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
「국방연구원령[대통령령 제1229호]」
「국방대학원설치법[법률 제937호]」
공보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서울: 공보실, 1959)
국방군사연구소. 『國防政策變遷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國防大學. 『國防大學이란?』 (서울: 國防大學, 1956).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30년사 편찬위원회, 『安保問題研究所 30年史』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國防大學院三十年史編纂委員會. 『國防大學院三十年史』 (서울: 國防大學院, 1987).
국방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國防大學校 50年史』 (서울: 국방대학교, 2005)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60년사(1955~2015)』 (서울: 국방대학교, 2015).
노영기 외.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서울 : 선인, 2004).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서울: 창비, 2009).
陸士三十年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六軍士官學校三十年史』 (서울: 육군사관학교, 1978).
김지훈. “한국군 국방대학 창설과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이론의 형성”, 『역사와현실』 제131호 (2024).
노영기. “5·16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제57호 (2001).
문준호. “한국 초기 보훈제도의 형성(1948-1963)과 ‘4.19의거’의 정치적 포섭”,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 정치—1950년대 번역 정책과 번역문학장”, 『대동문화연구』 제71권 (2010).

- 이미숙. “6·25전쟁기 미국의 한국군 증강정책과 그 특징”, 『군사』 제67호 (2008).
- 이봉범.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 — 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9권 (2012).
- 이인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시론(상)”, 『군사평론』 제6호 (1959).
- 허 은. 『냉전과 새마을 :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 (서울: 창비, 2022).

제 3 장

국제 환경과 국내 정치의 급변기 (1970-1987)

국방대학교 손경호

요 약	58
I. 서 론	60
II. 시대적 상황	62
III. 연구 추세	65
IV. 이론적 · 정책적 함의 및 결론	85
참고문헌	88

요 약

학교는 국가를 대표하는 안보 전문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으며 이는 우선 연구 산출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 『국방연구』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에 대한 분석, 베트남전쟁의 특색 분석, 중·소분쟁과 한국의 통일문제,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조된 데탕트의 물결을 한국 사회에 설명하였다. 이어서 『국방연구』는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전반적인 방위산업의 개념과 국내 자원과 공업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발전 방향, 그리고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실체를 설명하는 연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논문 번역집인 『대전략』은 베트남전쟁과 연관한 베트남의 역사, 이에서 파생된 미국의 라오스 공세, 그밖에 동남아 국가들을 분석하여 미국의 정책 변화가 동남아에 가져올 파급 효과를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972년에 안보문제연구소는 독특한 시도를 하였다. 연구소 창설과 동시에 기획된 것으로 국내에 안보 정세를 전문적으로 다룬 총람 형태의 자료집 겸 연구서를 출간하기로 한 것이다. 『안보문제연구』라는 제목을 지닌 이 보고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안보에 관한 사건을 연표식으로 기록하고 그 가운데 이슈별, 지역별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수록하였다. 이 연구서는 안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교재로도 활용이 되었다.

학교의 안보문제연구소는 1978년부터 국방부 정책과제 혹은 수시 부여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의 대부분은 카터가 제기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과 관계있는 과제였다. 1979년부터 안보문제연구소가 수행기 시작한 기초과제는 주로 장기적인 연구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요 국가의 국방정책으로 미국, 일본, 소련을 다루어 연구하였고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신냉전으로 변해가는 국제정세 가운데 북한의 군사정책과 북한이 제의한 군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1980년도 기초과제는 북한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특히 군사문제에 집중하였으며 전쟁과 직접 연관된 잠재적인 군사능력,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

는 조건,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평가 방법, 남북한의 군축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북한의 사회 구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도 11개의 주제 가운데 5개 주제가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신냉전이 발생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소군비경쟁을 시작하면서 학교의 연구 기조는 바뀌었다. 『국방연구』는 미국의 재무장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정책과 대 아시아 정책은 꾸준한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다. 그밖에도 『국방연구』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 해상 교통로 확보를 주제로 한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방연구』는 북한에 발생한 지도자 승계 문제를 설명하고, 북한이 자행한 테러리즘을 분석하였고, 안보 상황에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국방대학원의 위상은 높았다. 『국방연구』에 대통령의 유시가 게재되기도 하였으며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논문을 투고하였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 유능한 외국 연구자들의 글을 실었다. 학교가 꾸준히 시행해 온 번역사업을 통해 소개된 외국 논문들과 번역서들은 한국 사회의 안보학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었다. 안보문제연구소가 수행한 기초과제와 정책과제는 국방부와 청와대의 중요한 정책적 수요를 지원하였고 이 연구들이 논문으로 출간되어 한국 사회의 안보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독자적이고 권위 있는 연구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학교가 유지하였던 명망과 평판은 내부적으로 작동하였던 효율적인 연구와 교육의 연계 체계로 인해 형성되었다. 안보문제연구소가 교내 교수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물을 만들고 이것이 10년 가까이 축적되었으며 교재로도 활용되었다. 연구소는 또한, 향상된 교수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중요 부서에 정책 서비스를 수행하여 한국 사회가 다시 학교를 찾고 학교의 교수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I. 서 론

1970년부터 1987년까지 국방대학원이 마주하였던 현실과 이에 도전하였던 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 시기는 국제 환경에서 시작된 변화가 남북한 관계를 격변의 시기로 유인하였고 한국의 국내 정치 또한 이에 따라 요동하였다. 이 시기의 초반에는 미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대전략이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데탕트가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에서도 남북한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기적적으로 7·4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가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이전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새로운 냉전에 자리를 내주었고 한반도 역시 다시 긴장된 정전체제로 회귀하였다. 레이건(Ronald W. Reagan) 대통령이 시작한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으로 대표되는 미·소간의 군비경쟁은 냉전의 치열함을 단적으로 증명하였다.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과도한 자원을 투자하여 체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왔다.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가 1986년 노쇠한 제국을 일으키려 단행했던 페레스트로이카(перестройка, 개혁)와 글라스노스트(гласность, 개방)는 오히려 소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편 중국은 1978년 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으며, 1984년에는 14곳에 경제특구가 설치될 정도였다.

국방대학원은 격변하는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우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교육을 위해 교과 과정을 유연하게 발전시켰다. 1971년에 기존의 국가안전보장과정에 더하여 효율적 경제발전을 위한 국방산업관리과정을 만들었고 1975년에는 1963년부터 존속해 오던 합동참모대학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군사전략기획과정을 추가하였다. 1979년에는 이들 과정을 안보과정으로 통합하였다. 같은 해에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1981년부터 교육을 개시하였고 1983년에 석사과정 가운데 국방과학과를 신설하였다. 무엇보다 학교는 1972년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를 설치하여 국방부와 국가 수뇌부에 정책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안보 분야의 장단기 문제에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 1977년에는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국군정신전력 학교를, 1980년에는 국방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위한 국방관리단기과정을 창설하였다.¹⁾

이 기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방대학원 교수들과 학생들의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보과정(정규과정)과 석사과정 학생들의 논문이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1974년까지 존속하였던 합동참모대 학생들의 논문이 분석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하여 1958년부터 학교가 출간한 『국방연구』와 1959년부터 1973년까지 발간된 『대전략』과 안보문제연구소가 1974년부터 시작한 안보총서 사업의 대상 서적 역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해외의 안보 분야 서적을 국내에 소개해 왔다. 한편, 안보문제연구소는 창설 이래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시과제 혹은 부여과제의 형태로 국방, 안보 문제를 연구하여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해 왔고 1979년부터는 기초과제 내지는 정기과제의 이름으로 교내 교수진들의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해 왔다. 해당 과제들은 당시 긴박한 현안이나 장기적인 안보 문제를 다룬 것으로 분석의 가치가 높다. 다만 연구 산물이 세대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당 시기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추세를 분석하고 오늘날 국방과 안보 분야에 미치는 이론적 혹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연구 대상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자세히 고찰하되 과제가 요구한 군사전략, 국방운영, 한미동맹, 국방개혁 그리고 방산 분야의 발전 사항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분석을 위한 관점을 확립한다. 이어서 분석 대상이 되는 산출물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으로 구분하여 당시 교수들과 학생들의 인식, 견해, 주장을 분석한다.

1) 국방대학원. 『국방대학원 60년사』 (서울: 국방대학원, 2015), pp.47-70.

II. 시대적 상황

이 시기는 세계정세가 격변하는 시기였으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역시 급변하는 시기였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변화가 존재하였던 시기이다. 1969년 닉슨(Nixon) 독트린 발표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며 1972년에는 미국의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화해의 물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가져왔다. 1973년 베트남전쟁이 종결되었으며 서독과 동독은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는 미국과 동독이 국교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1975년 4월 베트남이 베트남에 완전히 항복하면서 데탕트가 가져온 화해의 물결과는 다른 파장을 끼쳤다. 한국 사회는 1972년의 기념비적인 남북공동성명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가 1974년 문세광에 의해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회귀하였다. 그해 11월에는 고랑포, 이듬해 3월에는 철원에서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면서 한국 사회에는 북한의 침략적 속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베트남의 패망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겨 주었고, 북한의 행태에 의해 남북한에는 다시 대결적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1978년 10월 판문점에서 제4땅굴이 발견되기까지 이어졌다.

사실 한국 정부는 닉슨독트린으로부터 파생된 주한 미군 감축의 파도를 맞고 있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베트남전쟁의 와중에 발표한 주한 미군 제7사단의 철수 방침 이후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었다. 미군의 철수는 1977년 이후 카터(James E. Carter) 대통령에 의해 다시 제기되어 미군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철수하기 위해 움직이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미군의 한반도 철수는 6·25전쟁 이후 형성된 정전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한국 국민은 지독한 안보 불안을 겪게 되었다. 더구나 이는 한국이 베트남전에 병력을 파견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미국의 전쟁 수행 노력에 상당히 이바지하였음에도 발생하여 한국 정부를 심히 당황하게 하였다.

이 시기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력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였다. 정부는 1970년 8월에 “항토예비군 설치법”을 제정하였으며 국방과학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국민 동원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당시 거의 전량을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던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1973년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발효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1974년부터 1981년까지 1차 전력증강사업(울곡사업)을 실시하여 3조 1,402억원을 투자하였다.²⁾ 한국 군이 사용할 기본 병기를 국내 기술진이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한 미군의 철수는 한국을 위한 안보 전력에 보충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함을 의미하였다. 1970년 7월 포터(William Porter) 주한 미 대사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주한 미군의 철수를 통보하자 한국 정부는 이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고 배신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³⁾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1년 3월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 제7사단과 3개 공군 비행대대가 철수하였고 휴전선 경계 임무도 한국군에 완전히 이양되었다. 미국은 다시 철군 정책을 추진하여 카터 시기에는 완전한 철수를 위한 시간표를 마련하였다. 카터는 주한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기에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군의 철수로 인한 여파를 줄이기 위해 미군의 1진이 철수하기 이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하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군사원조에 합의하였다.⁴⁾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11월 7일 창설되었다.

카터가 주도한 미군의 철수는 1979년 멈추어졌다. 카터의 방침은 도처에서 반대를 받았는데 특별히 한국 내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 사령관 베시(John W. Vessy) 대장과 참모장 싱글러브(John K. Siglaub) 소장은 철군이 초래할 안보 상황의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들은 소신을 밝힌 이유로 본국으로 소환되기까지 하였다. 철군의 동력이 사라진 좀 더 중요한 계기는 북한의 전력이 30% 정도 낮게 평가되

2) 이미숙.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군사』 95권 (2015), pp.108-111.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60.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p.127.

어왔다는 CIA의 정보보고였다.⁵⁾ 결국, 카터는 1979년 7월 남아 있던 미 제2사단의 철수를 중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1979년 이후 시작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세계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에는 다시 냉전의 기류가 팽배하게 되었다. 1981년 임기를 시작한 레이건(Ronald W. Reagan)은 소련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그는 1983년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로 규정하며 소련의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시작하였다.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만이 아니라 새로운 분쟁 형태인 테러리즘이 빈발하여 다층적인 안보위협을 경험하게 되었다. 1983년 10월 두 대의 자살폭탄 트럭이 베이루트에 있던 미 해병대 막사 건물에 충돌하여 무려 242명의 해병대원이 사망하였다.

이 시기 한국의 국내 정치는 심각하게 요동하였다. 1972년 유신헌법이 채택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적이고 더욱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제도화되었고, 이 체계는 오래지 않아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자신이 피격됨으로써 끝을 맺었다. 한국의 정국은 12·12 군사반란과 이듬해 발생한 5·18 광주항쟁을 지나며 신군부 세력의 철권 아래 장악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 비로소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되었다. 북한은 같은 시기 김일성이 국가주석에 취임하여 독재 권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였으며 김정일로의 권력 세습을 완성하였다. 이 기간 한국의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북한의 경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본 연구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연구 대상 시기를 1970년부터 1979년까지와 1980년부터 1987년까지로 구분한다. 이어서 해당 시기의 연구는 첫 두 해는 연단위로 연구물을 분석하고 이후 연구의 편의를 위해 첫 시기는 4년 단위 두 번째 시기는 3년 단위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분석 대상 문건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5) Niksch, Larry A.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Past Shortcomings An future Prospects," *Asian Survey*. Vol. 21, No. 3 (1981), p.326.

Ⅲ. 연구 추세

1. 1970-1979년 시기

본 연구는 해당 시기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로 연구 산물을 횡적으로 분석하고 이어서 연구 산물별로 통시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전자에 의한 연구는 국방대학원이 매년 주도적으로 시대의 필요에 부응한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며 국가의 정책 수요에 맞춘 정책 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연구 산출물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이 분석을 통해 국방대학원이 일정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문제의식을 개발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며, 학생 교육과 정부 정책에 공헌하기 위한 궤적을 연 단위로 확인하고 축적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자의 방법 즉 연구 산물별 종적인 추이의 분석은 연구 산물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연구자의 성격에 따라 연구 산물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연구와 발표 경로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들 산물은 자연스럽게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교수들이 작성한 학술 논문이나 기초과제(과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인용되며 일정한 영향력 범위를 지닌다. 반면 학생들이 작성한 논문은 그렇지 못하다. 다만 논문을 작성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내에서의 신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문에 수록된 개념과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선정한 논문 제목은 당시 한국 사회나 정부가 고민하였던 문제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기초과제는 학교의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현실 문제를 인식한 위에 한국 사회의 필요에 답하기 위해 선택한 주제들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 과제는 자연스럽게 당시 한국 사회 특히 국방·안보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본 연구는 동일한 맥락에서 안보총서에서 소개된 도서의 제목을 검토한다. 그다음으로 이 연구는 국방부에서 필요에 의해 발주하거나 요구한 정책과제 제목을 분석한다. 이 주제는 당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긴급하고

중요한 필요에 따라 요구된 과제로 국방·안보 분야의 내밀한 현실을 설명해준다.

본 연구는 해당 시기의 연구 산출물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이 시기 『국방연구』는 꾸준히 발간되었고, 『안보총서』는 1974년부터 발간되었다. 『대전략』은 1973년 제15권 제2호를 끝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다. 한편 기초과제는 1979년부터 정식으로 연구되어 발간되었으며 정책과제는 그보다 앞선 1978년부터 연구된 흔적이 남아 있다. 안보과정 학생들의 논문은 계속 작성되었는데 1972년부터 1975년까지는 안보, 관리의 두 분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이는 학교가 1972년 학교의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규교육과정을 국가안전보장과정과 국방산업관리과정으로 나누었기 때문이다.⁶⁾ 이어서 학교는 1975년 3월 1일 합동참모대학 과정을 폐지하고 대신 1976년 9월 1일부터 군사전략기획과정을 대학원의 정규교육과정에 신설하였다. 그 영향으로 1977년부터는 안보, 관리에 이어 전략 분야 논문이 따로 작성되었다. 물론 합동참모대학의 논문은 1975년의 논문이 마지막 논문이 되었다.

가. 1970년의 연구

1970년 『국방연구』는 28권과 29권으로 발간되었으며 28권에는 대통령 유시가 가장 먼저 게재되었고 미국의 닉슨 독트린에 대한 분석, 베트남전쟁의 특색 분석, 중·소분쟁과 한국의 통일문제,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에 대한 고찰이 게재되었다. 29권에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 및 소련의 경제 상황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아울러 군의 지휘기구 통합에 대한 연구가 게재되었다. 특별히 제28권은 베트남전쟁, 이에 참전한 한국의 군사안보,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닉슨 독트린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시대적 안보 상황을 고루 반영하였다. 대통령의 유시는 7월 23일 국방대학원과 합동참모대학 졸업식에서 행한 유시를 게재한 것으로 학교와 학교 발간 학술지인 『국방연구』가 지닌 권위와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주적인 역량의 확보와 주체적인 의식이 긴급하다고 주장하였다.⁷⁾

6) 국방대학원 (2015), p.51.

1970년도에 『대전략』은 53편의 논문을 번역하였다. 대체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주변국의 안보정책을 다룬 논문들이 번역되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베트남의 역사, 이에서 파생된 미국의 라오스 공세, 그밖에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이다. 물론 새로운 닉슨 행정부의 독트린에 관한 논문과 소련과 중국의 안보에 관한 논문들도 다수 존재한다. 번역의 의도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동남아에 가져올 파급 효과를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 안보과정 학생들이 작성한 논문 가운데 국방·군사 분야에 관한 논문이 전체 79편 가운데 42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별도로 북한의 군사력, 군사 전략, 통일전략, 그리고 경제에 관한 연구 등 북한과 관련한 논문이 13편이었다. 그 외에 사회와 경제에 관한 논문이 약간 작성되었다. 같은 해 합동참모대학 학생들은 모두 국방과 군사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안보과정과 달리 합참대 학생들의 논문 가운데 당시 진행되고 있던 베트남전쟁에 관한 논문이 4편 작성되었다. 안보과정 학생들이 연구한 주제 가운데 베트남전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1971년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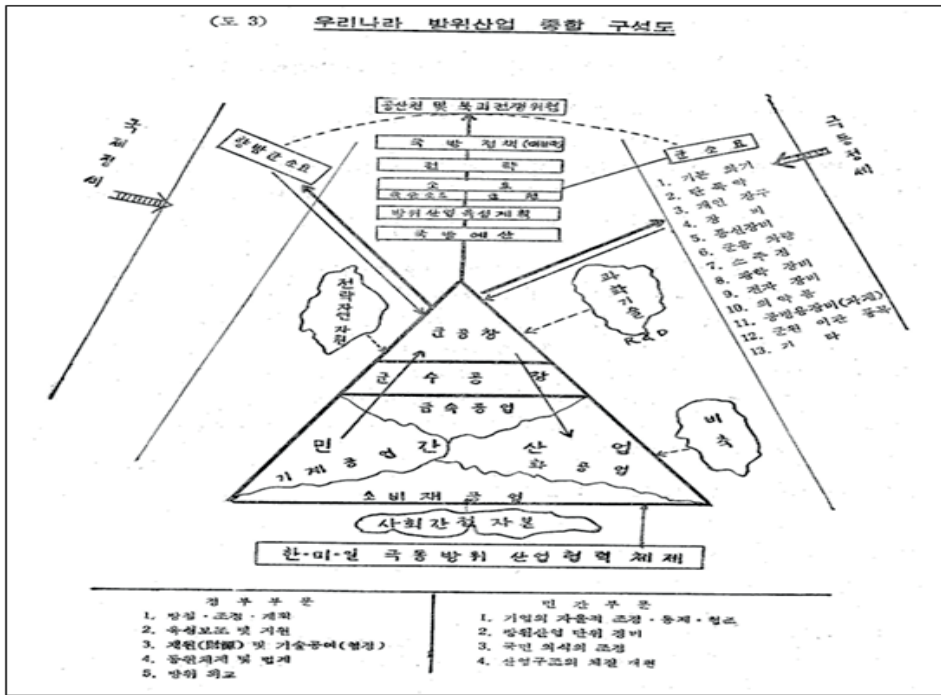
1971년 『국방연구』는 30호를 방위산업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여 7편 가운데 4편이 방위산업 관련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민병천은 자주국방의 개념과 한국적 적용문제를 전병원은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당면문제를, 백환기는 방위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을 논하였고 윤응렬은 필요한 국방 과학기술을 분석하였다. 국방대학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전반적인 방위산업의 개념과 국내 자원과 공업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발전 방향, 그리고 전략을 제기하기 위해 특별 논문을 기획하여 출간하였다. 특히 전병원의 논문은 그 자체로 방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서라고 할 만큼 포괄적이며 심층적으로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⁸⁾ 아래 논문의 페이지는 논문

7) 박정희. “대통령 유시,” 『국방연구』 28권 (1970), pp.6-12.

8) 전병원.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의 당면 문제,” 『국방연구』 제14권, 제30호 (1971).

이 지닌 깊이와 안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1. 방위산업 육성 개념도, 출처: 전병원.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의 당면 문제,” 『국방연구』 제14권, 제30호 (1971), p.44.



1971년의 『대전략』은 계간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권호별로 주제를 정하여 지면을 구성하였다. 권호별 번역 논문의 편수는 대략 6-10편 정도였다. 춘계호는 닉슨 독트린에 대한 분석을 다루어 이로 인한 동남아 정세와 정책의 진도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분석 대상 동남아 국가로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말레이시아를 각각 다룬 연구를 포함하여 마치 동남아 정세분석의 종합판 같은 성격이 되었다. 하계호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은 중국으로 경제와 중국의 대외 진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담았다. 추계호는 소련의 전략과 외교 정책을 다룬 연구를 주로 소개하였고 동계호는 중·소관계,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공산당 동향 등을 다룬 연구를 번역하였다. 여전히 국방대학원 연구자들의 관심은 미국

의 안보정책에 있었고 이에서 점차 다른 곳으로 관심을 넓혀가는 양상이 확인된다.

안보과정 학생 논문은 80편의 논문 가운데 28편의 논문이 국방과 군사 분야의 주제 아래 작성되었고 8편이 북한을 주제로 한 논문이었다. 여기에 18편의 논문이 외교와 국제정세를 다루었고 16편의 논문이 사회 문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양한 주제 분포가 나타났다. 인상적인 것은 방위산업에 관한 논문이 세 편 등장하여 학교 교수진의 방위산업 연구가 내부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음을 짐작하게 한다. 합참대 논문은 북한 군사문제를 포함한 전통적인 군사 분야 주제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다. 1972-1975년 연구

1972년은 국제정세가 급변한 해였다. 2월 21일부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그에 따른 상하이 코뮌িকে가 발표되었다. 5월에는 미·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ABM 조약, SALT I(전략무기 제한 협정), 미·소 해상 충돌 방지 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세계는 데탕트의 조류를 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에도 조류가 당도하여 7월 4일에는 한국과 북한의 대표들이 마주 앉아 적십자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 학교에도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대학교에 안보문제연구소가 신설되었다.⁹⁾ 안보문제연구소는 학교의 전문적인 안보 연구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보의 난제를 해결할 방침을 제시하고 사회에 안보 연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소장은 국방대학원장이 겸하되 부소장이 연구소 업무를 관장하였다. 초대 부소장은 김영준 교수였으나 3개월 후 국토통일원 산하 통일연구소장으로 이임하고 김종휘 교수가 1972년 5월 17일 부소장직을 이어 1980년 7월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 이 시기부터 『국방연구』를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였다.¹¹⁾

안보문제연구소의 기획자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연구』 15권 1호를

9) “국방대학원에 안보 연구소,” 『조선일보』 1972.2.12.

10)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 30년사』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p. 4.

11) 이전까지는 교수부에서 발간하였다.

“두 개의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는 김종휘, 황병무, 전정환, 김한식 등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두 개의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 질서(김종휘),” “미·소 간의 군비경쟁과 군축(황병무),” “모스크바 정상회담과 구주 안보(전정환),” “미·소·중공의 삼각관계와 동남아(김한식),”을 게재하였다. 연구자들은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지나가는 한국 사회의 독자들에게 명확한 이해와 관점을 제공하였다.

김종휘 교수는 세계가 냉전에서 공존의 세계로 이전하였다고 진단하며 5강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약소국에는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여 약소국들은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황병무 교수는 미국과 소련이 시작한 군축 회담을 논하며 미국의 전략적 충분성과 소련의 대미 전력 균형을 분석하여 두 나라가 각자에게 유리한 핵전략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큼을 지적하였다. 그는 군축회담이 정치적인 흥정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¹³⁾

『국방연구』 15권 2호는 북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모두 4편의 논문이 북한 문제를 진단하였는데 남북 대화 전후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군사를 분석하였다. 최영은 “전환기의 북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과 평화공세”에서 북한이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에 따라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¹⁴⁾ 안보문제연구소의 이 같은 편집은 전반기에 두 개의 정상회담이 촉발한 세계정세의 변화를 설명하였던 것처럼, 남북회담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 북한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편 제15권부터는 학교에 신설된 국방산업관리과정의 교수들이 논문을 게재할 공간이 마련되어 방위산업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1973년도 『국방연구』는 안전보장편과 국방관리산업편으로 구성을 나누어 각 영역별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이듬해 17권 1호에 정치,

12) 김종휘. “두개의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질서,” 『국방연구』 제15권, 제1호 (1972).

13) 황병무. “미·소간의 군비경쟁과 군축,” 『국방연구』 제15권, 제1호 (1972).

14) 최영. “전환기의 북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과 평화공세,” 『국방연구』 제15권, 제2호 (1972).

외교 및 사회 심리편, 경제 및 국방관리편, 군사 및 과학기술편으로 세분화 되었다가 2호에는 영역 구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1975년의 『국방연구』에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1974년과 1975년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는 당시 중동발 석유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안보의 심각성을 반영한 “에너지 수급대책과 전망,” 및 “중동석유문제와 국내정치”가 있으며,¹⁵⁾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새마을사업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있다.¹⁶⁾

『대전략』은 1973년 제15권 1·2(춘·하계)호를 끝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1972년에 『대전략』은 아시아의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중국, 일본 공산당, 베트남 등이 주 대상이었으며 닉슨의 불개입 정책에 대한 연구가 번역되었다. 특히 1972년의 14권 3·4호는 중국의 권력투쟁, 경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정책 및 미·중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 권호에서는 일본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대전략』의 폐간과 동시에 연구소는 안보총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1974년 가장 먼저 번역된 도서는 『국방정책의 구성요소, *Components of Defense Policy*』로 연구소 부소장인 김종휘 교수를 포함한 13명이 번역하였다. 1975년에는 두 권의 저서가 번역되었는데 『핵 시대의 국방경제학, *The Economics of Defense Policy*』와 앙드레 보프르(Andre Beaufre)의 『전략론, *An Introduction to Strategy*』가 소개되었다. 전자는 김봉구 교수와 2명이 후자는 이기원 교수와 이종학 교수가 번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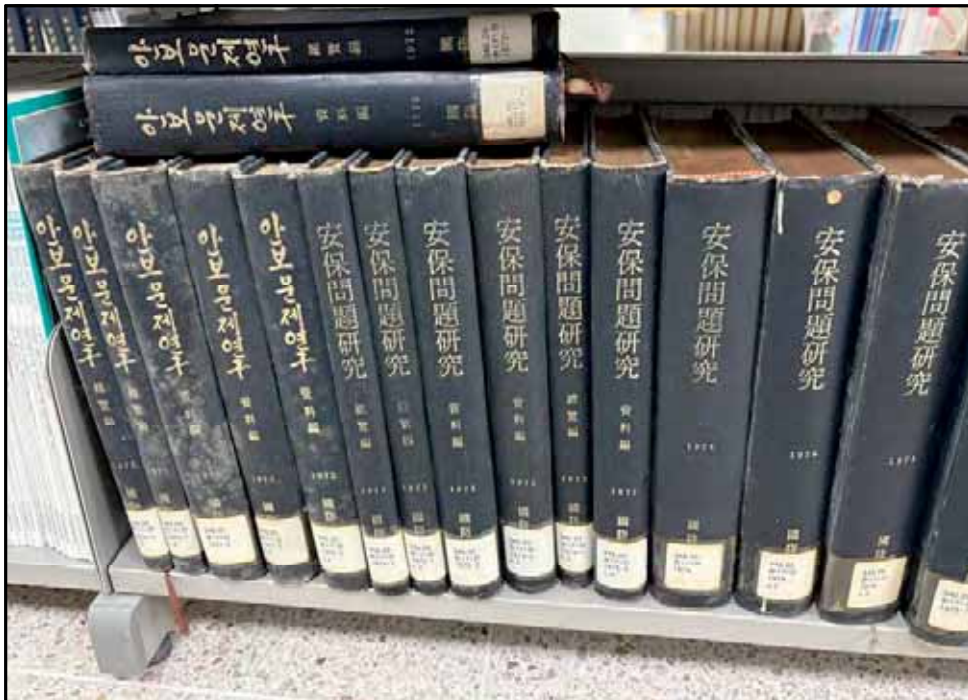
1972년에 안보문제연구소는 독특한 시도를 하였다. 연구소 창설과 동시에 기획된 것으로 국내에 안보 정세를 전문적으로 다룬 총람 형태의 자료집 겸 연구서를 출간하기로 한 것이다. 『안보문제연구』라는 제목을 지닌 이 보고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안보에 관한 사건을 연표식으로 기록하고 그 가운데 이슈별, 지역별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수록하였다. 안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참고 및 기준이 될 수 있는

15) 장형태. “에너지 수급대책과 전망,” 『국방연구』 제17권, 제2호 (1974); 최영순. “중동석유문제와 국내정치,” 『국방연구』 제18권, 제1호 (1975).

16) 안용식. “새마을사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방연구』 제18권, 제1호 (1975).

이 보고서는 매년 1회씩 발간되다가 결국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1978년을 끝으로 폐간되었다. 현재 1978년 출간본을 제외하고 국방대학교 도서관에 전집이 국회 도서관에 일부 보관되어 있다.

그림 3-2. 『안보문제연구』 장서현황, 도서관 2층 연속간행물실(2025.10.2. 기준).



『안보문제연구』는 전년도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세분석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첫 장은 대부분 전반적인 평가로 작성되었으며 1972년부터 1977년까지는 안보문제연구소 부소장인 김종휘 교수가 집필하였다. 1978년도 보고서는 외부 연구자가 첫 장을 작성하였다. 집필자들은 전반적인 평가 이후 정치,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 따라 세계정세를 분석하고 이후 지역별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정세를 분석하는 안보과정 교과서의 교재로 활용되어, 연구와 교육이 조화를 이룬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¹⁷⁾ 이는 연구소가 학교의 교육 체계 안에 완

17) 장서의 일부 표지에는 ‘2교과’와 같이 안보과정 교과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표식이 붙어 있다.

전히 정착하였음을 방증한다.

1972년의 안보과정 학생들은 미국과 중국의 급격한 관계개선에 관한 논문을 6편이나 작성하였고 북한에 관한 연구가 줄어든 대신 북한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 관계 완화에 대한 논문이 등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닉슨 독트린에 따른 안보 문제를 고민하는 논문과 일본의 방위력 증가에 따른 한국의 안보 문제를 다룬 연구도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1972년 안보과정 학생들의 논문은 달라진 당시의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려는 성향을 지녔다.

1973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졌다. 남·북 적십자회담의 영향으로 인해 학생들은 남북 관계개선에 관한 논문을 4편을 작성하였으며, 그밖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 호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호응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1974년도도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 2편 작성되었다. 1975년도 안보과정 학생들의 논문은 광범위한 안보 문제와 산업관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남북한 관계개선에 관한 논문은 경제교류를 다룬 논문 1편으로 줄었다. 이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멈추고 경쟁이 재개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전과 달리 북한의 무력 통일 정책에 관한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고 북한 연구 자체가 4편으로 많지 않았다.

1972년부터 1975년까지 합동참모대학 학생들의 논문은 순수한 군사 분야 주제에 따라 작성되었다.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2편이 작성되었는데 모두 군사적 대응책을 모색한 연구였다. 이는 합동참모대학의 교육과 인식의 성향이 군사문제를 중심에 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동참모대학의 교육은 1975년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라. 1976년-1979년 연구

1976년부터 1977년까지 그리고 1979년의 『국방연구』는 다양한 안보 분야 주제에 관한 연구를 수록하였다. 고전적인 전쟁이론은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 동맹에 관한 이론, 그리고 데탕트와 유럽, 일본의 방위정책 등이다. 그런데 1978년 제21권 1호는 긴박한 현안에 집중하였다. 주된 문제는 카터 대통령이 제기한 주한 미군의 철수였다. 이로 인해 박봉식 서울대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자주국방”을 계

재하여 주한 미군이 철수하게 된 미국의 경제 및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을 일본이 메우는 식의 안보협력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한편, 충남대학교 이기원 교수는 미군 주둔의 연원과 경과를 설명하며 카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화력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는 자주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¹⁹⁾ 이와 관련하여 북한, 중국, 소련의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와 한국 방위산업의 장래에 관한 연구가 함께 수록되었다.

안보문제연구소는 1978년부터 국방부 정책과제 혹은 수시 부여과제를 수행하였다. 1978년 첫 정책과제는 “미 지상군 철수와 한반도 병력체제에 관한 연구”로 전정환 교수가 수행하였다. 나머지 과제 가운데도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 억제 기능에 관한 연구” 그리고 “북한군 무기체제에 관한 연구” 등은 카터가 제기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과 관계있는 과제였다. 1979년에는 1978년도의 6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38건의 정책과제가 수행되었다. 이 해에 북한군에 관한 연구도 몇 건 수행되었지만 군사 문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다.

1979년부터 안보문제연구소가 수행기 시작한 기초과제는 주로 장기적인 연구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요 국가의 국방정책으로 미국, 일본, 소련을 다루어 연구하였고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신냉전으로 변해가는 국제정세 가운데 북한의 군사 정책과 북한이 제의한 군축을 연구하였다. 또한, 한국군에 대한 연구로 최창윤 교수가 국방 장기정책 구상을 연구하였고 김종휘 교수와 최병갑 교수가 국방 중요정책 보고서를 연구하였는데 이는 국방백서를 위한 기본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첫 기초과제 연구는 과제 취지를 살려 장기적인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였다.

기간 중 안보총서 사업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변화에 관한 서적을 소개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었다. 1976년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Deterrence and Defense in Korea: The Role of U.S. Forces,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가 소개되었고, 1979년에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의회 보고서,

18) 박봉식. “한,미,일 안보협력과 자주국방,” 『국방연구』 제21권, 제1호 (1978), p. 24.

19) 이기원. “주한미지상군철수와 자주국방방향,” 『국방연구』 제21권, 제1호 (1978).

*The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와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가 번역되었다. 안보총서는 한국 사회의 초기의 관심사였던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료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였다.

1976년도 안보과정 학생들은 전년도에 비해 30% 정도 인원이 증가하였다. 합동참모대학교 과정을 전략기획과정으로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이 해에는 모두 136편의 논문이 작성되었으며 안보, 산업관리와 전략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작성되었다. 우선 눈에 띄는 주제는 자주국방이다. 이와 관련한 논문이 5편이 등장하였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다룬 연구도 등장하였다. 해당 연도에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분석한 연구는 16편이다. 이는 합동참모대 과정에 존재하던 연구 풍토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고 남북 대화의 단절, 베트남 정세의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77년 안보과정 학생들의 논문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1978년에는 미군 철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등장했다. 미군의 철수로 인한 중국과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혹은 미군의 철수가 변화시킬 일본의 역할, 한반도 국제보장체제의 구상 등의 연구가 안보 분야에서 등장했다. 한편, 전략 분야에서는 미군 철수에 따른 대응전략과 주변 국가들의 군사 정책에 대한 분석이 등장하였다. 1979년에도 자주국방 및 미국의 대동북아정책 변화를 주제로 한 논문이 등장하였다.

2. 1980-1987년 시기

가. 1980년의 연구

앞선 시기의 연구와 동일하게 우선 해당 시기에 매년 안보문제연구소가 선정한 기초과제의 제목을 살펴본다. 1980년도 기초과제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3-1. 1980년도 기초과제 주제

북괴의 대남전쟁 도발을 위한 북괴내부, 한국내 및 국제적 여건
남북한 군사력 평가방법 개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억제요소와 방향
북괴 군축제외에 대한 대비책 (남북한 상호 강군 감군 방안 포함)
동북아 4강 관계변화 추세와 한국안보
대공산권 접근정책의 방향과 방법문제
북괴의 잠재 군사능력 판단
세계주요국의 신무기와 전략전술의 발달
북한 주민구성과 의식구조 및 대북괴 국가 심리적 대책
국방백서
미국의 군사정책의 현황과 방향

1980년도 기초과제는 북한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특히 군사문제에 집중하였으며 전쟁과 직접 연관된 잠재적인 군사능력,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남북한의 군축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북한의 사회 구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당해 연도 11개의 주제 가운데 5개 주제가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 그 밖의 주제는 안보 분석의 대상을 한반도에서 주변 4강으로 확장한 동북아 정세, 전쟁 억제를 위한 방안, 세계적인 무기체계 발전 추세와 전략, 전술의 발달을 분석하였다. 여기에 국방백서 및 미국의 군사정책을 분석하는 주제가 추가되었다.

이 해의 연구 주제는 당시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전형적인 이슈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남북적십자회담 대신 북한이 파 내려온 땅굴과 대통령 영부인 암살 사건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에 카터로부터 비롯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불안감, 소련이 감행한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한국의 대표적 안보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인 국방대학원의 교수들로 하여금 목전에 있는 적을 다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게 하였다. 더구나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강력한 통치자를 상실하고 혼미한 정국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안보 관련 기구가 지닌 속성으로 인해 국방대학원은 불안한 한국 사회의 외연을 강화하는, 군사적 안보에 더욱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도 국방대학원은 12건의 정책과제를 제출하였다. 정책과제는 북한에 관한 주제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당시 국방 기관의 필요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이 연구되었다. 다음은 해당 연도 정책과제 주제이다.

표 3-2. 1980년도 정책과제 주제

주변 군사정세 브리핑 슬라이드, 시나리오
파키스탄 정세 연구보고
미 육군장관 민간 자문위원회에 대한 브리핑 자료검토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회의 참석
'82 국방기본정책 자료
한미 항공 운수 협정 개정안 검토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유엔 전권 대표회의 대책(안)
중공경제의 현대화에 따른 기술개발 방향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 전망
환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의 구조
유로커뮤니즘 비판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정책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는 중국의 경제 현대화, 환태평양 공동체 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 전망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다룬 주제도 존재하지만 특별한 회의 참석을 준비한 연구와 심지어 슬라이드로 만든 설명자료도 존재한다. 정책과제 주제가 설명해 주는 것은 1980년도에 국방대학원은 국방부의 현실적 필요를 긴밀하게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정책과제에는 기본보고서와 달리 미국 및 중국의 정책 분석과 전망이 다루어진 것이 특이해 보인다. 이는 수요 기관이 해당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국방대학원은 안보총서로 『국방관리, *Defense Management*』, 『미·소 군사력 비교, *Imbalance of Power*』, 『80년대의 아시아 안보, *Asian Security in the 1980s : Problems and Policies for a Time of Transition*』, 『전쟁 원인론,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of War*』, 『중소대립의 전략적 평가 *Sino-Soviet Conflict in the 1970's: Its Evolu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Strategic Evaluation』 다섯 권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였다. 소개된 단행본의 면면은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는 제목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 소련, 중국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와 안보 정세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대학원이 안보가 불안했던 시대적 상황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필요한 서적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도에 국방대학원은 『국방연구』 23권의 1호와 2호를 발간하며 모두 2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방연구』 해당 호는 국내외 안보 문제 전반을 다루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안보 전문가에 의한 해석과 견해를 제공하였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던 미국과 중국의 접근을 둘러싼 장기적인 전망 - “미, 중공군사협력에 관한 소고”, 유럽에서의 군사력 균형과 나토의 군사전략 - “구주의 군사력균형과 NATO의 신전략”, 전년도에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중·월전쟁에 대한 평가 - “중·월전쟁의 의의와 군사적 평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끊임없는 경계의 대상이었던 일본의 방위정책과 능력 분석, 한국, 미국, 일본의 삼국 간 협력을 전망하는 연구도-“8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력 증강 전망”, “한·미·일협력관계-1980년대의 안보적 시각”-등장하였다. 논문 가운데에는 기초과제나 정책과제를 통해 연구되었던 내용이 다시 발표된 경우도 있다. 충실한 과제 연구를 거쳐 검증된 내용을 다시 논문으로 출간하여 사회에 전문적 견해를 확산한 것이다.

“미, 중공군사협력에 관한 소고”를 작성한 건국대학교 교수 조재근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인해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접근을 시작하였으며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을 평가하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계, 중국의 수용 능력, 그리고 소련의 작용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²⁰⁾ 외교안보연구원의 김유남 교수는 한·미·일의 안보협력 전망을 분석하며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의 협력 체계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두 안보협력 체계를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다.²¹⁾

20) 조재근. “미·중공군사협력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23권, 제1호 (1980).

21) 김유남. “한·미·일협력관계-1980년대의 안보적 시각,” 『국방연구』 제23권, 제2호 (1980).

1980년도 안보과정 학생의 논문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되었다. 국방과 군사 분야 논문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많았지만 외교와 사회 및 경제, 일부이지만 과학기술에 관한 논문도 존재하였다. 안보과정 학생들은 국방·군사 분야에 관해 군사전략, 전쟁지도, 전쟁사, 인력 양성, 군구조, 병력 정예화, 무기체계 선정, 핵무기와 핵전략, 민방위제도, 그리고 제대군인 지원 방안까지 다양하게 연구하였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은 일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고민하였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논문이 특징적으로 두드러졌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980년도 학생들의 논문 가운데 북한에 관한 연구는 11건이다. 이는 외교분야 혹은 사회 분야보다 많은 연구 편수이다. 중국에 관한 논문은 5건, 일본에 관한 논문 4건, 소련에 관한 논문이 4건이며 한·미·일 협력을 주제로 한 논문이 두 건이다. 특이하게도 미국에 관한 논문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다른 주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미국에 관해 분석한 연구로 “80년대 미국의 동북아 정책 전망” 정도가 확인된다. 또한, 방위산업에 관한 연구도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국방·군사 논문의 비중이 크고 북한과 관련한 연구가 많은 것은 당시의 안보 상황, 그리고 많은 수가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학생 집단의 성격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주변국의 군사사상 등 군사 문제에 관한 연구와 한·미·일 협력에 관한 연구 등의 주제가 학교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국방연구』에 실린 논문의 주제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수들의 연구 경향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 국방대학원 내부에서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나. 1981년의 연구

1981년 국방대학원의 기초과제 연구 주제는 그 전해의 그것에 비해 다양해졌다. 특징적으로 “미국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이 연구되어 레이건 행정부의 안보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당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레이건 행정부의 목표를 생각해 볼 때 이 주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였고 한국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였고 신군부의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기도 하였다. 이 해에는 그

밖에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운용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전반적으로 미국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반면, 이 시기 북한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감소하여 두 건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남북 대화 시의 군사문제 논의 방안이나 김일성 체제 이후 대외 정책의 개념을 모색하는 것으로 군사문제 특히 전쟁에 치중하였던 지난해 연구와 비교하면 연구 주제가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그만큼 이 시기의 연구는 주변국에 집중하였다.

1981년 국방대학원은 24건의 정책과제를 제출하였다. 전반적인 보고서의 주제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 4강의 군사 문제를 고르게 반영하였으며 프랑스의 대북한 접근 정책을 분석하는 것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특별한 연구 주제로 파악된다. 북한과 관련한 보고서는 세 건인데 북괴로 표기하여 예산과 군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북한으로 표기한 정치문화 분석이 존재하여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수요와 아울러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1981년의 안보총서 6권 가운데 4권이 미국의 국방정책과 대외 정책을 다루었다. 『80년대 미국의 국방정책방향, *National Security in the 1980s : From Weakness to Strength*』, 『80년대 미국의 대외 정책방향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미국 국방의 현황과 비판, *National Defense*』, 그리고 『국가분석론,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은 레이건 행정부 들어 변화할 미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해 주는 연구서들이다. 국방대학원은 한국 사회가 궁금하였던 중요한 미국의 변화를 이해하는 설명과 함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를 위한 기본적인 연구서를 제공하기 위해 유용한 저서들을 선택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안보정책에 주목한 현상은 『국방연구』에 실린 논문의 주제에서도 확인된다. 1981년 『국방연구』의 24권 1호와 2호에 출간된 논문은 21편이다. 1호의 논문이 12편이고 2호의 논문이 9편이다. 21편의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제목은 ‘미국의 정책’이다. 1호에 실린 12건의 논문 가운데 “미국의 해외기지전략과 그 전개실태”, “미국의 재무장”, “미,소 우주경쟁의 현황과 전망-전략과 무기체

계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정책”, “8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그리고 “80년대 미국의 국방정책방향”으로 절반이 미국의 정책과 연관한 연구이다. 이는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다준 충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호에도 2편의 논문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다루었다.

“미국의 재무장”은 조지타운(Georgetown) 대학의 에드워드 러트웁(Edward N. Luttwak) 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1970년대 들어 갑자기 약화한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전략과 전술을 잘못 선택하고 군사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뛰어난 전략가가 부재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²²⁾ 학교의 정준호 교수는 듀이그난과 라부스카(Peter Duignan, Alvin Rabushka)가 편집한 『미국의 1980년대,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의 서평을 기고하여 미국이 카터 행정부 시기의 잘못된 군사정책을 뒤집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대외정책에 있어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것이 새로운 행정부 인사들의 중론임을 설명하였다.²³⁾

이에 반해 안보과정 학생 논문의 주제는 이전과 크게 다름없이 국방과 군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 안보과정 학생들은 1981년에도 광범위한 국방·군사에 관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단 한 건의 논문이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전략을 다루었다. 교수들이 수행한 과제, 그리고 『국방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 분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북한에 관한 연구가 14건으로 전년도 연구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안보과정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의 안보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학생들이 북한을 적으로 바라보고 근무와 교육을 통해 북한에 관한 다방면의 지식을 축적해 온 것이 그대로 논문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이해했어야 하는 주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22) 에드워드 N. 러트웁. “미국의 재무장,” 『국방연구』 제24권, 제1호 (1981).

23) 정준호. “8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방향,” 『국방연구』 제24권, 제1호 (1981).

다. 1982-1984년의 연구

1982년부터 1984년 사이 국방대학원의 기초과제는 북한, 미국, 및 주변 강대국의 정책과 전략, 기타 전통적 안보 분야들을 고루 분석하였다. 1983년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상정한 연구가 2건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지만, 북한의 아웅산 테러리즘이 있던 다음 해인 1984년에 북한에 대한 연구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북한의 대남 분란에 대한 연구가 추가된 정도였다. 이 기간에 국방대학원이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안보 분야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기간 중의 정책과제 역시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안보총서 간행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모두 12권이 번역되었는데 특별히 집중된 주제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1984년에 핵전략과 핵비확산에 관한 연구서가 소개되어 국방대학원이 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국방연구』 역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국내 정치적 발전의 방향을 논한 “한국의 정치발전에 따른 민주정치의 정착화에 관한 소고” (1982),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한국의 자원 수입과 수출에 있어 필수적인 해상교통로 확보를 다룬 “한국의 국제해상수송환경 분석과 해상병참선 방어정책에 관한 연구” (1982), 국내 사회문제인 수도권 인구집중을 분석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국가안보-지방이주정책 중심으로” (1984)가 눈길을 끈다. 이같은 논문들은 국방대학원이 시기별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 분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왔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방대학원은 “국방조직이론에 대한 고찰” (1982), “비교국방정책론” (1983), “핵무기와 핵전략” (1983) 등 군사학 이론을 한국의 학계에 소개하여 국내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1982년의 안보과정 학생 논문의 주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포를 보였다. 북한에 관한 논문은 15편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외교에 관한 논문이 21편에 달하였고 국방·군사 분야 논문이 25편, 사회 분야 논문이 15편, 경제 분야 논문이 22편에 달하는 등 상당히 영역별로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83년과 1984년에 이어지지 않았다. 1983년도 국방·군사 분야 논문이 40편,

이듬해에는 45편이 작성되었다. 북한에 관한 논문은 모두 12편 전후로 큰 차이는 없었다.

1982년에는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국방대학원에 학위과정이 신설되어 첫 논문이 발표된 것이다. 첫해 논문 제목은 국방·군사 논문이 전체 28편 가운데 20편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석사학위 논문의 특징은 안보과정 논문에 비하여 국방관리 분야의 이론을 채용한 연구가 많은 것이었다.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특징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드물고 “소련의 군사전략이 북한의 군사전략에 미친 영향” 정도의 연구가 행해졌으며, 사상, 전략, 전쟁지도 및 전쟁사 등 일반적인 군사 분야 논문이나 외교 분야의 연구 비중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3년과 1984년에 이어졌다.

라. 1985-1987년의 연구

1985년부터 1987년 사이 국방대학원의 기초과제 연구에서 군사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85년도 기초과제는 북한, 미국 기타 주변 열강의 군사문제와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를 고루 담고 있었으나 1986년도에는 본질적인 군사문제를 다룬 연구가 등장하였고 1987년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방력 강화 사업을 바탕으로 한국군에 의한 자주적인 한국 방어를 염두에 둔 연구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시기 정책과제 연구 주제는 일반적인 안보 분야 주제를 다루었다. 다만 1985년도 정책과제가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답변자료” 등 국방 기관의 세부적인 필요를 채우는 주제로 작성되어 주목된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국방연구』는 28권에서 30권까지 발간하였다. 이전 시기 연구와 유사하게 각 권호에는 당해 시기의 다양한 안보 이슈를 다룬 연구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주목할 만한 연구로 북한 상황과 긴밀히 연관된 “김정일 후계문제와 대남전략” (1985), 한창 기승을 부리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연구 - “북한테러행태와 대응책” (1985), 한국, 일본, 미국의 삼국 안보협력을

제기한 연구 -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의 타당성 검토” (1985), 그리고 미국의 전략방위계획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 “미국의 전략방위계획(SDI)과 한국의 참여 - 전략 기술적 제문제” (1986)이 있다. 『국방연구』 1987년도 2호에는 국방정책의 평가, 작전술의 현대적 발전, 그리고 혁명전쟁의 이론을 분석하는 연구가 실려 한국 사회의 안보·국방 이론 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 안보총서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서는 소련의 전격전 이론과 별들의 전쟁을 소개한 저서 정도이다.

해당 시기 안보과정 학생 논문 주제는 이전 시기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형성하였다. 다만 1985년도에는 미국에서 채택되고 한국군에 파급되기 시작한 공지전투에 관한 연구가 두 건 존재하였다. 이 논문들은 한국군의 전략 연구를 위해 합참대 과정을 폐지하고 안보과정에 군사전략 전공을 신설한 최소한의 성과로 보인다. 1986년도 연구는 국방·군사 분야 연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사회와 경제 분야 연구가 증가하였으나 다음해까지 추세가 이어지지 않았다. 해당 시기 북한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규모 역시 변하지 않았으나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는 매년 2-3편에 불과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끈 주제가 아니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석사학위 학생 논문의 경우 국방 및 군사 분야의 연구가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주제, 즉 전략, 사상, 전쟁사 군의 운용에 관한 주제를 다룬 연구가 증가하였다. 특징적인 현상으로 이 시기 국방과학학과가 설치되고 학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여 국방과학 분야의 논문이 대거 등장하였다. 1985년부터 단일 분야 논문 편수로는 매년 35편 이상의 논문이 배출되어 석사학위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학위 논문 주제를 구성하였다.

국방대학원은 이 시기 안보총서와 『국방연구』 발간을 통해 한국 사회의 안보, 국방 분야의 지적 갈등을 해소하고 담론을 형성하며 학문적 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당시 학교의 교수들은 다양한 안보 현안 이슈와 최신 이론을 담은 연구서를 번역하거나 학술 논문으로 게재하여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교류하며 안보 이론의 소개자 혹은 담론의 발화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소개된 학술 논문들은 기초과제나 정책과제의 연구를 반영한 산물도 있어 생산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음도

알게 해 준다.

이 시기 안보과정 학생들은 국방과 군사 분야에 속한 주제를 가장 많이 연구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논문 주제 가운데 점차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석사학위 논문은 초기에 국방관리 분야의 이론이 상당 부분 활용된 논문들이 주로 작성되었으나 점차 일반적으로 다루어진 국방 및 군사 분야의 주제들에 대한 탐구로 범위가 확장하였고 특히 국방과학학과의 신설로 인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IV. 이론적·정책적 함의 및 결론

1970년부터 1987년 사이 국방대학원의 연구 산출물은 국가의 안보·국방 교육·연구기관이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방대학원은 학술지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안보 문제를 분석하고 관점을 제시하며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 왔다. 『국방연구』는 해당 시기의 안보적 난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로 활약하였다. 『국방연구』에 대통령의 유시가 실리고 외국 저명학자들의 논문이 게재되었던 것은 당시 이들의 탄탄하였던 역할을 입증하는 증거들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는 현재 학교가 유지하는 학술지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학교의 산출물 가운데 기초과제가 새로운 안보 문제를 발견하고 다루는 중요한 기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초과제는 학교의 교수들이 당대의 어렵고 중요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였다. 기초과제에서 거둔 성과가 『국방연구』를 통해 혹은 학생들의 논문을 통해 한국 사회에 확산하였다. 아울러 학교는 정책과제를 통해 국방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국방백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청와대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이 학교를 한국 사회에서 안보 분야 연구의 메커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다만, 국방대학원, 특별히 안보문제연구소가 제출하였던 정책과제는 정책 제언

기능의 특성과 한계를 보여준다. 연도별로 구체성과 적시성을 분석해 볼 때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수요 기관의 필요를 채워주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된다. 이는 수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는 특성, 인적인 유대 관계의 존재 등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학교가 특별한 분야에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를 조건으로 하여 수요 기관과 소통하였더라면, 빈도 및 기여도 측면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가 수행한 번역사업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분야이다. 『대전략』과 안보총서 사업은 학교가 초창기부터 지속해 온 해외의 안보 분야 이론과 지식을 국내에 소개하고 안보 관련 논의를 발생케 하는 사업이었다. 『대전략』의 논문들과 안보총서의 번역서들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안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참고서’로 여겨질 만한 연구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소개된 ‘참고서’들이 척박한 한국의 안보 분야 연구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교육과 관련하여 안보과정 학생의 논문 주제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분석해 볼 이슈로 제기된다. 학교의 연구 산출물 주제가 변화하는 폭과 무관하게 안보과정 학생의 논문 주제는 변화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전체적인 학교 연구 산출물과 주제에 있어 정합성을 띠게 된 것은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 현상은 안보과정 학생들이 현업에서 장시간 고민하던 주제를 연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반대로 학교 교육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 일정한 학습 이후 문제를 발굴하고 교수와 함께 연구하며 답을 찾아가는 연구의 전형적인 절차가 안보과정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학생이 문제를 스스로 정하고 찾는 형태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안보문제연구소의 설립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 학교가 안보 전문 교육과 연구기관으로 한껏 활약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학교의 교수들이 연구소를 통해 자신의 전문 영역을 확장하고 안보 분야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소가 매년 집중적으로 세계 정세분석 보고서인 『안보문제연구』를 10년 가까이 출간하면서 학교의 연구자들은 전문적인 정세분석 역량을 축적하였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여 안보과정 교육의 충실도를 높였다. 또한,

학교 교수진은 성장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역량 있는 교수진의 헌신이 이러한 부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1970년부터 1987년까지 국방대학원은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하여야 할 안보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국방대학원은 새로운 연구조직을 출범시켜 내부 교수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대외로 확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구 성과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교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였다. 학교의 학술지가 국내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고 학교가 번역하여 소개한 외국의 논문과 서적은 국내 안보 분야 연구의 귀중한 자양분이 되었다. 본문에서 연구의 취지와 달라 소개하지 않았으나 안보과정 입학과 졸업이 언론의 중요한 관심이 될만큼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학생들을 학교는 꾸준히 교육하고 배출하였다.

이 시기 학교의 활동과 성과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학술지의 수준을 잘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발간하는 『국방연구』와 *KJSA*에 실리는 논문의 수준이 학교의 평판과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번역사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새로이 확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1970년대와 80년대 안보 분야 전문가와 학문이 일천했던 당시의 국내의 여건과 오늘날의 상황은 다르다. 번역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초과제의 선정에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정책과제 혹은 부여과제를 일정 수준 이상의 분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모든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안보문제연구소가 창설되었던 당시의 파급 효과를 넘어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 30년사』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 국방대학원. 『국방대학원 60년사』 (서울: 국방대학원, 201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2. 논문

- Niksich, Larry A. "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Past Shortcomings An future Prospects," Asian Survey. Vol. 21, No. 3 (1981).
- 김유근. "한·미·일협력관계-1980년대의 안보적 시각," 『국방연구』 제23권 2호 (1980).
- 김종휘. "두개의 정상회담 이후의 세계질서," 『국방연구』 제15권 1호 (1972).
- 박봉식. "한,미,일 안보협력과 자주국방," 『국방연구』 제21권 1호 (1978)
- 안용식. "새마을사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방연구』 제18권 1호 (1975).
- 에드워드 N. 리트월. "미국의 재무장," 『국방연구』 제24권 1호 (1981).
- 이기원. "주한미지상군철수와 자주국방방향," 『국방연구』 제21권 1호 (1978).
- 이미숙.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군사』 제95호 (2015).
- 장형태. "에너지 수급대책과 전망," 『국방연구』 제17권 제2호 (1974)
- 전병원.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의 당면 문제," 『국방연구』 제14권 제30호 (1971).
- 정준호. "8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방향," 『국방연구』 제24권 제1호 (1981).
- 조재근. "미·중공군사협력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23권 제1호 (1980).
- 최 영. "전환기의 북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로선과 평화공세," 『국방연구』 제15권, 제2호 (1972).
- 최영순. "중동석유문제와 국내정치," 『국방연구』 제18권, 제1호 (1975).
- 황병무. "미·소간의 군비경쟁과 군축," 『국방연구』 제15권, 제1호 (1972).

3. 기타 자료

“국방대학원에 안보 연구소,” 『조선일보』 1972.2.12.

박정희. “대통령 유시,” 『국방연구』 제28권 (1970).

제 4 장

탈냉전과 다양한 국방안보 위협의 대두기 (1988-2007)

국방대학교 노영구

요 약	92
Ⅰ. 서 론	94
Ⅱ. 노태우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1988-1993)	96
Ⅲ. 김영삼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1993-1998)	101
Ⅳ. 김대중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1998-2003)	110
Ⅴ.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2003-2007)	117
Ⅵ. 맺음말	127
참고문헌	129

요 약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각 정부별 안보환경 변화와 연구지형의 전개를 교차시켜 한국 국방안보 연구의 흐름을 개관하였다. 이 시기에는 민주화의 진전과 냉전 해소, 정보통신 혁명, 걸프전이 제시한 군사혁신(RMA)의 실증 등이 중첩되면서 관변 중심의 연구가 민간 및 학계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연구 기반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정책·기초보고서와 『국방연구』를 비롯한 학술지, 과정생의 학위논문 등이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의 외연 확대가 이를 보완하였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직선제 출범과 탈냉전 진입 속에서 ‘한국 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 재조정(EASI- I)이 연합구조 및 작전통제권 문제를 전면화시켰다. 걸프전의 경험은 정밀유도·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양식이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사고를 대체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국방백서의 재간행, 남북 군사력 비교와 적정 국방비 논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대응, 군비통제·평화체제·DMZ 관리 등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군의 정치 개입 차단과 전문직업주의 강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국방목표 2차 개정을 통해 국방 임무가 ‘세계평화 기여’로 확장되었다. 동시에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증대로 WMD 대응과 미사일 방어 개념 검토가 시작되었고, 국방비 분류·효율화, 위기관리·NSC 개선, 포괄안보 개념의 도입 등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또한 RMA와 미래전 담론이 확산되며 군사혁신의 인식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IMF 위기 하 구조조정과 예산제약을 배경으로 국방개혁 5개년계획 수립과 군사혁신기획단 발족을 통해 NCW·정밀타격·정보전 역량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였다. 햇볕정책과 6·15 공동성명은 남북관계 연구를 활성화시켰고, 대포동 발사로 촉발된 위협 인식은 미사일 기술수준 평가와 방어체계 검토를 진전시켰다. 정보화·C4I, 획득·원가·아웃소싱 등 국방관리 현대화가 진행되었으며, 9·11 이후 테러·반확산·미사일방어 논의 등 비전통안보 연구도 급증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평화번영정책을 기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응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이 추진되었고, 국방개혁 2020이 법제화되었다. NSC 사무처의 기능 강화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으로 포괄위기관리 체계가 정비되었으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지휘구조·전력·자원·C4I·조직개편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과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외교·여론 변수는 정책 결정의 복잡성을 증대시켰고,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은 전략환경을 재편하여 평화 체제·군비통제 일부를 제외한 개혁·전작권·동맹 재조정 연구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현안 대응형 연구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88~2007년은 정책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포괄안보·미래전·군사혁신·국방관리로 의제를 확대하며 연구 생태가 다원화된 성장기였다. 그러나 교육 기능 강화와 민간 연구의 부상으로 안보문제연구소의 독점적 위상은 완화되었고, 현실주의 편향, 핵 군사력 중심의 과도한 시각과 같은 한계가 병존하였다. 향후에는 정책과 학술의 유기적 결합, 시론적·모험적 연구의 장려, 정밀재래식 전력과 국내 정치 변수를 포함하는 이론적 다원주의의 확립 등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I. 서론

한국의 국방안보 분야에서 20세기 후반(1988)에서 21세기 초반(2007)에 걸친 20년간의 기간은 이전에 비해 매우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시기에 나타난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외교, 기술 등 여러 분야의 큰 혁명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961년 5.16쿠데타 이후 1987년까지 지속된 2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 정권의 종식과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등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던 동서 냉전이 1980년대 후반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안보 및 국방의 양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지성사적인 변화와 정보통신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 양상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와 관변적 학문의 성격을 띠었던 국방안보 분야 연구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분단과 냉전의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논리나 사실도 재검토되었고 새로운 자료도 많이 발굴되었다. 아울러 관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만이 아닌 일반 연구자들도 국방안보 분야 연구에 참여하여 새로운 연구를 제출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의 과정에서 새로운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한 연구자 집단이 국방 및 안보정책 마련에 참여하는 등의 양상은 국방 안보분야 연구자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게 된다.¹⁾ 지성사적으로도 거대 담론 중심의 연구가 아닌 다양하고 미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국방안보 분야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 예를 들어 개인, 여성 등에 대한 검토도 나타났다. 특히 이전의 군사안보 중심의 현실주의적 입장과 다른 대안적 국방 안보연구에 대한 이론이 소개되는 등 연구 시각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한국의 국방안보 연구의 양상을 시기별 국방 안보 현실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방대학교에서

1) 이종석. 『갈날 위의 평화』(서울: 개마고원, 2014).

연구 간행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 등을 바탕으로 개관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방안보연구의 흐름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시기인 1988~2007년까지의 시기는 노태우 정부의 출범과 냉전의 해소,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평화적 정권 교체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변의 시기로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정부 시기에 국방대학교 연구진이 제출된 각종 관련 보고서와 각 교육과정별 논문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의 경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현재 국방관련 연구의 주요 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1980년대 후반 독립된 체제를 완전히 갖추기 전까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컸고 그 연구성과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 국방안보 연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국방부와 청와대 등의 요구로 이루어진 안보문제연구소의 다양한 정책보고서와 기초보고서,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 『국방연구』 등 학술지의 논문, 그리고 국방대학교 여러 과정생들의 논문,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안보문제연구소의 각종 보고서는 정부 기관의 요구나 국방대학교 교수들의 정책 및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결과는 이후 한국 정부의 국방, 안보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안보학술진흥사업은 민간 연구자들에게 안보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목적인 연구 사업으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안보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적지 않은 안보 이슈들이 검토되었다. 『국방연구』는 국방 안보 분야 최초의 등재학술지로 1950년대 후반 창간되어 한국의 국방안보 분야 연구를 선도한 학술지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안보과정 등 졸업생들의 논문은 작성 당시 중견 장교들의 국방 및 안보인식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고 대위~소령 계급이 대부분인 석사과정생의 졸업 논문도 이들이 대부분 향후 한국군의 중견 간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과 자료적 의미가 적지 않다.

II. 노태우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1988-1993)

1. 시대적 배경

노태우 정부는 1987년 12월 15년 만의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출범한 정부로 그 이전의 군사정부와는 태생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민주화 조치를 통해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전에 비해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시민 사회의 각성도 높아졌다. 아울러 1980년대 중반 급속한 경제성장과 88서울올림픽 개최로 한국의 위상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인문지리적 지형 변화도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 정세 변화와 아울러 대외적인 상황도 198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변하게 되었다.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 개방 노선의 채택, 중국의 개방과 자본주의적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기존의 냉전 체제는 급격히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국내외적인 탈냉전과 민주화 등의 안보환경 변화는 한국의 국방정책도 근본적 개념에서부터 재정립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겨 주었다. 탈냉전적인 안보상황과 달리 북한의 기존 위협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중, 장기적으로 평화공존 및 군비통제가 가시화되는 안보의 이중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신축적이고 전략적인 국가전략과 국방정책의 추진이 요구되었다.

냉전의 완화와 민주화의 진전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말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이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정세도 우리의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무역 및 재정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었고, 미소 군축 협상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인 긴장완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미 의회는 1989년 8월 년-워너 수

정안을 채택하여 아태 지역 주둔 미군의 전략적 재평가와 미국의 부담을 동맹국이 분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입안하여 한미 국방장관 협의를 거쳐 1990년 4월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I 을 의회에 제출하였다.²⁾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동아시아의 한국·일본·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과 일부 공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ASI 제1단계(1990~1992) 감축안 추진으로 주한미군은 지상군 비전투요원 5000명, 공군 1987명 등 총 6987명이 철수해 3만6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또 미국의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라 연합사 예하 지상 구성군사령부(GCC)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 임명, CFA 해체, JSA 경비중대 전원 국군으로 편성 전환, 군사정전위원회(MAC)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 등이 이뤄졌다.²⁾ 한국 방위의 한국화는 이후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990년 들어서면서 동서 냉전체제가 해소되었지만 분쟁과 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1990년 8월 초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이듬해 1월 걸프전의 발발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전쟁은 군사적으로 첨단무기체계가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기술 중심적인 군사혁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걸프전은 아울러 효과중심작전과 네트워크 중심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이 나타난 전쟁이었다. 걸프전은 대규모 지상군 체제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다.

이라크군보다 적은 병력을 가진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이 일방적으로 이라크군을 단기간에 굴복시켰던 사례는 대규모 군사력만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첨단 전력으로 무장한 입체적인 소규모 군사력이 현대 전쟁에 더욱 효율적임을 걸프전은 입증하였다. 걸프전의 새로운 전쟁 양상을 확인한 직후인 1991년 9월 국방부는 ‘국방정책 및 전략발전위원회’를 편성하여 새로운 국방전략을 연구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1995년 이후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 공존과 군비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현존 군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3), pp. 186-187.

력을 50만, 40만, 2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상과 그 절차가 포함 되어 있었다.³⁾

한편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군사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이행 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 정부로서 그 이전에 비해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 통제를 가하였다. 비록 노태우 정부가 군사정권의 성격을 완전히 불식한 것은 아니 었지만 군도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여 정치 개입에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⁴⁾ 민주화의 과정에서 군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고 이는 국방과 안보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된 검토가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사회에 비해 국방 및 안보에 대한 군의 우월적, 우선적 지위는 유지되어 선도적인 입장의 연구가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다.

2. 국방안보 연구

1980년대 말 전환기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1991년 1월 발발한 걸프전을 계기로 나타난 전쟁 양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국방안보 연구에도 큰 영향이 나타났다. 먼저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냉전적이고 군사주의적 안보 논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의식과 논리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던 안보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방안에 대한 연구 가 나타났다.⁵⁾ 아울러 1987년 6월 항쟁의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의 호헌 조치에 대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정치 개입에 동원되었던 정훈 교육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의식하여 군 정신교육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⁶⁾ 또한 민주화의 과정에 나타난 반미주의 및 북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오해에 대응하는 연구도 나타났다.⁷⁾

3) 조영길. 『자주국방의 길』(서울: 플래닛미디어, 2019), pp. 353-354.

4) 김영명. 『대한민국 정치사』(서울: 일조각, 2013), pp. 270-271.

5) 류재갑 외. “초·중·고·대학의 안보교육 내용 검토.”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8); 권병주 외. “전후세대의 친신한 안보의식 고취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8); 권문술 외. “전환기 국민안보 의식 제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9).

6) 엄수현. 『전환기 군정신교육 방향』(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89).

7) 류재갑 외. “6·25 북침론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9); 최병갑 외. “한미관계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군사력 우위를 당연히 여기던 1980년대 후반 상황에서 오히려 남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 앞선다는 이영희 선생의 도발적인 연구(1988)⁸⁾가 당시 상당한 파급을 미치고 있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 기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 군사력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기 어렵고 아울러 필요한 국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국방안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⁹⁾ 그 결과 1969년 이후 간행되지 않았던 『국방백서』가 1988년 연말 다시 간행되어 국민에게 국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국방백서』의 재 간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방 정보의 내용에 대한 검토, 예를 들어 한반도 주변 정세 분석 등의 인식은 이후 국방분야 연구에서 국제정세 이해의 한 측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¹⁰⁾ 이영희 선생의 연구는 향후 남북한 군사력 비교 연구 및 한국의 적정 국방비 수준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 및 국방비 관련 논의와 함께 1990년 방위세의 폐지를 계기로 적정 국방비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방비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제출되었다. 군사정권 시기 국방비는 행정부의 견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세인 방위세의 존재로 다른 예산에 비해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민간 정부인 노태우 정부의 출범과 이른바 여대야소 정국의 전개로 인한 국회의 예산 견제 등으로 인해 국방비 확보는 이전에 비해 대국민 설득과 국회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적

에 대한 안보정책 차원의 대국민 홍보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9).

8) 이영희.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사회와사상』 창간호(1988).

9) 배명오 외.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 논문에 대한 평가.”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8).

10) 류재갑. “89년도 국방백서 초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9). 『국방백서』는 1989년대 후반 재간행 이후 기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보의 제공 분량이 다소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 및 안보에 대한 인식체계는 큰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요 국가의 국방백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국민의 국방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크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병력과 육해공군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 규모를 단순하게 양적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것은 현대 군사혁신에 따른 질적인 우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대규모 재래식 군대의 확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여 군사혁신을 저지하는데 논리를 제공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본의 『防衛白書』의 경우 전투기의 경우 4세대 이상의 수효만을 제공하는 것 등은 참조할 만하다.

정 국방비 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¹¹⁾ 적정한 한국의 국방비 관련 연구는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외정책인 북방정책과 1989년 동서 냉전의 해소 과정에 대응하여 국방안보 분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1988년 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군사쟁점 대비 방안 검토¹²⁾와 함께 중국과 소련 등 당시 미 수교 공산국가와의 국방, 안보분야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나타났다.¹³⁾ 북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1980년대 후반 국내적으로 통일운동이 분출하고 국제적인 탈냉전의 분위기가 감돌면서 북한과의 관계 진전이 나타났다. 1990년 9월부터 남북 양측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 서명되었다. 1992년 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공식 발표되었다.¹⁴⁾ 냉전의 해소와 주한미군의 재조정 과정에서 전작권통제권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1990년 전후였다.¹⁵⁾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응하여 단순히 가짜 김일성론과 괴뢰 정권으로만 바라보던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이해에서 벗어나 북한 내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⁶⁾ 이는 1980년대 후반 나타난 ‘북한 바로알기’와 같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북한을 바라보던 개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방 안보 분야의 관련 검토로 활발히 나타났다. 남북 간의 회담에 있어서 군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의 개발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및 군비통제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¹⁷⁾ 더 나아가 동북아

11) 강성진. “적정 국방비 수준 및 배분에 관한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과제 보고서(1991); 강성진·박준삼. “적정 국방비 수준과 구성.” 안보문제연구소 기초과제 보고서(1992).
 12) 류재갑. “북방정책 추진에 따른 예상 군사쟁점과 대비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8).
 13) 최병갑. “한·중국 관계 개선전망 및 대비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0).
 14) 홍석률. “전두환·노태우 정부와 6월 민주항쟁.” 『한국현대사 2』(서울: 역사비평사, 2018).
 15) 조봉현.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한 한미군사관계.”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8); 이상현. “주한미군의 역할과 방위분담.”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16) 엄수현. “북한의 김정일 권력승계와 남북회담.”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0).
 17) 류재갑. “군비통제 실현을 위한 방위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0); 이석호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1); 강성진 외.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1).

지역의 군축에 대한 전망도 이루어졌다.¹⁸⁾ 아울러 DMZ 및 서해 5도서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¹⁹⁾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도 나타났다.²⁰⁾

냉전의 해소와 1991년의 걸프전 승리와 소련의 해체 등을 통해 미국은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다. 안보 연구에서도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유일 강국으로 대두한 상황과 1992년의 미 대통령 선거 등은 향후 한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이전까지 최대의 위협으로 평가되던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을 고려하던 것에서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²¹⁾ 아울러 첨단 기술 중심의 전쟁이었던 걸프전의 영향으로 당시 미래전 및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²²⁾ 걸프전에서 미군이 보여준 첨단 전쟁의 양상은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우수한 인력의 양성 논의가 나타나게 된다.²³⁾ 걸프전과 관련된 무기체계 및 미래전 논의는 전쟁 직후에는 국방 안보 연구보다는 육군대학 등 각급 군사 관련 교육 연구기관에서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특징적이다.

Ⅲ. 김영삼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1993-1998)

1. 시대적 배경

1993년 2월 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전임 노태우 정부에서 보여준 군부 권력

18) 류재갑. “동북아 지역 군축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1).

19) 윤종호. “DMZ 및 서해 5개 도서 관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1).

20) 류재갑. “남북합의서 발표가 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21) 권문술. “미국의 유일 강대국 패권 전략에 대한 분석 평가.”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이승희. “동북아 신 국제질서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김세영 외. “신국제질서의 재평가와 국가 안보의 개안문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정준호 외. “최근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황병무 외.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안보정책 방향 비교.”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22) 김영환. “걸프전 이후 한국군의 전쟁 수행 인식변화와 군사혁신 추진.”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23) 김철환. “과학기술 관련 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확대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김건태 외. “국대원 교육연구 장기발전 계획.”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하대덕 외. “군사전략 석사과정의 교육개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과의 불완전한 단절에서 나아가 정치권력의 민간화와 민주화에서 진일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군사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간화를 완성하기 위한 김영삼 정부의 노력은 군 개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3월 박정희 정권 이래 군부 내 핵심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의 핵심 구성원인 육군참모총장 김진영과 기무사령관 서완수의 전격 경질을 계기로 하나회 해체로 대표되는 대규모 숙군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뇌물 수수 혐의로 해, 공군 고위 장교들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여러 조치로 인해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 유지의 핵심 세력인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²⁴⁾

하나회의 숙청을 통해 군의 정치 개입이 차단되고 군의 전문직업주의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지만²⁵⁾ 군은 한 동안 정치 및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군 구성원의 사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오해, 그리고 처우 등에 대한 내면적인 불만의 문제 등은 그대로 온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부정적인 양상도 나타나게 된다. 이는 민주화의 진전 이후 군 예비역 출신을 중심으로 사회의 발전에 조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수구적인 입장을 드러내거나 심지어 일부 세력과의 연대 속에서 폭력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작전통제권 환수는 꾸준히 논의되어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 10월 제2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듬해 11월의 2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그 날짜를 1994년 12월 1일로 확정했다. 김영삼 정부는 초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북관계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등 매우 자주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작전통제권 환수에 적극적인 것은 이의 한 반영이었다. 그러나 1993년 3월 1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였고 이

24) 김영명 (2013), pp. 283-284.

25) 염빈봉. “전문직업군인의 자질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유재춘. “한국군의 전문직업주의 실천 방안—육군장교교육제도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때부터 한반도에는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초기에는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파괴하여야 한다는 강경책이 강하게 나타났다.

걸프전을 계기로 한 새로운 침단 전쟁의 등장과 북핵 문제의 대두는 자연스럽게 국방 안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 인력이 등장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 유지된 군사정권의 억압적 정치체제는 자연스럽게 지식인 사회에서 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반군주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갖도록 하였다. 1970년대까지 민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민간의 국방 및 안보 관련 연구가 1980년대 들어 급속히 줄어든 것은 이러한 양상의 반영이었다. 아울러 거대담론 중심의 학계 동향도 군사 등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해 소홀하게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냉전 해소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연구 인력이 나타났다. 아울러 군사정권의 퇴조를 계기로 군 내부에서도 정치가 아닌 국방에 대해 전문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났다.

군 내부적으로도 김영삼 정부 시대 국방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4년 3월 10일의 국방목표 2차 개정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국방목표의 개정은 탈냉전시대 안보환경의 급변과 위협의 범위 및 성격의 다양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와 함께 21세기와 통일시대 한국군에 적합한 군사력을 건설하여야 하는 상황의 반영이었다. 국방목표 2차 개정에서는 한국 국방의 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규정하였다. 이는 이전과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먼저 ‘적의 무력 침공’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안보개념 변화에 따른 포괄적 개념으로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를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로 수정하였다.²⁶⁾ 이는 1980년대 이후 높아진 한국의 국가위상 및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93년 상반기 하나회의 숙청으로 대표되는 인사 개혁이 일단락되고 그해 말 국

26) 국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88~2003』(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6). p.45.

방장관이 권영해에서 이병태로 교체되었다. 이병태 장관의 주도로 국방개혁 과제에 난상토론을 거쳐 5대 국방 개혁과제가 도출되었는데, 국방태세의 전면적 개혁,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을 개발, 국방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합리성 보장, 병무행정의 지속적 개혁, 생활개혁 10대 과제로 도출되었다. 그 일환으로 21세기 국방연구 위원회가 발족되어 국방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²⁷⁾ 그중 대표적인 개혁이 기존의 3군 병립체제에서 통합군제로의 개편과 병력감축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현행 60만 명의 육·해·공 3군 체제를 50만 명 규모의 통합군제로 단계적 감군하고, ‘육·해·공 3군 본부’를 ‘육·해·공군사령부’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대신 각군 본부의 기능은 국방부 본부, 합참, 각군 사령부로 분할하여 이관하고 국방부 본부와 합참은 국방정책 및 기획 기능을 전담하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각군 사령부는 기존 사령부가 수행하는 기능에 추가하여 최소한의 각군 고유기능을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육군의 상비사단을 12개로 감축도 검토하였다. 이 기획안은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후에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된 ‘50만’ 감군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통합군제를 목표로 하여 검토되었던 지휘구조 개편계획은 군내 공감대 미흡으로 인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국방 개혁의 내용으로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직업주의의 강조, 군 기강 쇄신 등이 있었다. 1995년에는 육사 교장이던 장성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국방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²⁸⁾

김영삼 정부 시기의 국방 개혁을 위한 노력은 이후 한국 국방정책(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2.0 등)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다. 북한 핵 위기 대응 경험은 북한 관련 위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김영삼 정부 후반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국방예산 운용과 군 개혁의 균형 유지에 대한 정책적 교훈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민 정부로서 출범한 김영삼 정부 시기의 국방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

27) 한국방위산업학회.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서울: 플래닛미디어, 2024). pp. 146-148.

28)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로 하사관의 복무 활성화를 위해 장교에 준하는 신분 격상안으로 하사관 직책 명칭을 개선하고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장교로 임관시키는 장교후보생과정, 즉 간부사관 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1996).

화된 안보 및 국방 상황은 국방 안보 연구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는 국방 관련 연구 인력의 증대로 나타났는데, 그중 하나가 국방대학원의 민간 교수 선발에서 최초로 공채의 형식으로 선발한 것도 이의 한 반영이다. 국방연구 인력의 증대는 국방연구원의 규모 확대도 큰 기여를 하였는데 1979년 초 국방관리연구소로 창설되어 국방자원관리 연구에 집중하던 것에서 확대되어 1987년 3월 국방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김영삼 정부 시대 들어 민간 인력의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방대학교와 국방연구원의 교육 및 연구 인력 충원은 국방 및 안보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대 초 냉전 종식을 계기로 세계는 평화의 시대를 기원하였으나 현실은 많은 분쟁과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분출되었다. 이전까지 미소의 진영 대결로 인해 늘려왔던 각 지역과 민족 등의 불만과 불안정이 냉전의 해소와 소련의 해체 등으로 인해 표면화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구 대기의 변화에 따른 기후환경의 변화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여러 국가에서 기근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여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게 된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이는 군사력을 동원한 국가 간의 전쟁 중심의 안보 연구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인도적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8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기근으로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이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배리 부잔 등 이른바 코펜하겐 학파로 불린 연구자들은 군사력 중심의 좁은 의미의 안보 개념이 아닌 포괄적인 안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안보 대상의 다양화와 안보 영역의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²⁹⁾ 포괄적인 안보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찍이 나타났지만 냉전의 격화로 인해 포괄적인 안보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³⁰⁾ 다만 포괄적인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29) 코펜하겐 학파에 대해서는 박진영, 『처음 만나는 국제정치학—투키디데스에서 코펜하겐학파까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4). 참조.

30) 196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을 계기로 한국에서 외교와 군사적인 측면을 중시한 전통적인 안전보장 개념에서 나아가 국내적인 위기, 이른바 內患에 대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리, 과학기술

었지만 냉전 시기의 주요 안보 연구인 국가를 주체로 한 군비통제, 집단안보, 강대국 정치, 전쟁과 평화, 기술과 군사, 전략 연구 등도 계속하여 중요하게 연구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³¹⁾

한편 1980년대 중반 스커드-B형과 C형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곧이어 2단 추진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1991년 말 소련의 해체는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급속도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소련 붕괴로 실업자가 된 구소련의 탄도미사일 로켓 기술자와 핵 관련 기술자들을 대거 북한으로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대하고도 핵심적인 자료와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들의 도움으로 북한은 1993년 5월 말 동해상으로 ‘노동 1호’ 미사일의 1단 추진체 발사 시험을 감행하였다. 노동 1호는 탄두 중량 1,000kg, 사거리 1,300km에 달하는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었다. 이는 기존의 스커드-B형과 C형의 사거리 3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1993년 3월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계기로 북한 핵위기가 나타났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이후 한국 국방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었다.

2. 국방안보 연구

1990년대 냉전의 해소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완전한 문민 정부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 시기 나타난 다양한 국방개혁 논의와 국방정책 변화는 국방 안보 연구에서도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먼저 1992년 말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이에 관련된 검토가 나타났다.³²⁾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국 방위의 한국화 움직임은 계기로 자연스럽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준비도 착수되었다.³³⁾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국방의 자주화는 자연스럽게 국방비의 증대 필요성을 가져왔다.

등을 총망라한 통합적 개념으로 안전보장 개념을 확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박정희, 「국가안전보장회의 유시(1964. 3. 7)」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집(서울: 대통령비서실, 1964).

31) 배리 부잔·레네 한센, 신옥희 외(역). 『국제안보론』(서울: 을유문화사, 2010). 5장 참조.

32) 유윤식.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3); 유윤식 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비에 따른 연합사(안) 검토.”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3).

33) 윤종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및 방법 세부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6).

아울러 199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국방비 확보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국방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및 대 국민 홍보 대책이 요구되었다.³⁴⁾ 아울러 국방비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졌다.³⁵⁾ 현재 한국 국방비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예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협의의 국방비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1990년대 국방비 확보를 위한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국방비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사용도 함께 논의되었다.³⁶⁾

변화하는 세계 안보 환경에 따른 안보 개념의 변화 및 한국 국방의 역할 변화에 따른 연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먼저 국방목표의 2차 개정에서 보이는 한국 국방의 역할 확대를 위한 연구가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국방정책의 방향에 대한 검토가 나타났다.³⁷⁾ 아울러 포괄적 안보 개념의 대두로 인해 이전에는 국방 안보 연구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 연구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경제력과 안보정책의 관련 문제,³⁸⁾ 정치와 안보의 문제,³⁹⁾ 국내 사회적 갈등 양상의 확대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⁴⁰⁾ 무역분쟁과 국가안보,⁴¹⁾ 국가안전보장 개념과 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⁴²⁾ 흥미로운 점은 1995년 코펜하겐 학파의 대표적 연구자인 배리 부잔의 국가안보 관련 연구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 번역된 것도⁴³⁾ 이러한 상황의 반영으로 국제정치학 연구자들도 이와 관련된 이론의 소개 논문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⁴⁾ 비전

34) 김석용. “국방비 관련 대국민 홍보논리 및 방안 개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35) 강성진. “국방비 분류 재정립.”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5).

36) 나기산.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연구—국방비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3); 김진태·장문석. “지방동원소요와 적정 국방비 수준에 관한 연구—예비전력의 수준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3); 나기산 외.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 방안 연구—신 예비군 제도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강성진 외. “국방 투자사업의 합리적 분배방안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37) 김철범·이진일. “국방환경의 변화 추이와 안보·국방정책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3).

38) 김덕영 외. “안보정책수단으로서 경제력의 활용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김태우. “탈냉전기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1994).

39) 김현주. “국내 정치와 안보.”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1995).

40) 김석용 외.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김석용·권현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내 요인의 분석과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7).

41) 김병렬·권현철. “한미 무역분쟁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6).

42) 나기산 외. “국가안전보장 개념·체계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43) 배리 부잔, 김태현(역). 『세계화시대의 국가안보』(서울: 나남출판, 1995).

통안보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전쟁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던 군사력의 역할에 대한 재점검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⁵⁾ 또한 기존 국가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진 것도 이와 관련된다.⁴⁶⁾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검토⁴⁷⁾와 함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한국과의 국방 협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북방정책으로 1990년대 초 한국과 수교하여 교류가 크게 증가한 중국과 러시아 관련 국방 협력 연구는 매우 주목된다.⁴⁸⁾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독도 영유권 분쟁도 이 시기 주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였다.⁴⁹⁾ 아울러 한국의 위상 강화에 따른 다자안보 체제에서의 우리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⁵⁰⁾

1990년대 초반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무기 개발 시도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분주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대량과괴무기 대응 방안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⁵¹⁾ 특히 흥미로운 점은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1994년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의 개념 연구가 나타난 것을 계기로⁵²⁾ 북한의

44) 조명현. “현대 국가안보 개념과 체계적 안보분석틀.” 『사회과학논총』 제7권(1996); 홍용표.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4호(2002).
 45) 전정환 외. “장기 차원의 군의 임무와 역할 정립.”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46) 김석용 외. “새로운 안보환경과 국가안보기구의 제도화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김석용 외.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선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장문석·황병무. “군사중추 위기관리 전략과 제도의 발전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장문석. “한국의 위기관리 및 안보정책 결정 체제의 평가와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5).
 47) 허남성 외. “미 신군사전략 채택 시 미국의 대비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3); 김철범 외. “미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한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응책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허남성. “EASI 보고서 초안 검토(미국의 대아태지역 안보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48) 김철환 외. “한·러 군사교류협력 발전방안(방산기술분야).”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황병무 외. “한·중 군사관계 발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이한중 외. “한·러시아 교류협력 평가 및 향후 대러 군사정책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6); 이승희. “러시아의 동북아 역할전망 및 군사 교류협력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49) 김병렬 외. “배타적 경제수역 선언과 관련된 독도 영유권 문제와 대응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6); 장문석 외. “일본의 신안보전략과 한·일 협력방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6).
 50) 정준호·이승희. “다자안보체제와 한국의 역할.”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51) 허남성·윤중호. “북한의 핵정책과 대응책.”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허남성 외. “북한의 대량과괴 무기체계 개발 추세 및 한반도 안보—화생무기 및 미사일 체계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허남성 외. “북한의 핵 연구 추진과 군비통제 연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6).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 방안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⁵³⁾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무기 개발을 위한 대응을 위해 19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나타나던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대표되는 자주국방 노선의 보류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붕괴와 통일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북한 군사통합 등에 대한 연구⁵⁴⁾가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⁵⁵⁾ 아울러 이전까지 다소 부정적이었던 한미일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타난 것도 이 무렵이었다.⁵⁶⁾

1991년 발발한 걸프전에 선보인 미국의 혁신적 전투 양상은 그 직후 군사기술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걸프전은 베트남 전쟁 이후 소련의 대규모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즉 스텔스 기술, 위성항법 기술, 레이저 유도 정밀유도 폭탄, 첨단 정보 감시 및 정찰 플랫폼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의 정밀 타격 지원을 기반으로 한 효과중심 작전 개념, 공지전투 개념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한 미군의 완승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걸프전을 미군의 우수한 군사장비를 중심으로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이 전쟁의 승리가 미국의 군사기술혁명의 결과라는 점이 최초 소개되었다.⁵⁷⁾ 이를 계기로 군사혁신의 개념과 비전, 그리고 군사혁신의 방향 등에 대한 연구가 국방연구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⁵⁸⁾ 그 영향으로 국방혁신과 21세기 군사력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⁵⁹⁾

52) 고순주 외. “장거리 유도탄과 방어체계 개념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53) 한용섭 외. “북한 미사일 개발 추세와 우리의 대응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하석태 외. “지대공 탄약 소요산출 모형들의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54) 허남성 외.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김수진 외. “남북한 군사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6).

55) 윤종호 외. “한미 군사동맹체제 발전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6); 윤종호 외. “한미 군사관계의 역사적 분석과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56) 이승희 외.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7).

57) 권태영·정춘일. “군사 기술혁명과 한국의 군사발전.” 『국방논집』 31(1995).

58) 정춘일.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국방혁신 4.0의 비전과 방책』(서울: 행복에너지, 2022).

59) 박중원. “미래전의 양상과 한국군의 군사혁신.”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현이하. “21세기를 지향하는 군사력의 발전방향—지상전력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IV. 김대중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1998-2003)

1. 시대적 배경

1998년 2월 말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한국현대사 최초로 야당에 의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따른 최초의 정권 교체였다. 아울러 IMF 경제 위기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 출범하였으므로 이의 극복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맞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경제 및 통일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23개 정부 부처를 17개로 줄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방개혁에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표방하게 된 과정은 당시 이같은 경제의 위기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김대중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국방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전쟁 억제력 강화(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를 위한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한·미 군사동맹체제 강화), 위기대응체제 재정비(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생업에만 전력), 다자안보협력 강화(주변국들과 안보협력과 군사외교 강화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21세기 대비 과학군 양성(8가지 신국방정책 추진),⁶⁰⁾ 군의 사기증진 및 복지 개선 등이었다.⁶¹⁾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 천용택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을 건의하고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방개혁에 착수하였다. 1998년 4월 15일 45명으로 편성된 민군합동 국방개혁추진위원회 발족하고 육해공 각군도 개혁 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방부와 각 군 간의 연계성 있는 개혁을 도모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은 김영삼 정부 후반기 2년 동안 국방부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하였던 “국방 개혁 2015”를 계승·보완한 것으로 국방개혁 2015은 국방부 정책국장 김종인 장군의 주도로 한국국방연구원 정책연구, 현역 총장 및 예비역 원로들과 토의를 통해

60) ① 중장기 국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 ② 3군 균형발전과 기술집약적 과학군 육성, 해병대 위상 강화 ③ 전시지원체제 강화 ④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 연구발전, 한미 정보기술협력체제 지속 강화 및 독자 감시 및 조기경보전력 단계적 확보 ⑤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 개발 확대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 ⑥ 국방연구의 전문화로 소수정예 상비군 체제 유지 및 동원체제 발전 ⑦ 국방비 안정적 확보 및 국방예산 효율성 증진 ⑧ 환경 친화적 군 육성 및 국가적 재해 및 재난사고에 대한 군 지원 강화

61) 권영근·김종대·문정인, 『김대중과 국방』(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2년간에 걸쳐서 작성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 5년 기간 동안 추진을 목적으로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제기한 안건 종합하여 1998년 7월 2일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은 국방조직, 군 구조, 방위력 개선, 인사관리, 국방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추구한 것이었다.

한편 1999년 4월 15일, 국방부는 당시 정부의 시책이었던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부응하는 혁신적 사고로 군사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개혁추진위원장의 주관 하에 ‘군사혁신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김영삼 정부 후반기에 최초 제기되었던 군사혁신론은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 제시되었다. 군사혁신이란 일반적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상응하여 작전운용 개념과 군사조직 편성의 혁신을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전투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합참과 각군 및 연구기관 등 관련부서·기관의 협조와 노력으로 한국적 군사혁신방책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방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했다. 특히, 군사혁신기획단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과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구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차원의 군사적 발전에 대처하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방개혁의 지속성, 일관성 및 미래지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방발전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⁶²⁾

군사혁신기획단은 미래 전투양상이 원거리 정밀타격전·비살상전·정보전 등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전략적 억제력을 위한 감시 및 정찰능력,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및 마비능력, 원거리 정밀타격능력 등 정보화·과학화된 ‘NCW’를 지향하는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은 미래 NCW 개념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확보’ 위주의 연구개발·방산체계의 재설계를 목표로 “지난 25년간 하드웨어 중심의 전력 증강에서 향후 25년은 기술 중심의 전력증강 실현”을 목표로 것으로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통칭되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

62) 한국국방산업학회 (2024), pp.151-152.

고 이러한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현대 그룹이 주도한 북한투자 사업과 금강산관광의 실행 등으로 인해 1994년 북핵 위기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⁶³⁾ 남북 관계의 긴장 해소와 함께 동아시아 주요 국가인 일본, 중국과의 문화 및 경제 교류도 급격히 증대되어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건설이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움직임도 활발히 나타났다.

협력과 안정이 계속되던 21세기 초 동북아시아 지역의 양상과 달리 국제정세는 급변하였다.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연이은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파키스탄의 특수부대가 인도 국경의 카길 산악 지역을 기습적으로 점령하였다가 인도군의 대규모 반격으로 물러난 카길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련의 핵실험과 카길전쟁은 기존 NPT 체제의 실질적인 와해와 핵 확산의 위험성, 그리고 핵 보유국의 적극적 군사행동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2001년 가을 알카에다에 의한 9.11테러가 발발하였다. 이 사건은 반란이나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이전의 테러와는 달리 글로벌 강대국에 손해와 모욕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테러리즘, 즉 글로벌 테러리즘이었다.⁶⁴⁾ 이에 대응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착수,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 계속되는 점령지 주민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전쟁 이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대규모 테러리즘의 위협과 대량파괴무기(WMD)가 테러 집단에 들어갈 경우 나타날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핵 개발 의혹을 시인하면서 촉발된 2차 북핵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도 점차 격랑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된다.

63) 홍석률 외. 『한국현대사 2』(서울: 푸른역사, 2018), pp.293-296.

64) Andrew Heywood, 김계동(역). 『국제관계와 세계정치』(서울: 명인문화사, 2013).

2. 국방안보 연구

이상에서 살펴본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 따른 민주적 정권 교체와 경제위기 대응 노력,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시도, 남북 및 동아시아 관계의 증진 등은 국방안보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방 안보 분야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다. 1997년 말 일어난 경제위기는 인해 1998년 국회에 제출한 1999년 국방예산안은 전년 대비 0.4%를 삭감하는 것으로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삭감이었다. 그 결과 정부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초로 10%대에 진입하였다.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국방 계획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⁶⁵⁾ 아울러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동요 현상과 안보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⁶⁶⁾

김대중 정부 시기 국방 안보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해진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북한의 현실과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냉전의 해소와 식량난 등으로 인해 나타난 북한 붕괴론에 바탕을 둔 체제통합론 등은 보류되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정책 능력, 경제 현실, 민군관계, 협상능력, 대외관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나타났다.⁶⁷⁾ 특히 경제 등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나타난 것은 매우 흥미롭다.⁶⁸⁾ 김대중 정부 출범 시기를 전후하여 북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1997년 10월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에 취임하고 이듬해 9월 헌법 개정 및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1998년 북한은 새로운 국가목표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고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65) 이필중 외.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국방 중기계획 검토.”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66) 김덕영 외. “경제난 심화에 따른 사회 불안과 한국 안보.”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67) 김병렬·이석수. “북한과 미국의 정책능력 평가 및 한국의 정책 능력 제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8); 김병조·김수남. “김정일 체제하 북한의 민군관계.”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8); 정병호. “생존전략으로서 북한의 협상능력 평가 및 대응.”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전정환. “북·중·북·러 관계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김병조. “북한 사회 내 이질성 및 갈등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68) 김수진·이상목.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본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 및 경제회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8); 이석수. “북한체제의 변화예측 모델.”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대외 경제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은 1999년을 기점으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경제도 회복기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⁶⁹⁾ 김정일 체제의 등장과 권력 엘리트의 성향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남 정책이 이전에 비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⁷⁰⁾

북한의 변화와 개방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2년 전인 1998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전망과 함께 현대에서 추진한 금강산 관광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당시 북한을 바라보던 이해가 이전에 비해 매우 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¹⁾ 또한 식량난이 있었던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⁷²⁾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전망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주한미군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연구가 나타났다.⁷³⁾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및 향후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연구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와 한미일 안보정책 공조방안, 남북한 경제교류, 군사적 신뢰 조치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⁷⁴⁾ 흥미로운 점은 남북정상 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따른 대비 방안으로 장병 정신교육 강화 방안과 함께 안보의식 확산을 위한 NGO 활용 방안과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었다.⁷⁵⁾

69) 홍석률 외 (2018), pp.424-433.

70) 정병호 외. “김정일체제의 신 권력구조 및 권력엘리트 성향 분석과 대남정책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허남성 외. “최근 북한 정세 분석과 대응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71) 허남성 외.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대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김택영 외. “금강산 관광사업과 파급효과와 한국 안보.”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72) 김택영. “북한의 농업 및 식량난 해결과 전망—식량증산을 위한 지원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73) 황병무 외.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지위 및 역할 검토.”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74) 최종철 외. “정상회담에 따른 신남북한 시대와 한·미·일 안보정책 공조방안—두 경로 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이상목. “안보적 측면에서 본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추진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정병호.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방안—남북한 군사신뢰조치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75) 이석수 외.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병 정신교육의 과제와 대응.”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김택영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안보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안보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⁷⁶⁾와 함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상당한 우려로 나타났다. 1998년 8월 31일 함북 무수단리 대포동 지역에서 북한은 로켓 1기를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 9월 4일 북한은 동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과학적 용도의 인공위성이며 동 위성이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해서 작동 중이라고 주장하였다.⁷⁷⁾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에 위협이 되었다.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남북관계는 이 발사를 계기로 일순 경직되기도 하였고 안보 국방 연구에서 미사일 발사는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⁷⁸⁾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의미가 있다.⁷⁹⁾ 아울러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위협과 북한 붕괴론에 따른 대응책 기존의 전통적인 북한 관련 국방 분야 검토도 계속 나타났다.⁸⁰⁾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된 다양한 분야의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적, 이론적 검토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방기획, 전쟁지도, 군사외교, 전력 평가 등의 관련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⁸¹⁾ 아울러 1999년 출범한 군사혁신기획단의 주도 하에 미래전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모색된 군사혁신과 관련한 국방연구 개발 및 방위산업 강화 등도 주요한 국방 분야 연구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군사혁신에서 주요한 무기체계인 유도무기체계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제협

외. “안보의식 확산과 국방정책 홍보를 위한 NGO 활용 방안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이필중.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의 대국민 홍보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76) 이승희 외. “대북정책과 안보태세 강화.”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77) 정영태·유호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배경과 파장.” 『통일경제』(1998년 9월호).

78) 황병무 외. “북한 미사일 문제와 지역 군비경쟁 가능성 평가 및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윤현근.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과 그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윤현근 외.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시사에 따른 대비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79) 권용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개발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황병무 외.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대응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1).

80) 정병호 외. “북한 비정규전 능력 분석과 대비책.”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8); 허남성·이은득. “북한 체제 급속 붕괴 시 군사대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8).

81) 나기산. “정책사업의 평가분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유윤식. “국방기획의 개념정립 및 접근방법.”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최종철. “군사외교 분석 방법.”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조성태·윤종호. “한국의 전쟁지도체제 발전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강성진. “방위력 개선사업 평가·분석 모델.”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력 방안, 멀티미디어 기술 활용, 네트워크 전장관리체계, 국방정보 통신망, 무기체계 획득, 아웃소싱을 통한 국방관리 혁신 등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⁸²⁾ 아울러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되던 정보화와 발맞추어 국방정보화 관련 연구도 나타났다.⁸³⁾ 미래전에 핵심적인 양상인 정보전과 네트워크 중심전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⁸⁴⁾ 한편 1990년대 중반까지 주로 전통적 안보 이슈인 핵전쟁, 군비통제, 핵억제, 미국과 소련, 일본의 국방, 전쟁과 평화 등에 대한 번역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정보전, 미래전 관련 주요한 번역서가 간행된 것도 2000년을 전후한 시기였다는 것도 이러한 양상을 반영한다.⁸⁵⁾

군사혁신에 대한 연구는 국방대학교 이외에도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각 연구 기관에서 수행된 여러 군사혁신 관련 연구는 군사혁신기획단에서 수렴 정리하여 2003년 『정보·지식 기반 국방력 창출을 위한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이라는 책자로 발간되었다. 이 책자는 군내 업무 용도로 배포되어 외부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기를 계기로 학계에서도 안보, 국방 연구 차원에서 군사혁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기존의 전통적 입장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안보문제에서 나아가 1990년대 들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포괄적 안보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었다.⁸⁶⁾ 안보문제연구소에서도 1990년대 말 포괄적 안보, 비군사적 안보 관련 번역서가 간행된 것은 이러

82) 권용수. “유도무기체계와 군사전략 발전방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권태환·권용수. “GPS를 이용한 무기체계 성능향상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이상진.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이상훈. “선진사례를 통한 멀티미디어 기술의 국방 부문 활용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남길현. “국방정보통신망의 통합 보안전략 계획.”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유규열. “방산계약 및 원가관리제도 개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강성진. “무기체계 획득 단계별 비용분석방법.”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이상진. “아웃소싱을 통한 국방관리 혁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83) 남길현.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미래 국방경영.”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김희수. “국방정보화 교육체계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권태환. “상용무선 이동통신기술 동향 및 군사활용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1).

84) 이석호. “정보전의 유형과 발전과정.”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권용수. “네트워크 전장관리체계 발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85) 남길현 외. 『정보전과 안보(상·하)』(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0); 문장렬 외(역). 『미래의 전장과 디지털 전사』(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0).

86) 황병무, “脫冷戰期 歐美에서의 安보研究의 새로운 경향” 『교수논총』 제15권(1999)

한 상황의 반영이었다.⁸⁷⁾ 한편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인 9.11테러의 영향으로 이 사건 직후 테러 및 미국내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된 책이 번역되었고,⁸⁸⁾ 9.11테러 이후 심각히 우려된 핵확산 문제와 전략 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⁸⁹⁾ 2002년부터는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적 연구들이 시작되었다.⁹⁰⁾ 그러나 9.11테러와 같은 새로이 등장한 테러리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V.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국방안보 연구(2003-2007)

1. 시대적 배경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당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적으로 개혁과 대외적으로 한미관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바라는 국민의 강한 열망이 그것이다⁹¹⁾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화변영’ 정책을 천명하였다. 평화변영 정책이란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분야의 진전을 병행 추구하는 등 평화와 변영의 균형적 접근을 모색한 새로운 안보정책이었다. 평화변영 정책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보 및 국방 역량 강화가 중요하였다.⁹²⁾

노무현 정부 출범 시기는 결코 안보 상황이 녹록한 시기가 아니었다.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2차 북핵위기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계속된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미군의 추가 파병이 준비되던 시기였다. 또한 미국

87) 배리 부잔 외. 『안전보장』(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98); 김덕영 외(역). 『국가안보의 비군사적 시각』(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99); 김한식(역).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99).

88) Paul R. Pillar, 김열수(역). 『테러와 미국의 외교 정책』(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1); James M. Lindsay·Michael E. O'Hanlon, 김영호(역). 『미국 방어론』(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2).

89) 허태희. “9·11테러 이후 핵 확산,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2).

90) 최진태. “테러리즘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국방연구』 제45권 1호(2002); 박찬기. “이슬람의 과격화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제45권 1호(2002); 김상범. “테러리즘의 발전 추세와 미래 양상.” 『국방연구』 45-1(2002).

91) 홍석률 등. 『한국현대사 2』(서울: 푸른역사, 2018), p.311.

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서울: 국방부, 2020), p.158.

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북아 전략 재편이 핵심 방향이었다. 그 일환으로 미군 기지체계의 조정 등으로 주한 미군의 역할과 배치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3년 7월 초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일방적인 비밀 통보에 대응하여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갖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을 연계한 국방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주한미군에 의존해온 핵심 전력을 한국군 단독으로 갖추는 시점을 2010년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체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를 전작권전제권 전환 시점으로 설정하였다.⁹³⁾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전작권 환수 의지를 밝히고 10년 내에 자주국방 토대를 갖추는 것을 천명하였다.⁹⁴⁾ 2003년까지 주한미군 감축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04년 5월 중순 이라크 전쟁이 격화되자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의 1개 여단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을 일방 통보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부터 자주국방, 자주외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자주국방 태세 확립을 지시하면서 그 목표를 일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완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대북억지력을 넘어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제한적인 전략적 거부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⁹⁵⁾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은 1970년대 이후의 자주국방과 궤를 같이하면서 변화한 국제정세와 한국의 국력 수준을 고려한 것이었다.⁹⁶⁾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추진했다. 국방개혁 추진 배경으로는 첫째, 위협환경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안보환경 변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중국의 빠른 성장, 일본과의 갈등 등

93)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서울: 나무의 숲, 2010), pp.64-65.

94) 이종석 (2014), pp. 102-110.

95) 이종석 (2014), pp. 71-72.

96) 노영구. “1970년대 한국 자주국방론의 전개와 군사전략의 확립.” 한용섭 외(편), 『현대의 전쟁과 전략』(서울: 한울아카데미, 2020).

주변 위협환경이 변화했다. 둘째, 한미동맹 성격의 변화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구와 함께 미군 장갑차 사고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나타난 반미감정으로 한미동맹의 이완 문제 등으로 인해 자주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전략이 변화하며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을 감축, 후방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말하며 부대 이전에 대한 금액을 요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 스스로 자주국방을 구현할 힘을 갖춰야된다고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구가 언급됐다. 셋째, 당시 국방의 여건과 현 좌표 진단은 국방개혁이 필요했다. 새로운 전쟁양상인 이른바 효과중심작전에 부합할 수 있는 전력구조의 필요, 국방 전반의 비효율성 잔존, 균형발전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추진, 새로운 전략과 전장운용 개념에 부합되는 ‘군 구조 개편’,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첨단 전력을 증강시켜 ‘과학기술군’으로 발전 등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 국방장관에게 국방개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감명을 받아 윤광웅 장관에게 참고할 것 권하면서 국방부는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절차와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개혁법안 작성하였다. 수립 과정으로는 2003년에는 「자주국방 비전」, 「자주국방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2004년에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가 발간되고 54개의 과제를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 군 구조개편/국방개혁을 목표로 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결과적으로 2005년 1월 국방개혁 법제화가 최초 추진되며 9월에 「국방개혁 2020(안)」이 수립되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하며 2006년 12월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의결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법률로써 통과될 만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다. 국방개혁은 당시 육군 중심의 합참과 육군에 계속해서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국방부와의 마찰이 심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국방개혁을 부대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을 하는 육군의 전력 현대화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국방개혁 책임자에 임춘택, 박선원, 서주석, 이종석을 두었으나 군에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국방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국방부를 통제하기 위해 2004년 7월 윤광웅 보좌관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자주국방 노선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 또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국방개혁 2020이 이루어졌다. 해·공군의 일부 전력 증강 계획 수립, 육군 사병 17만을 단계별 감축하는 대신 부사관 3만명 증가와 고급장교의 숫자 유지, 병력감축 대안으로 육군의 화력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 국방개혁 예산 증가하였다.

국방부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자주적 선진국방이란 자위적 방위역량과 국방태세를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 동맹관계와 대외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닌 선진적 운영체제를 갖춘 국방의 총체적 상태로 규정되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정책 기조’를 ①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③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④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으로 설정하여 군의 역량을 집중하여 일관성 있게 국방정책을 추진했다.⁹⁷⁾

국방개혁과 정치 개혁 추진과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 국민 다수의 여론과 달리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이라크전 파병 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났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며 이전의 미국, 일본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또는 균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균형자론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막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대외전략이었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은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과의 영토 문제와 교과서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아울러 국내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보수파의 비판도 이 전략이 힘을 얻는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2006년에 들어서면서 주변의 안보 환경은 노무현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교착상태에 빠지고 7월

9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p.159.

초에는 북한이 동해를 향해 사정거리 5,000~6,000km에 달하는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2호를 포함하여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행하였다. 가을에 들어서 본격화되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경제공동체, 자주국방, 국방개혁과 같은 논의를 계속 견지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결국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단행하였고 이후 국내외 갈등이 계속되고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⁹⁸⁾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간 충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던 서해 지역을 공동 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평화지대로 삼는다는 것과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성과는 적지 않았으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이 누락되어 있고 국내외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2월 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의 무효화되었다.⁹⁹⁾

노무현 정부 시기 들어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통일외교 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확대 개편이었다. NSC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통일외교 문제 이외에 포괄적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1990년대 들어 안보가 전통적인 군사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등을 망라하는 포괄안보 시대가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을 망라하는 국가위기관리체제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2004년 9월 30개의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작성되었다.¹⁰⁰⁾ 이는 이후 자연스럽게 포괄안보 연구의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국방안보 연구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 정책의 제시에 따른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최대 위협 요소인 2001년

98) 김종대 (2010), pp.433-455.

99) 홍석률 외 (2018), pp.319-323.

100) 이종석 (2014), pp.438-444.

하반기 이후 발발한 제2차 북핵 위기 극복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아울러 2001년 9·11테러와 이에 대한 응전인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의 발발(2002),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II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즉 북한 위협 억제에서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중점에 방점을 두고자 하였다. 2003년 11월에는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등도 노무현 정부의 출범 직후 당면한 심각한 국방안보 과제였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당면한 국방안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협력,¹⁰¹⁾ 이라크전과 미군의 전략 및 주한미군 변화,¹⁰²⁾ 북한 핵문제 대응¹⁰³⁾ 등의 정책 연구가 나타났다. 특히 이라크 파병 문제가 취임 초기 국내적으로 심각한 논란을 가져왔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대응 전략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¹⁰⁴⁾

2004년 5월 중순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에 대응하여 자주국방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정비를 통한 포괄안보의 중요성도 나타났다. 본격적인 자주국방의 핵심은 전작권 환수였다. 2010년경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권 행사에 필요한 지휘구조 및 논리 관련 검토가 이루어졌다.¹⁰⁵⁾ 이 일환으로 이 시기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조정 관련 연구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¹⁰⁶⁾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자주

101) 한용섭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3); 윤현근 외. “한반도 전략 평가서—동북아 안보협력: 평가와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3).
 102) 한용섭 외. “이라크 전쟁의 평가를 통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3); 한용섭.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우리의 대응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3).
 103) 이석수. “3자회담과 한국의 대응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3); 이석수 외.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문제 대처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3); 이석수 외. “6자회담 활용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3).
 104) 윤현근.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의 함의와 정책 제언.”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3); 윤현근 외. “한국의 이라크 파병 관련 정책 제언.”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3).
 105) 윤종호.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 과제와 대비방안.” 『국방연구』 50-1(2007); 김열수. “한미 연합 작전지휘체제에 관한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6); 정경영 외.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관련 한미 지휘구조(안) 및 추진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6); 정경영 외.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필요성과 영향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6).
 106) 최종철. “주한미군 감축 대비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4); 김열수 외. “주한미군 재조정과 한국의 대응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4); 최종철. “한반도 전략평가서—주한미군 조정과 한미동맹

국방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검토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필요한 군사력 건설에 소요되는 국방비와 자원 확보 방안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한 검토와¹⁰⁷⁾ 함께 군 조직 개혁 방안, 전력체계 발전 방안, C4I 체계 발전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¹⁰⁸⁾ 이와 함께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활발히 나타났다.¹⁰⁹⁾

2005년부터 본격화된 국방개혁 추진으로 관련 연구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칭 국방개혁계획법 제정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와 함께¹¹⁰⁾ 주변국의 주변국의 군사혁신 등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다.¹¹¹⁾ 국방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안보 환경 평가¹¹²⁾와 함께 국방 분야 대비 방안이 검토되었다.¹¹³⁾ 국방개혁의 과정에서 주변국의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¹¹⁴⁾ 마련과 함께 한미동맹의 조정 문제가 검토되었다.¹¹⁵⁾ 다만 이 시기까지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달리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과한 의존을 기본으로 한 인식이 보인다라는 한계가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2003년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면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한미FTA 등 45개국과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한국의 개방정책과 통상안보·외교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FTA의 다자안보협력의 강화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¹¹⁶⁾

혁신: 전략과 반응.”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4).

- 107) 이상호. “자주국방과 국방비—안보전략과 군사력 건설을 중심으로.”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4); 신정현. “동북아 군사환경과 한국의 국방비.”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4); 정옥임. “21세기 미래 전략을 위한 군비 효율화방안.”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5).
- 108) 김문성. “군 조직 구조의 개혁: 현황분석과 재설계.”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5); 홍성표. “21세기 합동전장환경과 한국군의 전력체계 건설 방향.” 『국방연구』 49-2(2006); 김용삼. “한국의 군사혁신과 C4I체계 발전방향.” 『국방연구』 50-2(2007).
- 109) 홍준기. “한국 자주국방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 110) 신용도. “국방개혁계획법 제정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111) 박창희. “중국어군 현대화와 대한반도 군사작전능력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7).
- 112) 김영호 외. “한국의 중장기 미래안보환경.”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113) 최종철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문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114) 김병조 외. “한국 국방개혁 추진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반응 분석과 대응.”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115) 최종철 외. “한미동맹의 당위성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정경영. “한미동맹의 비전 설정.”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116) 구영완.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FTA의 역할.”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포괄안보와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정비를 전후하여 안보 개념과 포괄 안보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히 나타났다. 이는 이전까지 국외의 관련 연구를 소개하던 것에서 나아가 포괄안보의 관점에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안보개념의 검토에 더하여 환경, 언론, 사이버, 해양안보 등 포괄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¹⁷⁾ 이와 함께 안보 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NGO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역할과 활동에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¹¹⁸⁾ 아울러 국가위기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¹¹⁹⁾

9.11테러로 확인된 새로운 양상의 대규모 테러리즘의 대두에 따른 관련 연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매우 활발한 연구 주제 중의 하나였다. 2002년까지는 기존 테러리즘 관련 연구나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 시기부터 테러리즘 관련 다양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²⁰⁾ 특히 기존의 테러와 달리 대규모 인명 살상을 목표로 하는 현대 테러리즘인 이른바 메가테러리즘의 확산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¹²¹⁾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기도 하였다.¹²²⁾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후의 여러 성과를 정리한 단행본이 출간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¹²³⁾

포괄 안보의 본격적인 대두와 함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작전의 실패는 자연스럽게 안보 문제 해결에서 군사

117) Seo Hang Le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10, No. 2 (2005) ; 홍기준. "인간중심주의적 안보개념의 모색."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4); 이신화. "환경안보와 국제정치."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4); 이동선. "인터넷 언론의 등장과 국가안보."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3); 민병원.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네트워크 패러다임." 『국방연구』 50-2(2007).

118) 라미경.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국제NGO의 역할 모색." 『국방연구』 49-2(2006).

119) 김열수. "국가재난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4).

120) Tae Joon Kim, "New Terrorism and Counter Terrorism"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8, No. 1 (2003)

121) 이은득. "국제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4); 구춘권. "메가테러리즘의 확산과 그 대응방안 모색."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4); 조성권. "테러전에 있어서의 국가정보와 인권문제." 『국방연구』 49-2(2006).

122) 김태준. "미국의 대테러·반확산 정책의 제도와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4); 홍성표 외. "국제테러 위협의 실상."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123) 김태준. 『테러리즘』(서울: 봉명, 2006);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서울: 대영문화사, 2006).

력이 가지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변화된 안보 및 국방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국방안보와 관련된 서적이 번역 출간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¹²⁴⁾

2006년 10월 9일의 북한 핵실험은 이후 한국의 국방 안보 연구에서 핵 무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¹²⁵⁾ 특히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한 북핵 위협 해소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었고¹²⁶⁾ 아울러 핵 억지력이 실제 운용에서 갖게 되는 딜레마를 검토함으로써 핵무기의 절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나타났다.¹²⁷⁾ 그 이전부터 북한 핵무장 가능성과 그 군사적 위협성에 대한 경고가 적지 않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핵실험 직전까지 비핵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인해 본격적인 검토는 적은 편이었다.¹²⁸⁾ 2002년부터 시작된 2차 핵위기 이후 6자회담을 통해 유지되던 북한 비핵화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고 북한의 핵 무장으로 인한 충격은 이후 독자 핵무장이나 한미동맹 강화 이외에 생산적인 남북 관계나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 국방개혁 등의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6년까지 활발하던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조정, 남북한 군사통합, 국방개혁 등 냉전기 이후 한국 국방의 체제를 발전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연구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2007년 안보문제연구소의 주요 연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¹²⁹⁾ 이외에는 대부분 아프간 한국인 피랍 대응책이나 남북국방 장관 회담, 6차 장성급 군사회담, 한중 국방회담, 한미 FTA 타결 등과 관련된 현안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¹³⁰⁾

124) Daniel Byman, 이옥연(역). 『강압의 역학: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력의 한계』(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3); 赤根谷憲雄, 김준섭(역). 『신안전보장론』(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4).

125) Kyu Dok Hong. "Unholy Trinity in Nuclear Deterrence: Three Dilemmas of Nuclear Weapon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12, No. 1 (2007); 홍성표. "핵전 대응전략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6).

126) 한용섭.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북한의 핵위협 해소 방안." 『국방연구』 50-2(2007).

127) Geun Wook Lee.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Issue"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11, No. 2 (2006)

128) Bruce W. Bennett. "Military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10, No. 2 (2005)

129) 홍성표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건 조성을 위한 군비통제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130) 홍성표 외. "아프간 한국인 피랍: 대책과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한용섭.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의제와 협상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임채홍.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 목표 및 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유규열. "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타결이 국내방위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하도형 외. "중국 국방정책의 변화와 한·중국방

다양한 정책 연구 보고서와 함께 안보문제연구소는 안보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 연구 시리즈 이외에 월간 『안보현안분석』을 창간하였다. 2006년에 다룬 주요 이슈를 보면 국방개혁, 북한 핵과 미사일, 해군력, 미 국방검토보고서, 일본의 우주기본법, 역사안보, 38차 한미안보협의회, 한반도 평화체제, 자이툰 파병 평가 등 매우 다양한 안보 현안을 다루고 있다.¹³¹⁾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다양한 안보 및 국방 이슈의 대두는 자연스럽게 관련 연구의 출판과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성과로 2000년초부터 공군 관련 연구자를 중심으로 간행되던 ‘연세대 공군력 연구총서’ 시리즈가 2004년 말부터 국방개혁, 항공우주력을 주제로 활발하게 간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수의 관련 연구자들이 출현하였다.¹³²⁾ 국방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편승의 지혜』(오름, 2003),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오름, 2004), 『자주냐 동맹이냐』(오름, 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박영사, 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나남, 2005) 등 노무현 정부 시기 제기된 다양한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저술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다. 다양한 저술의 출간은 이전의 국방, 안보 연구가 갖는 관변적 성격에서 벗어나 일반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군사학이 학문 분야로 정착되고 국방대학교에서 군사학 박사 과정이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었다. 아울러 국방 및 군사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학술지인 『국방연구』만으로는 관련 성과를 충분히 소개하기 어려워졌다. 2007년 『군사과학연구』가 창간되어 현재까지 연 2회 간행하기 시작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회담.”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131) 『안보현안분석』은 이후 『RINSA 안보리뷰』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32) 문정인 외. 『신국방정책과 공군력의 역할』(서울: 오름, 2004); 문정인 외.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서울: 오름, 2004); 김기정 외. 『세계적 국방개혁 추세와 한국의 선택』(서울: 오름, 2006).

VI. 맺음말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개헌과 국민 투표를 통해 등장한 본격적인 민간 정부의 시발일뿐 아니라 냉전의 해소와 국제정세 급변, 걸프전과 첨단 무기의 본격 등장, 북한 핵문제의 대두라는 새로운 과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 이후 한국의 국방 안보 현실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고 이는 국방 안보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방대학교의 안보문제연구소는 1971년 국내 최초의 안보 전문 연구기관으로 창설된 이후 한국의 국방 안보 연구를 선도하여 왔고 이는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그 명성이 유지되었다. 이는 각종 정책 및 기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서 정책 연구 기능에 더하여 학위과정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방안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의 번역이나 기초 과제를 통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고려한 연구 성과가 적지 않았다. 포괄안보, 미래전, 대전략, 전쟁원인론, 전략사상가, 국방예산, 미국 외교정책, 테러리즘, 자주국방 등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군사학 학문 체계의 준비와 박사과정 개설의 과정에서 교수진의 전문 논문의 집필도 매우 활발히 나타났다.

그러나 국방교육 및 연구기관이 가진 한계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교육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정책 연구 기능의 저하 문제와 함께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민간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안보국방 분야 연구에의 관심 확대 등으로 인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갖는 독점적 역할은 약해졌다. 따라서 단순한 안보분야 정책 연구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정책과 연구의 결합과 자유로운 연구 풍조의 확산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대학교 출범 당시 학문의 자유를 우선시하던 풍조에서 안보 이슈에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정책 연구가 아닌 자유로운 지식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선도적인 학문 연구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냉전 이후 복잡해지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사전에 자유로운 시각에서 시론적, 모험적 연구가 더욱 장려되어야만 안보 분야 연구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서 안보 국방 분야가 퇴행적 양상을 보

이지 않도록 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국방 안보 분야 연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 연구 시각의 과다로 인한 문제점이 최근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40년대 등장한 현실주의적 방법론은 초기에 갖고 있던 명료함과 적실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함과 현실추수적인 형태로 왜곡되었다. 최근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 군사력에 대한 중시 양상, 특히 핵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심해지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국제정치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사력, 특히 치명도와 정확성이 높은 재래식 군사력의 중요성 및 국내정치의 제반 요소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강조하는 국제정치체제는 전쟁의 욕구를 자아내고 군사력과 강압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더욱 키우는 오류마저 범하고 있다.¹³³⁾ 다양성 결핍이라는 이론적 한계를 갖는 문제와 현실추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문 현실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 및 안보 분야 학문 공동체의 맹성이 요구된다.

133) 로렌스 프리드먼, 조행복(역). 『전쟁의 미래』(서울: 비즈니스북스, 2020).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100년의 역사』(서울: 국방부, 2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88~2003』(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3).
- 권영근·김종대·문정인. 『김대중과 국방』(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김기정 외. 『세계적 국방개혁 추세와 한국의 선택』(서울: 오름, 2006).
- 김덕영 외(역). 『국가안보의 비군사적 시각』(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99).
- 김영명. 『대한민국 정치사』(서울: 일조각, 2013).
-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서울: 나무의 숲, 2010).
- 김태준. 『테러리즘』(서울: 붕명, 2006).
- 김한식(역).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99).
- 남길현 외. 『정보전과 안보』(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0).
- 로렌스 프리드먼, 조행복(역). 『전쟁의 미래』(서울: 비즈니스북스, 2020).
- 문장렬 외(역). 『미래의 전장과 디지털 전사』(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0).
- 문정인 외. 『신국방정책과 공군력의 역할』(서울: 오름, 2004).
- 문정인 외.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서울: 오름, 2004).
- 배리 부잔 외. 『안전보장』(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98).
- 이종석. 『칼날 위의 평화』(서울: 개마고원, 2014).
- 정춘일.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국방혁신 4.0의 비전과 방책』(서울: 행복에너지, 2022).
- 조영길. 『자주국방의 길』(서울: 플래닛미디어, 2019).
-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서울: 대영문화사, 2006).
- 한국방위산업학회.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서울: 플래닛미디어, 2024).
- 홍석률 외. 『한국현대사 2』(서울: 푸른역사, 2018).
- Andrew Heywood, 김계동(역). 『국제관계와 세계정치』(서울: 명인문화사, 2013).
- Barry Buzan · Lene Hansen, 신욱희 외(역). 『국제안보론』(서울: 을유문화사, 2010).

- Barry Buzan, 김태현(역). 『세계화시대의 국가안보』(서울: 나남출판, 1995).
- Daniel Byman, 이옥연(역). 『강압의 역학: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력의 한계』(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3).
- James M. Lindsay · Michael E. O’Hanlon, 김영호(역). 『미국 방어론』(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2).
- Paul R. Pillar, 김열수(역). 『테러와 미국의 외교 정책』(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1).
- 赤根谷憲雄, 김준섭(역). 『신안전보장론』(서울: 안보문제연구소, 2004).

2. 편저서

- 노영구. “1970년대 한국 자주국방론의 전개와 군사전략의 확립.” 한용섭 외(편). 『현대의 전쟁과 전략』(서울: 한울아카데미, 2020).

3. 논문

가. 학술지 논문

- 권태영·정춘일. “군사 기술혁명과 한국의 군사발전.” 『국방논집』 제31호(1995).
- 김상범. “테러리즘의 발전 추세와 미래 양상.” 『국방연구』 제45권 1호(2002).
- 김용삼. “한국의 군사혁신과 C4I체계 발전방향.” 『국방연구』 제50권 2호(2007).
- 라미경.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국제NGO의 역할 모색” 『국방연구』 제49권 2호(2006).
- 민병원.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네트워크 패러다임.” 『국방연구』 제50권 2호(2007).
- 박찬기. “이슬람의 과격화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제45권 1호(2002).
- 윤종호.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 과제와 대비방안.” 『국방연구』 제50권 1호(2007).
- 이영희.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사회와사상』 창간호(1988).
- 정영태·유호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배경과 파장.” 『통일경제』(1998년 9월호).
- 조명현. “현대 국가안보 개념과 체계적 안보분석틀.” 『사회과학논총』 제7권(1996).
- 최진태. “테러리즘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국방연구』 제45권 1호(2002).

- 홍성표. “21세기 합동전장환경과 한국군의 전력체계 건설 방향.” 『국방연구』 제49권 2호(2006).
- 홍용표.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4호(2002).
- 황병무. “脫冷戰期 歐美에서의 安保研究의 새로운 경향” 『교수논총』 제15호(1999)
- Bruce W. Bennett. “Military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10, No. 2(2005).
- Geun Wook Lee.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Issue.”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11, No. 2(2006).
- Kyu Dok Hong. “Unholy Trinity in Nuclear Deterrence: Three Dilemmas of Nuclear Weapon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12, No. 1(2007).
- Seo Hang Le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10, No. 2(2005).
- Tae Joon Kim. “New Terrorism and Counter Terrorism.”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ffairs Vol. 8, No. 1(2003).

나. 학위논문

- 곽중원. “미래전의 양상과 한국군의 군사혁신.”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 김영환. “걸프전 이후 한국군의 전쟁 수행 인식변화와 군사혁신 추진.”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 염빈봉. “전문직업군인의 자질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 유재춘. “한국군의 전문직업주의 실천 방안—육군장교교육제도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 이상현. “주한미군의 역할과 방위분담.”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 조봉현.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한 한미군사관계.”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8).
- 현이하. “21세기를 지향하는 군사력의 발전방향—지상전력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 홍준기, “한국 자주국방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4. 정책보고서

- 강성진 외. “국방 투자사업의 합리적 분배방안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 강성진 외.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1).
- 강성진. “무기체계 획득 단계별 비용분석방법.”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 강성진. “방위력 개선사업 평가·분석 모델.”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강성진. “적정 국방비 수준 및 배분에 관한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과제 보고서(1991).
- 강성진·박준삼. “적정 국방비 수준과 구성.” 안보문제연구소 기초과제 보고서(1992).
- 고순주 외. “장거리 유도탄과 방어체계 개념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 구영완.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FTA의 역할.”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권문술 외. “전환기 국민안보 의식 제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9).
- 권문술. “미국의 유일 강대국 패권 전략에 대한 분석 평가.” 안보문제연구소 정책 보고서(1992).
- 권병주 외. “전후세대의 천신한 안보의식 고취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8).
- 권용수. “네트워크 전장관리체계 발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 권용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개발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 권용수. “유도무기체계와 군사전략 발전방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 권태환. “상용무선 이동통신기술 동향 및 군사활용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1).

- 권태환·권용수. “GPS를 이용한 무기체계 성능향상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 김건태 외. “국대원 교육연구 장기발전 계획.”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 김건태·장문석. “지방동원소요와 적정 국방비 수준에 관한 연구—예비전력의 수준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3).
- 김덕영 외. “경제난 심화에 따른 사회 불안과 한국 안보.”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김덕영 외. “금강산 관광사업과 파급효과와 한국 안보.”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 김덕영 외. “안보의식 확산과 국방정책 홍보를 위한 NGO 활용 방안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 김덕영 외. “안보정책수단으로서 경제력의 활용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 김덕영. “북한의 농업 및 식량난 해결과 전망—식량증산을 위한 지원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 김문성. “군 조직 구조의 개혁: 현황분석과 재설계.”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5).
- 김병렬 외. “배타적 경제수역 선언과 관련된 독도 영유권 문제와 대응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6).
- 김병렬·권헌철. “한미 무역분쟁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6).
- 김병렬·이석수. “북한과 미국의 정책능력 평가 및 한국의 정책 능력 제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8).
- 김병조 외. “한국 국방개혁 추진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반응 분석과 대응.”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김병조. “북한 사회 내 이질성 및 갈등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 김병조·김수남. “김정일 체제하 북한의 민군관계.”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8).
- 김석용 외.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선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 김석용 외. “새로운 안보환경과 국가안보기구의 제도화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 김석용 외.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 김석용·권현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내 요인의 분석과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7).
- 김세영 외. “신국제질서의 재평가와 국가 안보의 개안문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 김수진 외. “남북한 군사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6).
- 김열수. “한미연합 작전지휘체제에 관한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6).
- 김영호 외. “한국의 중장기 미래안보환경.”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김철범 외. “미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한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응책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 김철범·이건일. “국방환경의 변화 추이와 안보·국방정책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3).
- 김철범·이건일. “국방환경의 변화 추이와 안보·국방정책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3).
- 김철환 외. “한·러 군사교류협력 발전방안(방산기술분야).”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 김철환. “과학기술 관련 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확대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 김태우. “탈냉전기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1994).
- 김태준. “미국의 대테러·반확산 정책의 제도와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4).
- 김현주. “국내 정치와 안보.”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1995).
- 김희수. “국방정보화 교육체계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 나기산 외. “국가안전보장 개념·체계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 나기산 외.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 방안 연구—신 예비군 제도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 나기산.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연구—국방비 적정규모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3).
- 나기산. “정책사업의 평가분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남길현. “국방정보통신망의 통합 보안전략 계획.”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 남길현.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미래 국방경영.”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 류재갑 외. “6·25 북침론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9).
- 류재갑 외. “초·중·고·대학의 안보교육 내용 검토.”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8).
- 류재갑. “89년도 국방백서 초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9).
- 류재갑. “남북합의서 발표가 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 류재갑. “동북아 지역 군축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1).
- 류재갑. “북방정책 추진에 따른 예상 군사쟁점과 대비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8).
- 박창희. “중국군 현대화와 대한반도 군사작전능력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7).
- 배명오 외.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 논문에 대한 평가.”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8).
- 신용도. “국방개혁계획법 제정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신정현. “동북아 군사환경과 한국의 국방비.”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4).
- 엄수현. “북한의 김정일 권력승계와 남북회담.”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0).
- 엄수현. “전환기 군정신교육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9).
- 유규열. “방산계약 및 월가관리제도 개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 유규열. “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타결이 국내 방위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 유윤식. “국방기획의 개념정립 및 접근방법.”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유재갑. “군비통제 실현을 위한 방위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0).
- 윤종호 외. “한미 군사관계의 역사적 분석과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 윤종호 외. “한미 군사동맹체제 발전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6).
- 윤종호. “DMZ 및 서해 5개 도서 관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1).
- 윤현근 외.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시사에 따른 대비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윤현근.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과 그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이동선. “인터넷 언론의 등장과 국가안보.”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3).
- 이상목. “안보적 측면에서 본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추진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 이상진.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 이상진. “아웃소싱을 통한 국방관리 혁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 이상호. “자주국방과 국방비—안보전략과 군사력 건설을 중심으로.”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4).
- 이상훈. “선진사례를 통한 멀티미디어 기술의 국방부문 활용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 이석수 외.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병 정신교육의 과제와 대응.”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 이석호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1).
- 이석호. “정보전의 유형과 발전과정.”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2001).
- 이승희 외. “대북정책과 안보태세 강화.”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 이승희 외.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7).
- 이승희. “러시아의 동북아 역할전망 및 군사교류협력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 이승희. “동북아 신 국제질서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 이신화. “환경안보와 국제정치.”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4).
- 이필중 외.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국방 중기계획 검토.”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 이필중.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의 대국민 홍보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 이한중 외. “한·러시아 교류협력 평가 및 향후 대러 군사정책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6).
- 임채홍.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 목표 및 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 장문석 외. “일본의 신안보전략과 한·일 협력방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6).
- 장문석. “한국의 위기관리 및 안보정책 결정 체제의 평가와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5).
- 장문석·황병무. “군사중추 위기관리 전략과 제도의 발전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 전정환 외. “장기 차원의 군의 임무와 역할 정립.”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 전정환. “북·중·북·러 관계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 정경영 외.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관련 한미 지휘구조(안) 및 추진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6).
- 정경영 외.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필요성과 영향 분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6).
- 정경영. “한미동맹의 비전 설정.”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정병호 외. “김정일체제의 신 권력구조 및 권력엘리트 성향 분석과 대남정책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정병호 외. “북한 비정규전 능력 분석과 대비책.”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8).
- 정병호.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방안—남북한 군사신뢰조치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 정병호. “생존전략으로서 북한의 협상능력 평가 및 대응.”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9).

- 정옥임. “21세기 미래 전략을 위한 군비 효율화방안.”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5).
- 정준호 외. “최근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 보고서(1992).
- 정준호·이승희. “다자안보체제와 한국의 역할.”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 조성태·윤종호. “한국의 전쟁지도체제 발전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최병갑 외. “한미관계에 대한 안보정책 차원의 대국민 홍보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89).
- 최병갑. “한·중국 관계 개선전망 및 대비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0).
- 최종철 외. “정상회담에 따른 신남북한 시대와 한·미·일 안보정책 공조방안—두 경로 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0).
- 최종철 외. “한미동맹의 당위성 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최종철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문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5).
- 최종철. “군사외교 분석 방법.”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하대덕 외. “군사전략 석사과정의 교육개선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 하도형 외. “중국 국방정책의 변화와 한·중국방회담.”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 하석태 외. “지대공 탄약 소요산출 모형들의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 한용섭 외. “북한 미사일 개발 추세와 우리의 대응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7).
- 한용섭.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의제와 협상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 허남성 외.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대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 허남성 외.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 허남성 외. “미 신군사전략 채택 시 아국의 대비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3).
- 허남성 외.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체계 개발 추세 및 한반도 안보—화생무기 및 미사일 체계를 중심으로.”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5).

- 허남성 외. “북한의 핵 연구 추진과 군비통제 연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6).
- 허남성 외. “최근 북한 정세 분석과 대응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8).
- 허남성. “EASI 보고서 초안 검토(미국의 대아태지역 안보전략).”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 허남성·윤중호. “북한의 핵정책과 대응책.”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4).
- 허남성·이은득. “북한체제 급속 붕괴 시 군사대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기초보고서(1998).
- 홍기준. “인간중심주의적 안보개념의 모색.” 안보학술진흥사업 보고서(2004).
- 홍성표 외. “국제테러 위협의 실상.”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 홍성표 외. “아프간 한국인 피랍: 대책과 전망.”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 홍성표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건 조성을 위한 군비통제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7).
- 황병무 외.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지위 및 역할 검토.”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황병무 외.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안보정책 방향 비교.”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2).
- 황병무 외.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대응 방향.”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2001).
- 황병무 외. “북한 미사일 문제와 지역 군비경쟁 가능성 평가 및 대책.”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9).
- 황병무 외. “한·중 군사관계 발전 방안.” 안보문제연구소 정책보고서(1994).

5. 기타 자료

- 박정희, 「국가안전보장회의 유시(1964. 3. 7)」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집(서울: 대통령비서실, 1964)

제 5 장

다변하는 국제환경과 불확실성의 증대기 (2008-2025)

국방대학교 기세찬

요 약	142
Ⅰ. 서 론	144
Ⅱ. 시대적 상황	145
Ⅲ. 연구 추세	146
Ⅳ. 이론적 · 정책적 함의	169
Ⅴ. 결 론	171
참고문헌	173

요 약

1. 국제·한반도 정세 평가

2008년 이후 세계는 금융위기-아랍의 봄-미중 전략 경쟁-코로나 팬데믹-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충격을 겪으며 다극화·블록화·신냉전 구도로 전환되었다. 미국 패권의 약화,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기술·경제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기후위기·에너지 전환이 추가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한반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대북 강경 기조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 남북·북미 정상외교로 잠시 평화의 창이 열렸으나 협상 결렬로 좌절되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다시 강경 기조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자리잡았다. 종합하면, 2008~2025년은 다변하는 국제환경과 불확실성 증대기로 규정할 수 있다.

2. 연구 추세

분석된 학술·정책 연구는 크게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분야로 나뉜다. 외교 연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북핵·6자회담에서 시작해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경제안보까지 주제가 확장되었다. 국방·군사는 억제전략·작전개념 중심에서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장거리 정밀타격, AI·사이버·우주 전력, 방산 수출 전략으로 발전했다. 정보 연구는 전통적 첩보에서 출발해 2020년대에는 AI·빅데이터 기반 ISR, 위성·사이버 억제전략으로 확장되었다. 정치·사회 연구는 양적으로 적지만, 안보정책의 국내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다루며 정책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경제 연구는 대북제재·남북경협에서 공급망·반도체·배터리 같은 전략산업 중심의 경제안보 논의로 확대되었다. 과학 연구는 무인체계, AI, 사이버, 우주 기술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군사과학연구와 국제공동연구에서는 AI·사이버·우주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와 방산 전략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는 국민의 위협 인식과 동맹 선호를 추적하여 정책

수용성·사회적 신뢰가 안보정책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주었다.

3. 이론적·정책적 함의

첫째, 한국 안보 연구는 여전히 외교와 군사 중심이지만, 점차 경제·과학·사회 분야로 확장되며 복합안보로 진화하고 있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연구는 억제·동맹·경제안보를 축으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셋째,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 인식은 정책 실효성을 결정짓는 관건으로, 연구와 정책이 여론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기술혁신(AI, 사이버, 우주, 빅데이터 등)은 군사력뿐 아니라 국가전략 자산이자 외교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은 안보 소비국에서 공급국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고 있다.

4. 한국 안보전략 연구의 방향과 목표

앞으로 한국 안보 연구는 다음 네 가지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첫째, 융합 연구 체계로 외교·군사·경제·과학을 결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증거 기반 정책화로 계량분석, 텍스트 마이닝 등 데이터 기반 연구를 확대하여 과학적·객관적 정책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신뢰 확보로 정책 수용성과 여론 관리 연구를 심화해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제 경쟁력 제고로 방산 수출, AI·우주 기술, 공급망 전략을 통해 안보 자산을 산업·외교와 연계하는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2008~2025년의 변화 속에서 한국 안보 연구는 전통적 안보에서 복합안보로, 대응 중심에서 선제적 전략 창출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거쳐 왔다. 앞으로의 목표는 학문과 정책이 긴밀히 결합된 증거 기반 복합안보 전략을 정립해, 불확실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I. 서 론

2008년 이후 국제정세는 금융위기, 아랍의 봄,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급격히 변동해 왔다. 이러한 국제적 격변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약화시키고 다극화·블록화·신냉전 구도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전통적·비전통적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세계 안보 환경은 심화된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한반도 또한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억제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선택의 압력을 받았다. 남북관계는 대화와 긴장이 교차하며 불안정한 전환기를 거쳐 왔고, 국내정치는 보수와 진보 정권의 교체 속에서 안보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시험받아왔다.

이러한 국제·지역·국내 환경의 변화는 한국 국방·안보 연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교와 군사 분야는 여전히 연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이버·우주·AI, 공급망과 경제안보,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 인식 등 신안보 의제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즉, 한국 국방·안보 연구는 단일 분야의 심화 연구를 넘어, 복합안보적 관점에서 학문과 정책을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축적된 다양한 학술·정책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안보 연구의 주요 특징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향후 국방·안보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국방·안보학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미래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는 KJSA, RINSA FORUM, 국방연구, 국제공동연구, 군사과학연구, 기초과제, 박사·석사 논문, 안보학술진흥사업, 안보현안분석, 정책과제 등 총 13종의 연구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연구는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의 7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분석 방법은 정량적 분포 파악과 함께 시기별·주제별 경향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15여 년간 한국 국방·안보 연구의 축적과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정책적으로는 향후 국방·안보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외교·군사 중심의 연구가 어떻게 경제, 과학, 사회 분야와 융합하며 복합안보 연구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안보학이 나아가야 할 학문적·정책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시대적 상황

2008년 이후 세계정세는 급변의 연속이었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내재한 다극적 경쟁 체제로 이동하였다. 2010년대 들어 아랍의 봄과 중동 분쟁,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화는 국제질서를 격동시켰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동북아를 새로운 전략적 각축장으로 만들었고, 이는 한국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020년대 초반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보건·경제·안보 전반에 충격을 가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통적 군사안보의 귀환을 알렸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양분화를 심화시켰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군사와 외교를 넘어 경제, 공급망, 첨단기술 패권으로 확장되었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문제도 새로운 안보 변수로 떠올랐다. 이처럼 국제 환경은 다극화와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한반도 정세 역시 국제적 변화와 궤를 같이하며 요동쳤다. 2008년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 불안을 증폭시켰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긴장을 극도로 높였다.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를 이어가다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협상은 교착되었고, 북한은 다시 군사적 도발을 확대하였다. 2020년대 들어서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되고, 북한의 전술핵과 ICBM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군사적 긴장은 구조적으로 고착되었다. 여기에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이 맞물리며 한반도는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정치적 상황 또한 안보 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강경한 대북 정책과 동맹 중심 전략이 주류를 이루었고,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협력 기조를 강조하며 남북·북미 정상외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강력한 억제전략과 한·미·일 협력 강화가 강조되면서 다시금 보수적 안보 기조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체가 반복되며 안보정책의 연속성이 취약해졌고,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합의를 약화시켰다. 이는 안보정책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되기보다 정권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구조적 제약을 형성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기는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불확실성의 증대, 대화와 긴장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전환기,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와 정책 불연속성이 맞물린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한국 안보 연구와 정책 모두에 복합적 도전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새로운 연구 의제와 정책 혁신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

Ⅲ. 연구 추세

1. 기초과제

가. 기초과제

1) 분석 개요

이 자료는 총 350편으로, 분야별로는 외교 214편(61.1%), 국방·군사 98편

(28.0%), 정치 13편(3.7%), 경제 11편(3.1%), 과학 8편(2.3%), 사회 3편(0.9%), 정보 3편(0.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 분야가 여전히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한반도 안보 연구의 중심축임을 보여주며, 국방·군사 역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전통 안보 영역의 양축을 형성한다. 정치·경제·과학·정보·사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신 안보·경제안보·사이버와 같은 융합 의제와 연결되며 점진적으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214	98	3	13	3	11	8	350
비율(%)	61.1	28	0.9	3.7	0.9	3.1	2.3	100

2) 분야별 연구동향

가) 외교

- 2008~2010년대 초반: 북핵·6자회담, 대미·대중 균형외교 등 전통적 외교안보 담론 연구가 주류이다.
- 2010년대 중후반: ‘아시아 재균형’과 미·중 경쟁, 평화체제 논의가 활발하다.
- 2020년대: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외교가 부상했다.

나) 국방 및 군사

- 2008~2010년대 초반: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주한미군 재배치 등 제도 변화를 분석했다.
- 2010년대 중후반: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지도발 대응, 맞춤형 억제, 합참 지휘구조 강화 연구가 많았다.
- 2020년대: 장거리 정밀타격, AI·사이버·우주 융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적용 등 첨단전력이 중심 연구이다.

다) 정보

- 2010년대: 사이버전·북한 해킹·전자전 등 비전통적 위협 논의가 시작되었다.
- 2020년대: AI·빅데이터 기반 ISR, 우주 정보자산, 사이버 억제 전략 등으로 확장되었다.

라) 정치

-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정권 교체기 대북정책 비교, 국회·여론과 안보정책 연계 연구 등이 있다.
- 2020년대: 정치적 양극화와 동맹정책 수용성, 의회·정당 기능 분석이 있다.

마) 경제

- 2010년대: 대북제재, 중국 의존도, FTA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중심이다.
- 2020년대: 공급망·반도체·배터리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과 경제안보 연구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바) 과학

- 2010년대: 무인체계·사이버전·AI 초기 적용 연구가 시작되었다.
- 2020년대: AI·빅데이터·우주·양자기술 결합 연구로 성장했다.

나. 정책과제

1) 분석 개요

이 자료는 총 111편으로, 외교 72편(64.9%), 국방·군사 33편(29.7%), 과학 3편(2.7%), 정치 2편(1.8%), 경제 1편(0.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 분야가 전체의 2/3 가까이를 차지하며, 한반도 안보 연구의 외교·국제정치 중심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국방·군사는 1/3 비중으로 꾸준히 누적되고 있으며, 과학·정치·경제는 소수이지만 새로운 의제 확장의 단초를 보여준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72	33	0	2	0	1	3	111
비율(%)	64.9	29.7	0	1.8	0	0.9	2.7	100

2) 분야별 연구 동향

가) 외교

- 2008~2010년대 초반: 신정부 외교안보 방향, 북핵·6자회담, 대미·대중 외교를 주로 다루었다.
- 2010년대 중후반: 미·중 전략경쟁, 동맹 관리, 평화체제·레짐 논의가 중심이다.
-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경제안보 중심 외교 연구로 확대되었다.

나) 국방 및 군사

- 2008~2010년대 초반: 국방정책서, 미사일방어, 국방개혁 등 제도 중심 연구이다.
- 2010년대 중후반: 전작권 전환, 합참 지휘구조, 국지도발 대응 전략 연구 등이 주류이다.
- 2020년대: 첨단 무기체계, 장거리 타격·AI·사이버·우주 안보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다) 과학

- 2010년대: 국방 R&D, 무인체계, 사이버전 연구가 등장했다.
- 2020년대: AI·우주기술과 안보의 융합적 접근으로 확장을 시도했다.

라) 정치

- 일부 연구에서 정책결정·의회·리더십의 대북정책 영향이 다루어졌다.
- 정치적 양극화, 국내 여론의 대외안보정책 수용성 문제에 주목했다.

마) 경제

- 소수 연구이나, 대북 제재와 남북경협, 최근에는 공급망과 기술안보로 확장되는 조짐이 보였다.

다. 국방연구

이 자료는 총 414편으로, 외교 236편(57.0%), 국방·군사 135편(32.6%), 정치 13편(3.1%), 경제 11편(2.7%), 정보 7편(1.7%), 사회 7편(1.7%), 과학 5편(1.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와 국방·군사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236	135	7	13	7	11	5	414
비율(%)	57	32.6	1.7	3.1	1.7	2.7	1.2	100

2008년 이후 「국방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한반도 안보 담론과 국방정책 변화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2008년은 학술진흥재단 평가에서 「국방연구」지가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승격된 해로, 저널 위상이 본격적으로 확립된 시점이다. 이 시기에는 민진의 「군대조직의 특성에 관한 연구」(2009)처럼 군 조직문화와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 이필중·최승모의 「국방분야 Top-down예산제도 도입 방안」(2008)처럼 국방재정 및 제도 개선을 다룬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최병순의 「군 지휘관의 리더십 역량에 관한 연구」(2009) 등 군 지휘구조와 리더십을 조명한 논문도 등장하였다. 같은 시기 박영준의 「국제 핵질서와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정책」(2010)은 동북아 비확산 체제와 일본의 역할을 분석하며 국제정치적 함의를 제시했다.

2010년대에는 전통 안보 의제와 신흥 안보 의제가 교차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윤현근의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근원과 함의」(2010), 전제국의 「국방문민화 과정의 재조명: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2010)는 지역질서와 제도적 변화를 탐구했다. 이어 하도형의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 해권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2012), 기세찬의 「中國黨-軍關係에 관한 一考察」(2013)은 중국의 전략문화와 군-당 관계를 분석하며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변화를 설명했다. 또한 권용수의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 분석 및 평가」(2014), 부형욱의 「사이버 안보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2013)은 첨단 기술과 비전통적 위협(사이

버·미사일)을 다루며 연구영역을 확장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예비전력과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다룬 논문이 부각되었다. 최병욱·박창희의 「예비전력 정예화의 방향과 과제」(2015)는 전력구조와 안보전략의 재편을 논의했다. 또한 박원곤·설인효의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2017)은 미 행정부 변화가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2018~2019년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지역정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어졌다. 한용섭의 「북한 핵위협과 미·러·중 사이의 미사일방어(MD)와 전략적 안정성 논쟁」(2018), 박영준의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2018), 손한별의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과 선택적 비확산정책」(2019)은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조명했다.

2020년 이후에는 신안보 의제가 뚜렷하게 부상했다. 박민형·김태현·김혜원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국방의 역할: COVID-19 사태 사례를 중심으로」(2020)는 전염병 대응에서 국방의 임무를 다루었고, 배학영의 「우주전장시대 해군력 발전방향」(2021)은 우주·해양 영역에서의 새로운 작전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기세찬의 「사이버 억제에 관한 연구」(2022)는 사이버 공간 억제전략을 분석했으며, 설인효·배학영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2023)는 유럽 전쟁 경험을 동아시아 안보환경과 연결지었다.

종합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방연구」는 초기에는 제도·조직·재정 중심 연구에서 출발해, 2010년대에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중국 전략·북핵·군사전략으로 주제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사이버·우주·감염병·전쟁양상의 국제적 함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로 진화하였다. 이처럼 시기별로 주제를 달리하면서도 저자들의 연구는 한국 국방정책과 한반도 안보 논의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해왔다.

1) 분야별 연구 동향

가) 외교

- 2008~2010년대 초반: 북핵·6자회담, 평화체제 논의, 미·중 균형외교가

중심이다.

- 2010년대 중후반: 아시아 재균형, 미·중 경쟁, 정상외교 및 다자안보 논의로 확대되었다.
-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기술패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외교가 부상했다.

나) 국방 및 군사

- 2008~2010년대 초반: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국방예산제도 등 제도·정책 연구가 주류이다.
- 2010년대 중후반: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지도발 대응, 합참 중심 지휘구조 강화, 억제전략 연구가 강화되었다.
- 2020년대: 첨단전력(AI·사이버·우주), 장거리 정밀타격, 지속보급 등 신개념 작전연구로 확대되었다.

다) 정보

- 2010년대: 사이버전, 북한 해킹, 전자전 등 비전통 위협이 논의되었다.
- 2020년대: AI·빅데이터 기반 ISR, 우주·위성 정보자산, 사이버 억제 전략으로 확장되었다.

라) 정치

- 민주화 이후 제도 변화, 정책결정 구조와 대북정책의 상호작용, 국회·정당의 역할 분석 연구가 있었다.
- 최근에는 정치 양극화와 동맹정책 국내 수용성 논의가 부각되었다.

마) 경제

- 2010년대: 대북제재·남북경협 효과, 중국 의존도 문제 연구 등이 있다.
- 2020년대: 공급망·반도체·배터리 중심의 경제안보와 기술패권 경쟁 분석 연구 등이 있다.

바) 과학·사회

- 과학: 국방 R&D, 무인체계, 사이버·AI·우주 기술 연구 초기 단계이다.
- 사회: 여론과 안보정책, 사회적 수용성, 안보 인식 연구 등이 있다.

라. KJSA

1) 분석 개요

이 자료는 총 185편으로 외교 68편(36.8%), 국방·군사 87편(47.0%), 과학 6편(3.2%), 경제 4편(2.2%), 정치 4편(2.2%), 사회 3편(1.6%), 정보 0편, 기타 13편(7.0%)으로 나타났다. 외교와 국방·군사가 합쳐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한반도 안보 연구가 전통적 외교·군사 영역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기타	계
편수	68	87	0	4	3	4	6	13	185
비율(%)	36.8	47	0	2.2	1.6	2.2	3.2	7	100

2) 분야별 연구동향

가) 외교

- 2008~2010년대 초반: 북핵 위기, 6자회담, 다자외교, 대미·대중 균형 전략, 남북 정상회담 협력담론 확산, 2006년 핵실험 이후 위기관리·국제레짐 강화 연구가 부각되었다.
- 2010년대 중후반: 미·중 경쟁 심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등의 연구 등이 있다.
-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함께 경제안보 외교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나) 국방 및 군사

- 2008~2010년대 초반: 억제전략, 미사일 방어(MD), 전쟁 시나리오 연구, 국방개혁 2020,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 연구 등이 있다.
- 2010년대 중후반: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지도발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 합참 지휘구조 강화, 국방개혁 등의 연구가 있다.
-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장거리 정밀타격, AI·사이버·우주, 방산 수출 전략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

다) 정치

- 민주화와 안보정책 결정과정, 정권 교체기 대북정책 비교, 국회의 역할과 여론, 정치적 양극화와 안보 수용성 연구가 주류이다.

라) 사회

- 민주화 이후 안보 담론의 사회적 수용, 언론·여론과 대북정책 인식, 최근에는 사회갈등·양극화와 안보정책 정당성 문제로 확장되었다.

마) 경제

- 2008~2010년대 초반: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효과, 이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리스크를 분석했다.
- 2010년대 중후반: 대북제재 강화, 중국 경제 의존도, FTA 네트워크 연구 등이 있다.
- 2020년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중심의 경제안보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바) 과학

- 2000년대 후반: 정보화 군대, 위성, R&D 연구이다.
- 2010년대 중후반: 사이버전, 무인체계, AI 활용 연구이다.
- 2020년대: AI·빅데이터·양자·우주로 확장, 안보 연구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

마. 안보현안분석

1) 분석 개요

이 자료는 총 383편으로, 외교 268편(70.0%), 국방·군사 70편(18.3%), 정치 18편(4.7%), 경제 12편(3.1%), 과학 8편(2.1%), 정보 7편(1.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한반도 안보 현안이 주로 국제정치 및 외교적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국방·군사는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경제·과학·정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근 신안보 의제와 연결되며 점차 확장되는 추세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268	70	7	18	3	12	8	383
비율(%)	70	18.3	1.8	4.7	0.9	3.1	2.1	100

2) 분야별 연구 동향

가) 외교

- 2008~2010년대 초반: 북한 신년사·북핵·6자회담, 한·미 정상회담 분석 등 전통 의제 중심의 연구이다.
- 2010년대 중후반: 미·중 전략경쟁, 아시아 재균형, 다자안보체제 논의 등이 다루어졌다.
-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심화, 공급망·경제안보·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한 외교담론으로 확장되었다.

나) 국방 및 군사

- 2008~2010년대 초반: 국방개혁, 미사일 방어, 국방예산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연구가 많았다.
- 2010년대 중후반: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지도발 대응 전략, 전작권 전환, 합참 지휘구조 강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 2020년대: 첨단전력(AI·사이버·우주), 장거리 정밀타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반영한 작전·방산 등의 연구로 확대되었다.

다) 정치

- 민주화 이후 안보정책의 국내 수용성, 정당·국회의 역할, 리더십과 대북정책의 연계가 중심이다.
- 최근에는 정치 양극화, 여론·정당 경쟁 속 동맹정책 지속성 문제가 주목 받았다.

라) 경제

- 2000~2010년대: 대북제재·남북경협 효과, 개성공단·금강산 사례 등이 있다.

- 2020년대: 공급망·반도체·배터리 중심의 경제안보, 기술패권 경쟁 논의로 확대되었다.

마) 과학·정보

- 과학: 국방 R&D, 무인기·정찰위성, 사이버전·AI 활용 등이 있다.
- 정보: 북한 해킹·사이버위협, 전자전, AI·빅데이터 기반 ISR 연구로 확산되었다.

바. RINSA FORUM

1) 분석 개요

이 자료는 총 191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교 106편(55.5%), 국방·군사 84편(44.0%), 경제 1편(0.5%)으로 나타났다. 외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국방·군사 분야도 40% 이상을 차지해 두 축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RINSA FORUM이 단순한 외교 전문지가 아니라, 외교와 국방을 아우르는 안보 연구의 전문지임을 보여준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106	84	0	0	0	1	0	191
비율(%)	55.5	44	0	0	0	0.5	0	100

2) 분야별 연구 동향

가) 외교

- 2008~2010년대 초반: 한·미 동맹 재조정, 북핵·6자회담, 미·중·일·러 관계 등이 분석되었다.
- 2010년대 중후반: 미·중 경쟁 심화, 평화체제 논의, 동맹 관리, 다자 외교 강화 등의 주류였다.
-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전략, 글로벌 공급망·경제안보 의제로 확대되었다.

나) 국방 및 군사

- 2008~2010년대 초반: 위기관리, 전쟁 억제, 미사일 방어, 군사동맹 전략이 중심이다.
- 2010년대 중후반: 북한 핵·미사일 위협, 군사적 충돌 가능성, 억제 전략, 전쟁 시나리오 연구 등이 있었다.
-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첨단무기·미사일·방위비 문제, 미·중 갈등 속 군사전략 연구로 확산되었다.

다) 경제

- 극소수 논문에서 대북제재·남북경협, 공급망·기술패권 관련 논의가 다루어졌다.

사. 군사과학연구

1) 분석 개요

이 자료는 총 194편으로, 모든 연구가 과학 분야(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자료가 전통적인 외교·군사·정치적 논의보다는 국방과학기술·무기체계·첨단기술 응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0	0	0	0	0	0	194	194
비율(%)	0	0	0	0	0	0	100	100

정량적으로 보아, 본 연구 집합은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집약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정밀타격 무기, 사이버·우주기술, 방산 혁신 등 신안보 의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2) 분야별 연구동향

가) 첨단 무기체계

- 무인기, 드론, 정밀타격, 로봇 전투체계 등 신개념 무기 연구가 다수

포함되었다.

- 특히 K-방산 수출 성과와 연계하여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 전략 분석이 활발하다.

나) 인공지능(AI) 및 사이버·네트워크 기술

- AI 기반 지휘·통제,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반 위협 탐지, AI-사이버 융합전략이 주요 연구 주제가 되었다.

다) 우주·위성 기술

- 정찰위성, GPS·항법 시스템, 우주감시 체계 연구가 포함되었다.
- 특히 우주 군사화와 민·군 겸용 기술 논의가 활발하며, 향후 전략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라) 국방 R&D 및 기술혁신

- 방산 연구개발 투자, 첨단기술 도입, 국방산업 생태계 혁신 관련 논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 R&D 투자 효율성, 국제 공동연구, 기술동맹 등이 연구의 주요 키워드로 확인된다.

아. 범국민안보의식조사

1) 분석 개요

이 자료는 국민의 안보 인식·동맹 선호·위협 인식 등을 다룬 연구 5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 분야가 33편으로 다수(63.5%)를 차지했고, 국방·군사 13편(25%)가 사회 6편(11.5%)이 뒤를 이었다. 이는 여론·인식 연구임에도 분석 프레임이 대외관계·동맹·국제정치 변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33	13	0	0	6	0	0	52

비율(%)	63.5	25	0	0	11.5	0	0	100
-------	------	----	---	---	------	---	---	-----

정량적으로 보면, ‘국민 인식’이라는 주제가 동맹·대북·국제정세와 결합되면서 외교적 범주로 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 국방·군사는 국방정책, 징병·예비군·훈련 수용성 등 직접적 군사 이슈를 다룬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 분야는 여론, 사회적 신뢰, 정책 수용성을 다룬 소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2) 분야별 연구동향

가) 외교

- 동맹·대북 인식의 변동: 한미동맹 신뢰, 확장억제에 대한 기대, 중국·일본에 대한 태도 등의 대외 이미지와 위협 인식 변수가 반복적으로 측정·분석되었다.
- 국제정세 충격 반응: 북핵·미사일 국면, 미·중 경쟁, 러·우 전쟁 등 사건 이후 정책 선호·안보 불안의 단기 변화 추적 연구가 다수 확인된다.
- 경제안보 인식 연계: 공급망·기술패권 이슈가 등장한 이후, 외교-경제 결합 인식(대중 의존·반도체·수출안보)이 점진적으로 분석 프레임에 포함된다.

나) 국방 및 군사

- 징병·예비군·훈련 인식: 병역제도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부담·효용·공정성 인식이 핵심 주제였다.
- 억제·방산 수용성(소수): 확장억제 신뢰, 첨단전력 도입·방산 수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다) 사회

- 정책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 안보정책(훈련·방산·예산)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과 정부·군·언론에 대한 신뢰가 안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뤄진다.
- 세대·이념·지역 격차: 세대/이념 성향에 따른 위협 인식 차이, 동맹·

대북정책 선호의 분극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관찰된다.

- 정보·정치·경제·과학 분야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0편), 외교·사회 프레임에 흡수된 양상이다.

자. 안보학술진흥사업

1) 분석 개요

이 자료는 총 140편으로, 외교 56편(40.0%)와 국방·군사 45편(32.1%) 분야가 연구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치(5.7%), 사회(8.6%), 경제(8.6%) 분야가 뒤를 잇는다. 정보(1.4%)는 소수에 불과하며, 과학 분야(0%)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기타	계
편수	56	45	2	8	12	12	0	5	140
비율(%)	40	32.1	1.4	5.7	8.6	8.6	0	3.6	100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업은 전통적으로 외교와 군사 중심이지만, 일정 수준에서 사회·경제·정치 영역의 연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집합에서는 사회·경제 분야의 비중이 각각 10% 내외를 차지하여, 다른 자료보다 폭넓은 안보 연구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2) 분야별 연구동향

가) 외교

- 주된 논의는 한미동맹, 대북 외교, 다자외교 및 국제레짐 참여에 집중되었다.
- 최근 연구에서는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안보·공급망 외교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 특히 외교 연구는 전통적인 북핵·한반도 평화체제에서 글로벌 차원의 경제·기술 동맹까지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나) 국방 및 군사

- 억제전략, 전작권 전환, 군사력 건설, 국방개혁이 주요 주제였다.
-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지도발 대응, AI·사이버·우주 전력, 방산 수출이 새로운 연구 흐름으로 추가되었다.
- 군사 연구는 실천적 정책과 직결되며, 전력구조·예산·연합작전 체계 등 제도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다) 정보

- 소수지만, 사이버 보안, 감시·정찰(ISR)과 관련한 주제가 포함되었다.
- 기술적 기반의 정보 연구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보 공유·협력 체제를 다룬 경향이 강하다.

라) 정치

- 정권 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국회의 역할, 여론과 정책 결정 과정이 주요 논점이었다.
- 특히 정치 연구는 안보 정책의 제도적·국내정치적 수용성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었다.

마) 사회

- 국민 안보 인식, 민군관계, 사회적 신뢰와 정책 수용성이 핵심 주제였다.
- 세대·이념·지역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포함되어, 안보정책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바) 경제

- 대북제재 효과, 남북경협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기술패권 연구가 주를 이룬다.
-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중심의 경제안보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사) 과학

- 과학기술 기반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 기타

- 분류가 모호한 일부 연구는 환경·보건·인권 안보 등 신안보 이슈를

다루었다.

- 이는 연구가 점차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 국제공동연구

1) 분석 개요

이 자료는 총 48편으로, 외교 21편(43.8%), 국방·군사 15편(31.3%), 과학 6편(12.5%), 경제 2편(4.2%), 사회 1편(2.1%), 기타 3편(6.3%)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와 정보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기타	계
편수	21	15	0	0	1	2	6	3	48
비율(%)	43.8	31.3	0	0	2.1	4.2	12.5	6.3	100

정량적으로 보면, 외교와 국방·군사가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며, 한반도 안보 연구가 전통적 안보 프레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과학 분야의 12.5%는 최근 기술패권, AI·사이버·우주 의제의 확대를 반영하며, 경제·사회 연구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2) 분야별 연구동향

가) 외교

- 2008~2010년대 초반: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다자안보체제 참여 논의가 주류이다.
- 2010년대 중후반: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아시아 재균형 전략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 연구가 늘어났다.
-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술·경제와 연계된 경제안보 외교가 중요한 연구 의제로 부상하였다.

나) 국방 및 군사

- 2008~2010년대 초반: 억제전략, 전작권, MD와 같은 전통적 안보 의제가 주류이다.
- 2010년대 중후반: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지도발 대응과 맞춤형 억제전략 연구가 강화되었다.
- 2020년대: 첨단 무기체계, 장거리 정밀타격, AI·사이버·우주와 연계된 새로운 국방 전략, 그리고 방산 수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다) 사회

- 소수 연구이지만, 안보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및 여론·시민사회의 반응을 분석하며, 안보 정책의 정당성과 민주적 기반을 논의하는 데 기여하였다.

라) 경제

- 일부 연구에서 대북제재 효과와 남북경협에의 경제적 리스크를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안보 의제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 과학

- 국방 R&D, 무인체계, 위성·우주 개발, AI·사이버전과 같은 첨단 기술의 안보적 활용을 다룬 연구가 포함되었다.
- 특히 최근 들어 AI·빅데이터·우주 기술이 국방 및 정보 분야와 결합되며 연구의 싹틔운 영역으로 부상하였다.

바) 기타

- 일부 연구는 기존 분류체계에 명확히 속하지 않으며, 복합안보·환경안보 등 비전통적 주제를 다루었다. 이는 학제 간 연구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카. 안보과정 논문·정책보고서

1) 분석 개요

이번 분석은 총 3,229편의 안보과정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교 2,586편(80.1%)와 국방·군사 410편(12.7%)가 연구의 양대 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외교 분야 중에서 동맹, 억제, 군비통제, 국제 안보구조 관련 연구를 군사적 성격에 따라 국방·군사로 분류하였다. 정량적으로 보면, 여전히 외교 연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국방·군사 연구도 410편(12.7%)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외교 중심에서 벗어나 군사 전략 및 안보정책의 비중이 강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2,586	410	20	77	51	28	57	3,229
비율(%)	80.1	12.7	0.6	2.4	1.6	0.9	1.8	100

2) 분야별 연구동향

가) 외교

- 대북 외교, 미·중 경쟁, 다자안보체제 연구가 핵심을 차지한다.
- 최근에는 경제안보, 기술동맹, 공급망 외교가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였다.
- 외교 연구의 다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루지만, 전략 환경 연구 중 상당 부분은 군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나) 국방 및 군사

- 억제전략, 전작권, 한미연합훈련, 군비통제 등 안보 핵심 의제들이 포함되었다.
- 북핵 대응, 맞춤형 억제, 미사일 방어, 방산 수출과 같은 정책 지향적 연구가 활발하다.
- 확장 재분류로 군사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어, 군사 전략과 외교·정치와의 교차점이 더욱 뚜렷해졌다.

다) 정보

- 사이버전, ISR, 해킹·전자전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 대응이 중심이다. 양적으로는 미미하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이다.

라) 정치

- 정권 교체와 대북정책 차이, 의회와 정책결정 과정이 주요 주제다.
- 안보정책의 국내 정치적 수용성을 다루는 연구들이 포함된다.

마) 사회

- 여론, 민군관계, 국민 인식과 신뢰가 중심이다.
- 세대·이념별 안보 인식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확인된다.

바) 경제

- 대북제재, 남북경협 리스크, 경제안보를 다룬다.
-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중심 연구가 등장했다.

사) 과학

- AI, 사이버, 드론, 우주기술을 다룬 연구가 포함된다.
- 국방과학기술과 안보정책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

타. 박사과정 논문

1) 분석 개요

총 75편의 논문이 검토되었으며, 외교 분야가 40편(5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방·군사 분야는 20편(26.7%)으로 두 번째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학(12.0%), 정보(2.7%), 정치(2.7%), 사회(1.3%), 경제(1.3%) 분야가 뒤를 잇는다. 외교와 국방·군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과학·정보 분야의 의미 있는 비중이 확인된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40	20	2	2	1	1	9	75
비율(%)	53.3	26.7	2.7	2.7	1.3	1.3	12	100

2) 분야별 연구동향

가) 외교

- 북핵·6자회담, 한미동맹, 대중·대일 외교 등 전통적 주제가 중심이다.
- 최근에는 미·중 전략경쟁, 경제안보, 공급망 외교 등으로 주제가 확대되었다.
- 한반도 특수성과 국제정세를 연결한 분석이 많다.

나) 국방 및 군사

- 확장억제, 전작권, 군비통제, 주한미군, 군사외교 등 주요 의제가 포함된다.
- 핵·미사일 위협 대응, 억제전략, 연합작전,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다룬 연구가 다수이다.
- 전략·작전 중심에서 첨단기술 적용까지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 과학

- 무기체계, 드론, 사이버전, 우주기술 등 첨단 국방과학 연구가 다수이다.
- AI·빅데이터·양자기술과 같은 신형 기술과의 융합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라) 정보

- 초기에는 첩보·ISR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이버·AI 기반 정보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마) 정치

- 정권 교체와 안보정책 변화, 의회·여론의 역할 분석이 주를 이룬다.
- 정치적 양극화와 안보정책 수용성 문제가 다루어졌다.

바) 사회

- 국민 인식, 사회적 신뢰, 정책 수용성 관련 소수 연구가 확인된다.

사) 경제

- 대북제재, 남북경협 연구가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공급망·전략산업·경제안보로 확대중이다.

파. 석사과정 논문

1) 분석 개요

석사과정 논문은 총 2,274편으로, 외교 1,374편(60.4%), 국방·군사 480편(21.1%), 과학 165편(7.3%), 정치 130편(5.7%), 경제 53편(2.3%), 정보 53편(2.3%), 사회 19편(0.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외교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핵심 연구 분야로 자리잡았으며, 국방·군사 역시 20% 이상을 기록하여 전통적 안보 연구의 큰 축을 형성했다. 과학과 정보는 10%에 가까운 비중으로 나타나, 기술·사이버·AI·우주 등 신안보 의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보 담론의 국내 수용성·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분	외교	국방·군사	정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계
편수	1,374	480	53	130	19	53	165	1,250
비율(%)	60.4	21.1	2.3	5.7	0.8	2.3	7.3	100

2) 분야별 연구 동향

가) 외교

- 2008~2010년대 초반: 북핵, 6자회담, 한·미 및 한·중 관계 분석이 활발. 탈냉전기 외교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다자안보체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 2010년대 중후반: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함께 한국의 외교적 균형전략, 평화체제 구상, 정상외교와 다자협력 담론이 중심이고, 한·미 동맹의 재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 2020년대: 우크라이나전쟁, 인도·태평양 전략, 공급망 및 경제안보 문제가 외교 주제로 본격화되었고, 외교 연구가 기존의 전통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분야와 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 국방 및 군사

- 2008~2010년대 초반: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억제전략, 미사일 방어

등 제도적·전략적 주제가 주류이다.

- 2010년대 중후반: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지도발 대응전략, 합참 지휘구조 개편, 맞춤형 억제 개념이 주요 연구주제로 자리 잡았다.
- 2020년대: 장거리 정밀타격, 지속보급,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첨단무기(AI, 사이버,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두드러진다. 연구가 단순 억제 전략에서 첨단 전력 운용으로 확장되었다.

다) 과학

- 2008~2010년대 초반: 위성·무인기·국방 R&D 연구가 중심이다.
- 2010년대 중후반: 사이버전, AI 초기 활용, 국방 네트워크·정보화 연구가 점차 늘어났다.
- 2020년대: 빅데이터, 양자기술, 우주, 첨단 무기체계 등 새로운 과학 기술이 안보와 결합. 특히 AI 기반 작전 시뮬레이션, 우주 전략 자산, 사이버 방어 체계 연구가 활발하다.

라) 정치

- 정권 교체기 대북정책 비교, 국회와 여론의 역할, 안보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 최근에는 정치적 양극화, 동맹정책에 대한 국내적 수용성, 정당 및 의회의 정책결정 기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마) 경제

- 2000~2010년대: 대북제재·남북경협의 효과와 한계, 중국 경제 의존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2020년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의 공급망·기술패권 경쟁, 경제안보와 국가전략의 결합 등의 연구가 있다.

바) 정보

- 2000~2010년대: 첩보수집·연합 정보자산 활용이 논의되었다.
- 2020년대: 북한 사이버 공격·해킹 사례 연구, AI 기반 ISR, 사이버 억제 전략 연구로 확장되었다.

사) 사회

- 여론, 사회적 수용성, 안보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 분석이 있다.

IV. 이론적·정책적 함의

1. 전체 흐름과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연구자료(KJSA, RINSA Forum, 국방연구, 국제공동연구, 군사과학연구, 기초과제, 박사·석사 과정 논문, 안보과정 정책보고서, 안보학술진흥사업, 안보현안분석, 정책과제)를 종합해 보면, 안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외교와 군사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미·중 경쟁, 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등 전통적 안보 이슈가 중심을 이루었고, 실제로 외교로 분류된 많은 연구가 군사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 안보 연구가 국제정치와 군사 전략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신안보 영역의 확대이다. 사이버전, 인공지능, 드론, 우주 기술, 경제안보와 공급망 문제 같은 새로운 주제들이 최근 연구에서 빠르게 늘어났다. 예전에는 군사·외교 연구에 비해 주변적이었으나, 지금은 미래 안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셋째, 정치·사회·여론 연구의 필요성이다. 비록 양적으로는 적지만, 여론과 사회적 수용성은 안보정책 실행의 성패를 좌우한다. 예컨대 억제전략이나 전력 증강도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시사점

연구를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외교와 군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동맹, 억제, 연합작전, 군비통제 같은 주제는 외교와 군사를 나눠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두 분야를 통합

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둘째, 사건이 연구를 촉발한다는 점이다. 북한 핵실험, 국지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연구량이 급증했다. 이는 한국 안보 연구가 현실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안보 영역의 중요성 확대이다. 과학기술, 경제안보, 사이버·우주 영역은 단순 보조적 주제가 아니라 안보 전체를 흐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수용성의 중요성이다. 어떤 전략이 아무리 정교해도 국내 여론과 정치적 조건을 무시하면 실행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안보 연구는 사회·정치적 맥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정책적 시사점

정책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외교-군사의 통합 운영으로 동맹 관리, 확장억제, 전작권 전환, 군비통제 등은 외교와 군사적 맥락을 함께 다뤄야 한다. 두 영역이 따로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첨단기술 기반 억제력 강화이다. 정밀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사이버·우주 전력 같은 첨단 역량은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경제안보와 방산의 전략화로 반도체, 배터리 같은 전략산업과 방산 수출을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연결된 전략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수용성 확보로 안보정책은 국민의 지지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하다.

4. 한국 안보전략 연구의 향후 방향과 목표

앞으로 한국 안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통합적 연구이다. 외교·군사·과학·경제·사회 연구가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복합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둘째, 기술 중심 연구 강화이다. AI, 사이버, 우주, 드론 같은 신기술을 안보전략의 핵심 요소로 연구해야 한다. 셋째, 정치·사회 연구 확대이다. 국민 인식과 사회적 수용성은 정책 성공의 전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 연계성 강화이다. 학술적 성과가 단순 논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부의 안보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V. 결 론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 그리고 한국 안보 연구의 흐름을 종합하면, 이 시기를 “다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금융위기, 아랍의 봄,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기존 질서를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블록화된 질서로 이동했고, 군사·경제·과학기술이 동시에 안보를 규정하는 복합안보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한반도 정세 역시 급변했다. 2008-2017년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남북관계 단절이 두드러졌고, 2018-2019년에는 정상외교를 통한 평화의 창이 열렸으나 합의 실패로 좌절되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며 대화 단절과 군사적 긴장이 구조화되었고,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안보 연구도 변화를 거듭해왔다. 외교와 국방·군사가 여전히 핵심 축을 이루었지만, 점차 경제안보, 과학기술, 사회적 수용성, 여론·정치 제도의 영향 등으로 연구가 확장되었다. 특히 2020년대에는 AI·사이버·우주·반도체 등 신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의제로 부상하면서, 국방과학 연구와 경제·과학 분야 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커졌다. 반면, 사회·정치 연구는 비중은 작지만 정책 수용성과 정당성 확보라는 필수 요소를 제공하며 안보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뒷

받침했다.

종합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국방안보 연구는 외교·군사 중심의 전통적 틀에서 출발해, 경제·과학·사회로 확장하며 복합안보 연구로 진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들은 억제전략, 확장억제, 동맹 운영, 경제안보, 첨단기술, 사회적 수용성 등 정책적 과제를 다루며 학문과 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한국 안보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군사와 외교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신냉전 구도 속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경제 기반 안보 역량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사회적 수용성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학계-정책 현장의 피드백 구조 제도화를 통해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결국, 한국 안보 연구는 변화무쌍한 국제·지역 환경 속에서 “현실적 위협 대응 + 미래 전략 준비”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대비가 아니라, 외교·경제·과학·사회가 융합된 종합적 안보 전략을 요구하며, 한국 안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바로 이러한 복합안보 시대에 걸맞은 증거 기반·융합형 연구 생태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용수.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 분석 및 평가.” 『국방연구』 제57권 2호 (2014).
- 기세찬. “中國黨-軍關係에 관한 一考察.” 『국방연구』 제55권 4호 (2013).
- 기세찬. “사이버 억제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65권 3호 (2022).
- 김태현·김혜원, 박민형.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국방의 역할: COVID-19 사태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3권 2호 (2020).
- 민진. “군대조직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51권 3호 (2009).
- 박영준. “국제 핵질서와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정책” 『국방연구』 제52권 3호(2010).
-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국방연구』 제61권 3호 (2018).
- 박원곤·설인효.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국방연구』 제60권 4호 (2017).
- 배학영. “우주전장시대 해군력 발전방향.” 『국방연구』 제64권 2호 (2021).
- 설인효·배학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래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66권 2호 (2023).
- 손한별.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과 선택적 비확산정책: '전략적 균형'을 위한 수평적 핵확산.” 『국방연구』 제62권 1호 (2019).
- 최병순. “군 지휘관의 리더십 역량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52권 2호 (2009).
- 최병욱·박창희. “예비전력 정예화의 방향과 과제.” 『국방연구』 제57권 4호 (2015).
- 전제국. “국방문민화 과정의 재조명: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3권 2호 (2010).
- 하도형. “중국 해양전략의 인식적 기반: 해권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5권 3호 (2012).
- 한용섭. “북한 핵위협과 미국·러시아·중국 사이의 미사일방어(MD)와 전략적 안정성 논쟁.” 『국방연구』 제61권 1호 (2018).

윤현근.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근원과 함의.” 『국방연구』 제52권 3호 (2010).

이필중·최승모. “국방분야 Top-down 예산제도 도입 방안.” 『국방연구』 제51권 1호 (2008).

부형욱. “사이버 안보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국방 사이버 정책 정립을 위한 시론적 논의.” 『국방연구』 제56권 2호 (2013).

제 6 장

결 론

결 론

국방대학교는 창설된 이래 발전을 지속해 왔다. 유례없이 파괴적인 전쟁을 겪은 뒤 유사한 비극을 방지하려는 시대적 열망이 학교를 잉태하게 하였던 만큼 학교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을 모으고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하였고, 학교의 교수들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이해하고 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과 정부의 인재들을 교육했다. 학교는 더불어 국가의 안보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에 정책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관련한 학문 체계를 발전시켰다. 국방대학교의 또 다른 역할은 한국 사회에 안보 관련 이론과 지식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를 겪어오는 동안 국방대학교는 변함없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초창기 국방대학교는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를 지향하였다. 국방대학교의 학생들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국방 전 분야를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갔다. 학교는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개인 논문을 작성하게 하여 학생들이 숙성된 견해를 갖도록 하였고 해외 시찰을 포함한 현장 학습을 통해 현실에 뿌리내린 사상을 갖추도록 하여 선진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교육을 추구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학교는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내부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교육에 활용하며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학교의 교수들은 데탕트와 주한 미군의 철수와 같은 큰 변혁을 겪으며 냉정한 분석과 조언을 한국 사회에 제공하였다. 1980년대 신냉전이 도래하였을 때 학교는 새로운 안보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방대학교는 문민정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1980년대 말 전환기적 안보 환경의 변화로 냉전적이고 군사 안보 위주의 안보 논리가 설득력을 잃었고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많은 민간 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군의 비중이 달라지고 국방력의 질적 증가가 일어나는 한편, 북방외교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발생하여 다른 관점과 학문적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학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해 왔

다.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안보 문제로 남아 있는바 학교의 교수들은 초창기부터 이 문제에 천착해 왔다. 국방대학교의 변화는 21세기 들어 계속되고 있다. 학교는 테러리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분쟁이 세계 안보에 미친 영향에 따라 새로운 군사 변혁의 당위성을 호소하였다.

국방대학교는 70년 동안 지속과 변화 두 가지를 지속해 왔다. 본질적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를 위한 제도와 방식을 계속 바꾸어왔다. 학교는 창설 초기와 비교하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종류의 출간물을 간행하고 있다. 학교의 연구 예산은 비록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지만 안보문제연구소가 만들어진 시기의 그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도에 발생한 국방대학원에서 국방대학교로의 변화는 제도적 측면과 규모에서 획기적이었다.

국방대학교의 궤적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학교가 교수들로 하여금 당대의 안보 난제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는 연구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문제연구소의 기초과제와 『안보문제연구』는 이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21세기 들어 학교가 안보 정책 연구를 폭넓은 군사와 전쟁 연구에 자유롭게 접목하지 못하고 학교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린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 사회가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 연구에 매몰되어 심층적인 안보, 국방 및 군사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역시 동일한 문제에 묶여 있다. 학교의 연구가 앞으로 외교와 군사를 결합하고 경제와 과학을 포괄한 복합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신안보 영역의 연구를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설 이후 국방대학교가 한국 사회에 지닌 영향력은 달라졌다. 국가적 기대를 받으며 경쟁자가 없던 환경과 다양한 안보 교육기관과 연구소가 공존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일률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안보과정에 입교하던 학생들의 동정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의 유시가 『국방연구』에 실리는 일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

한 이후 이전과 동일한 지명도를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일 수 있다. 한편, 학교가 변화의 과정 가운데 나름대로 발전시켜가며 이루어 놓은 성취도 많다. 분명히 국방대학교는 창립 초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학교로 변모하였다.

오늘날 학교의 구성원들이 답변해야 하는 몇 가지 질문이 존재한다. 국방대학교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얼마나 큰 영향력 지수를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학교의 정책과제 보고서는 정부 부처의 필독서가 되며 참고가 되고 있는가? 학교가 발간하는 기초과제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안보 문제와 국방 문제를 다루는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가? 학교가 발간하는 번역서는 과연 한국 사회의 안보 분야 수요를 채우며 새로운 학문적 생태계를 생성해 내는가? 그리고 국방대학교의 교수들이 국가안보 정책에 무게 있는 화두를 던지고 주도하는가?

국방대학교가 걸어온 국방안보연구 70년을 돌아볼 때 학교의 정체성과 내적 효율성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었음을 관찰하게 된다. 학교가 분명한 국방안보연구 기관으로 고유한 역할을 다하던 시기 학교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이 학생과 정부 및 한국 사회를 상대로 한 기여에서 고도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학교 내에 교수들의 연구 역량이 결집하고 축적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의 학술지와 보고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학교 안에 국방과 안보 분야 정책 연구를 위한 요람의 기능이 존재하였다. 이 요람에서 산출된 주옥같은 연구들이 한국 사회의 안보 현안과 군사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국방대학교가 걸어왔던 70년의 자취를 돌아볼 일이다. 그리고 오늘 학교가 지닌 정체성을 돌아보고 내적 효율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한국 국방안보연구 70년 검토와 평가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 M25111025



신고유형
물건형/태러범·보안사고(위반)
외국물/방산 스파이·군사기밀유출

상금내역
간첩선·간첩: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언제 어디서나 국방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cc.mil.kr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